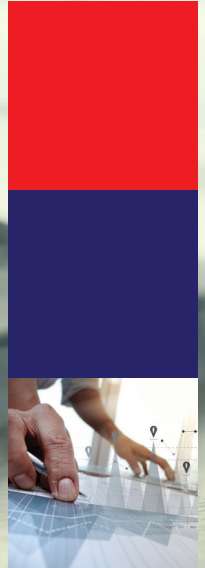




연구보고서 15-10



#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이장규  
김부용  
최필수  
나수엽  
김영선  
조고운  
이효진

#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이장규 · 김부용 · 최필수 · 나수엽  
김영선 · 조고운 · 이효진

## ■ 서 언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2007년까지는 투자와 수출에 의존한 고속 성장을 달성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을 비롯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에 힘입어 2011년까지는 9%를 초과하는 경제성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의 고속성장이 과연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회의론이 출현하였습니다. 중국은 다른 개도국 및 선진국, 그리고 한국 및 일본의 고도성장기와 비교해도 소비율이 지나치게 낮고 투자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인프라, 제조업 및 부동산 부문 등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철강, 시멘트 등 일부 업종에서의 생산과잉과 부동산 경기 과열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시키는, 이른바 내수 위주의 경제성장방식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사회보장 확대, 서비스업의 진흥 등 다양한 소비촉진정책 혹은 소비구조전환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가처분소득과 소비 증가세는 오히려 둔화되고 있으며, GDP 대비 소비 비중도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주도의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성장률 하락을 용인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향후 소비 현황의 변화와 소비시장 확대 움직임에 주목하는 것이 중국의 거시경제 동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한·중 FTA 체결로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중국정부의 정책적 의도와 달리 소비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동

안 중국 정책당국이 추진한 각종 소비촉진정책을 분석하고 중국의 소비확대 제약요인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중국 성별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의 소비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실증분석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낮은 도시화율과 소득불균형의 심화 등 중국 특유의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을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시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이장규 선임연구위원과 나수엽 전문연구원, 이효진 · 김영선 · 조고운 연구원, 그리고 인천대 김부용 교수와 세종대 최필수 교수 등 원내외 연구진의 참여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원의 이현태 부연구위원, 국무총리실 김윤경 서기관, 한국무역협회 이봉걸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조철 연구위원과 건국대 조현준 교수는 본 보고서의 작성과정에 유용한 자문과 감수를 맡아주어서, 본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중국의 소비 중심 성장전략의 전환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들에게도 새로운 대중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12월

원장 이일형

## 국문요약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2011년까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계획(2011~15년)을 통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성장률 하락을 용인하더라도 경제성장에서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부진과 투자 및 소비 둔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대를 기록하여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였다. 특히 2011년 이후 소비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속도에 대한 전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정책적 의도와 달리 소비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소비진장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뉴노멀 시대’에 우리의 대중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을 다루었다. 특히 제12차 5개년 계획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농민공의 시민화, 사회보장 확대, 소비자금융 확대), 가계 가치분소득 증대 전략(임금인상, 서비스업 진흥, 위안화 절상, 직접보조금 지급), 소비구조 변화 전략(산아제한 완화, 주거비용 비중 축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소비규모, 소비격차, 소비구조,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가계소비규모는 2000년 약 4조 7,000억 위안에서 2014년 약 24조 1,500억 위안으로 5배 이상 증가

하였다. 그러나 고속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불균형의 심화는 도농간, 계층간 및 지역간 소비격차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계소비에서 도시지역의 소비가 약 7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계층간 소비격차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최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의 소비격차가 2012년 기준으로 5.2배에 달하였다. 지역간 소비격차를 보면, 2014년에 도시지역의 경우 1인당 소비지출액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산시(山西)성 내의 도시간 격차는 2.3배이며, 농촌지역의 경우 소비지출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시장(西藏) 내 농촌간 격차는 2.5배에 달했다.

또한 소비지출 소매판매액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2010년 이후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최근 경기불안애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회안전망 미비로 인한 저축 선호 등이 소매판매액 감소의 원인으로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소득불균형 심화, 인구구조 변화,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낮은 도시화율,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높은 주택가격을 중국의 소비 제약요인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2009년 이후 도농간 소득격차가 다소 줄었으나, 지역간(동부연해지역과 서부내륙지역) 소득격차와 지니계수로 본 계층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령화 가속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하락’으로 대변할 수 있다. 이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 부담을 가중시켜 젊은 세대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소비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낮은 도시화율 역시 소비확대 제약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통해 소비확대를 도모하는 ‘신형(新型)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제도개혁의 한계에 부딪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기업대출 중시 관행, 미흡한 개인 신용정보 구축, 소비금융에 대한 인식 결여 등과 같은 요인으로 소비자금융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 밖에도 중국의 소비를 확대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소비확대를 통한 성장방식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정책 마련만으로는 소비 제약요인을 단기에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국 성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국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 가계소득, 투자, 노인부양비율, 서비스업 발전수준, 금융발전수준, 도시화, 교육지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은 소비에 유의미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소득과 서비스업 발전수준은 소비와 유의미한 플러스 관계를, 투자와 노인부양비율은 유의미한 마이너스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낮은 서비스업 발전수준, 높은 투자율, 그리고 높은 노인부양비율이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해왔음을 설명해준다.

중국 특유의 요인 중에서는 금융발전과 도시화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낮은 금융발전수준과 낮은 도시화율 역시 중국의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정부정책요인 중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면서 가계소비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 사회보장, 주택보장 등에 대한 지출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임금 기준의 인상은 연해지역에서 가계소비증대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정책이 연해지역에 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투자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제조업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는 가계보다는 기업 수익을 증가시켜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한 반면, 농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가계소득과 가계소비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에서 중국이 성장전략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의 새로운 대중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뉴노멀 시대 진입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높은 대중 수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규 수출시장 개척이 시급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최저임금 기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인력난이 대두되면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이 우리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둘째, 현재 한국의 대중 투자는 80%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므로 향후 서비스시장 진출을 가속화해야 한다.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에서 한·중 FTA 체결로 의미 있는 개방이 이루어진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 대한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기업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혁신을 통해 특화된 제품으로 중국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중국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인바, 향후 가공무역의 비중 축소와 소비재시장 진출 확대에 중점을 둔 대중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현지 시장 진출형 투자 위주로 대중 투자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넷째, 중국정부가 ‘신형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농민공의 도시민화 과정에서 창출되는 소비시장을 공략하되, 초기에는 대중적인 소비재에 집중하는 단계별 공략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 서언 .....	3
■ 국문요약 .....	5
■ 제1장 서론 .....	1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0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	21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22
■ 제2장 소비촉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 .....	25
1.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투자와 소비의 역할 .....	26
2.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 .....	33
가. 농민공 시민화 .....	35
나. 사회보장 확대 .....	41
다. 소비자금융 확대 .....	45
3.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전략 .....	47
가. 임금인상 .....	47
나. 서비스업 진흥 .....	49
다. 위안화 절상 .....	51
라. 직접보조금 .....	55
4. 소비구조 변화 전략 .....	57
가. 산아제한 완화 .....	57
나. 주거비용 비중 축소 .....	60
5. 소결 .....	63

<b>■ 제3장 중국의 소비 현황 분석</b> .....	<b>67</b>
1. 소비규모 .....	68
2. 소비격차 .....	69
3. 소비구조 .....	71
4.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 .....	73
<b>■ 제4장 중국 소비 제약요인 분석</b> .....	<b>81</b>
1. 소득불균형의 심화 .....	82
가. 소득불균형과 소비의 관계 .....	82
나.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	83
다. 지역간 소득격차 .....	85
라. 계층간 소득불균형 심화 .....	86
2. 인구구조의 변화 .....	89
가. 인구구조의 변화 현황 .....	89
나.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	90
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 .....	93
3.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	96
가. 중국 사회보장제도 가입 현황 .....	96
나.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한계와 높은 저축률 .....	98
4. 낮은 도시화율 .....	101
가. 중국 도시화 현황 및 전망 .....	101
나. 신형 도시화 계획의 한계 .....	103
5.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	106
6. 높은 주택가격 .....	109
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개관 .....	109
나. 주택가격의 적정성 .....	112

7. 소결 .....	114
<b>■ 제5장 중국 소비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b>	<b>119</b>
1. 선행연구 검토 .....	120
2. 방법과 데이터 .....	121
3. 분석결과 .....	127
4. 소결 .....	148
<b>■ 제6장 평가와 시사점 .....</b>	<b>151</b>
1. 평가 및 전망 .....	152
가.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방식 전환에 대한 평가와 전망 .....	152
나.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	155
다. 중국의 소비확대 제약요인에 대한 평가와 전망 .....	160
2. 시사점 .....	167
가. 소비 주도 성장전략 전환에 따른 새로운 대중 전략 .....	167
나. 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중 전략 .....	171
다.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중 전략 .....	173
라. 소비시장 확대에 따른 대중 전략 .....	176
마.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대중 전략 .....	179
3.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	182
<b>■ 참고문헌 .....</b>	<b>183</b>
<b>■ 부록 .....</b>	<b>195</b>
<b>■ Executive Summary .....</b>	<b>199</b>

## 표 차례

표 2-1. '신형 도시화' 계획의 주요 내용 .....	37
표 2-2. 농민공 시민화 비용 추산 .....	37
표 2-3. 제12차 5개년 계획에 나타난 중국 사회보장 관련 목표치와 달성 현황 .....	43
표 2-4. 중국 소비확대정책 일람 .....	65
표 3-1. 중국 수입의 가공단계별 구성 .....	69
표 3-2. 중국의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	74
표 4-1. 중국 인구구조 변화 전망(2015~50년) .....	91
표 4-2. 농민공 사회보험 가입자 현황 .....	98
표 4-3. 중국 전체 신규 대출에서 가계 신규 대출의 비중 .....	107
표 4-4. PIR에 의한 주택구입능력(Housing Affordability) 등급 .....	113
표 4-5. 중국의 소비확대 제약요인 평가 .....	117
표 5-1. 기본통계량 .....	126
표 5-2.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기본모형(전체) .....	128
표 5-3.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기본모형(연해지역과 내륙지역) .....	129
표 5-4.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기본모형(금융위기 전후) .....	130
표 5-5.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중국요인(전체) .....	133
표 5-6.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중국요인(연해지역) .....	134
표 5-7.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중국요인(내륙지역) .....	135
표 5-8.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중국요인(금융위기 전후) .....	136
표 5-9.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정부정책(전체) .....	138
표 5-10.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정부정책(연해지역) .....	139
표 5-11.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정부정책(내륙지역) .....	140

표 5-12.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정부정책(금융위기 전후) .....	141
표 5-13.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투자종류(전체) .....	143
표 5-14.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투자종류(연해지역) .....	144
표 5-15.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투자종류(내륙지역) .....	145
표 5-16.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투자종류(금융위기 이전) .....	146
표 5-17.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투자종류(금융위기 이후) .....	147
표 5-18. 중국의 소비 결정요인 .....	149
표 6-1. 중국의 소비확대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	159
표 6-2. 중국의 소비확대 제약요인에 대한 평가와 전망 .....	165
표 6-3. 한·중 FTA의 서비스분야 중국 측 양허내용 .....	174

## 그림 차례

그림 2-1.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	27
그림 2-2. 소비와 투자의 기여도 추이 .....	27
그림 2-3. 소비율과 투자율 추이 .....	27
그림 2-4. 각국의 투자율 추이 .....	28
그림 2-5. 각국의 성장률과 투자율 추이 .....	28
그림 2-6. 중국의 업종별 투자 추이 .....	29
그림 2-7. 중국의 업종별 투자 비중 추이 .....	29
그림 2-8. 중국 과잉업종의 설비가동률(2012년) .....	30
그림 2-9. 중국의 부동산 가격 추이 .....	30
그림 2-10. 각국의 소비율 추이 .....	31
그림 2-11. 각국의 성장률과 소비율 추이 .....	31
그림 2-12. 각국의 소비증가율 추이 .....	32
그림 2-13. 각국의 1인당 소비증가율 추이 .....	32
그림 2-14. 주요국 GDP 대비 총저축률(2013년) .....	33
그림 2-15. 주민 저축예금 잔액/국민총생산 .....	34
그림 2-16. 도시 취업자 평균 임금 및 도시 가구 일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 ...	48
그림 2-17. 위안화 대달러 환율 추이(1995년 1월~2015년 9월) .....	54
그림 2-18. 전국 70개 주요 도시 신규 주택 거래가격지수 (2011년 1월~2015년 9월, 월별) .....	62
그림 3-1. 가계소비액 및 증가율 추이 .....	68
그림 3-2. 소비재 소매 총액 및 증가율 추이 .....	68
그림 3-3. 소비재 수입액 및 비중 추이 .....	69
그림 3-4. 도시와 농촌의 가계소비액 및 비중 추이 .....	70

그림 3-5. 도시와 농촌의 가계 1인당 소득과 소비 격차 추이 .....	70
그림 3-6. 도시 가계소비지출의 계층간 격차(2012년) .....	70
그림 3-7. 농촌 가계소비지출의 계층간 격차(2012년) .....	70
그림 3-8. 도시 가계소비지출의 지역간 격차(2014년) .....	71
그림 3-9. 농촌 가계소비지출의 지역간 격차(2014년) .....	71
그림 3-10. 도시 기초소비 비중 추이 .....	72
그림 3-11. 도시 서비스소비 비중 추이 .....	72
그림 3-12. 농촌 기초소비 비중 추이 .....	72
그림 3-13. 농촌 서비스소비 비중 추이 .....	72
그림 3-14. 도시와 농촌의 가정설비용품 및 서비스 비중 추이 .....	72
그림 3-15. 도시와 농촌의 주요 내구소비재 보급률 비교(2012년) .....	72
그림 3-16. 중국의 소매판매 추이 .....	74
그림 3-17. 중국 도시·농촌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	74
그림 3-18. 비생활필수품 증가 추이 .....	74
그림 3-19. 도시와 농촌의 소득 추이 .....	75
그림 3-20. 중국의 주요 품목 소매판매 추이(1) .....	76
그림 3-21. 중국의 주요 품목 소매판매 추이(2) .....	76
그림 3-22. 중국의 도시 소비지출 구성 .....	76
그림 3-23. 중국의 농촌 소비지출 구성 .....	76
그림 3-24. 중국의 도시 품목별 소비지출금액 추이 .....	77
그림 3-25. 중국의 농촌 품목별 소비지출금액 추이 .....	77
그림 3-26. 주요 상품 소비지출금액 추이 .....	77
그림 3-27. 주요 상품 소비지출증가율 추이 .....	77
그림 3-28. 중국 관광 수입 및 증가율 .....	78
그림 3-29. 중국 내 관광객 수 추이 .....	78
그림 3-30. 영화 흥행수입 .....	78

그림 3-31. 1인당 의료비지출 추이 .....	78
그림 3-32. 인터넷 가입자 수 및 보급률 .....	79
그림 3-33. 전자상거래 증가율 추이 .....	79
그림 4-1. 중국의 도농간 평균 소비성향 비교 .....	82
그림 4-2. 중국의 도농간 소득격차 .....	84
그림 4-3. 도시 및 농촌의 소득증가율 추이 .....	85
그림 4-4. 중국의 동부연해 및 서부 지역 1인당 GDP 비교 .....	86
그림 4-5. 중국의 지니계수 추이(2003~14년) .....	87
그림 4-6. 주요국의 지니계수 비교 .....	89
그림 4-7. 중국의 출생률 및 65세 이상 인구 비중 변화 .....	90
그림 4-8. 주요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 .....	92
그림 4-9.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비교 .....	93
그림 4-10. 주요국의 노년부양비 추이 비교 .....	95
그림 4-11. 중국과 선진국의 1인당 GDP 추이(ppp 기준) .....	96
그림 4-12. 중국 5대 사회보험 가입자 수 현황 .....	97
그림 4-13. 중국 도·농 주민 저축예금 잔액 .....	101
그림 4-14. 중국의 도시인구 및 도시화율 장기 전망 .....	102
그림 4-15. 주요국의 도시화율 비교 .....	103
그림 4-16. 중국 소액대출액 변화 추이 .....	106
그림 4-17. 중국 부동산 및 주택 개발 투자증가율 .....	110
그림 4-18. 중국 부동산 및 주택 개발 투자 비중 추이 .....	110
그림 4-19. 중국의 평균 주택판매가격 상승률 .....	111
그림 4-20. 주요국 PIR 비교(2014년 기준) .....	114
그림 6-1.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와 전망 .....	166
그림 6-2. 한국의 대중 수출 추이 .....	169

그림 6-3.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에 따른 우리의 대중 전략 .....	171
그림 6-4.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 추이 .....	172
그림 6-5.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추월시기 .....	176
그림 6-6. 중국의 수입과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일반무역과 가공무역의 비중 추이 .....	178
그림 6-7. 중국의 수입과 한국의 대중 수출의 가공단계별 구성(2014년) .....	178
그림 6-8. 한국의 대중 투자목적별 투자 추이 .....	179

## 부표 차례

부표 1. 기본모형에 대한 상관관계표: 전체 .....	196
부표 2. 기본모형에 대한 상관관계표: 연해지역 .....	196
부표 3. 기본모형에 대한 상관관계표: 내륙지역 .....	197
부표 4. 기본모형에 대한 상관관계표: 금융위기 이전 .....	197
부표 5. 기본모형에 대한 상관관계표: 금융위기 이후 .....	198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중국의 소비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개별 상품시장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009~13년 기간 중국의 소비지출은 연평균 14.6%의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소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도 2009년의 48.5%에서 2013년에는 49.8%로 소폭 상승하였다.<sup>1)</sup> 자동차, 화장품, 전자 및 가전 기기 등 일부 소매상품의 성장세는 매우 두드러지며, 이를 노린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소비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속도에 대한 기대와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주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시키고 있으나 2011년 이후 가처분소득과 소비 증가세는 오히려 둔화되고 있으며, GDP 중 소비 비중의 증가율도 둔화(5.3% → 4.2% → 3.9%)되고 있다.<sup>2)</sup>

이런 배경하에서 소비가 향후 어떤 추세로 나타날지가 중국의 경기를 읽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한·중 FTA 체결로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약화되고 투자의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비가 얼마나 살아나느냐가 향후 중국의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

1) CEIC DB(검색일: 2015. 2. 11)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2) 위의 자료.

이 될 것이다. 한국은 중국 수입시장에서 9.7%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sup>3)</sup> 내수용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은 5.7%로 미국, 독일, 일본 등 경쟁국에 뒤처지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 일반무역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5.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2014년 기준).<sup>4)</sup> 한·중 FTA 체결로 91%의 품목에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고 서비스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등 향후 중국 소비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에 대한 분석은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중국의 소비가 부진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나아가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에 대해 평가하고, 이것이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뉴노멀 시대 우리의 대중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본 연구는 모두 6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특히 제12차 5개년 계획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다양한 소비촉진정책에 대해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전략, 소비구조 변화 전략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3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현황이 어떠한지를 소비규모, 소비구조, 그리고 품목별 소비 등의 내용을 통해 살펴본다.

---

3)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 통계(검색일: 2015. 3. 4)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4) 중국해관통계(구입일: 2015. 3. 24, 구입처: 중국해관)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4장에서는 중국의 소비확대 제약요인을 소득불균형의 심화, 인구구조의 변화,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낮은 도시화율,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높은 주택가격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5장은 중국의 소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일반적인 소비 결정 요인들 외에 중국 특유의 요인(낮은 금융발전수준, 낮은 도시화율, 소득불균형의 심화, 높은 주택가격 등)에 대해 살펴봄에 사회보장지출, 임금인상 등과 관련한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더불어 업종별 투자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규명해본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들을 바탕으로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중국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소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국의 소비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실증연구 또한 중국 데이터를 이용하기보다는 국가별 데이터를 이용한 패널분석을 통해 소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 규명하면서 중국의 소비도 저축률, 가계소득률, 인구구조, 서비스업 비중, 금융발전 등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소비 결정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Guo and N'Diaye 2010; Wang 2011). 이론적으로는 낮은 도시화율, 높은 주택가격, 소득불균형의 심화와 같은 요인이 중국의 낮은 소비율, 그리고 소비율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한재현 2012),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첫째로 이러한 공백을 메꾸 일반적인 소비 결정요인 외에 중국 특유의 요인에 대한 분석을, 둘째로 소비확대를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사회보장지출, 주택보장지출,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효과 분석을, 셋째로 투자업종별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는 데에 차별성이 있다.

또한 소비촉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살펴보고 있으며, 중국 소비확대의 제약요인에 대해서도 이론적인 맥락과 더불어 구체적인 데이터로 근거를 제시하며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아울러 결론부분에서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는 측면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제2장 소비촉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

1.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투자와 소비의 역할
2.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
3.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전략
4. 소비구조 변화 전략
5. 소결



중국에서 내수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이미 제11차 5개년 계획(2006~10년) 시절부터 포함돼 있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회의론과 그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있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소비 위주의 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실현의 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부터 시작된 제12차 5개년 계획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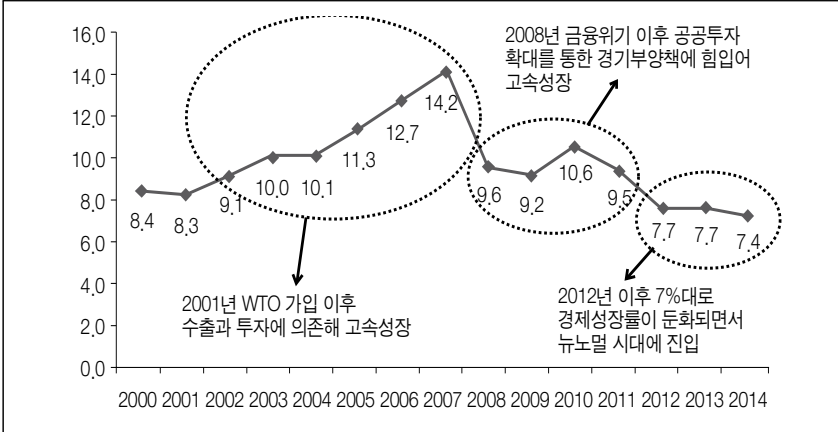
그 시점을 전후하여 ‘성장전략의 전환’ 혹은 ‘성장방식의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정책들이 도입됐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전략, 소비구조 변화 전략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이들 전략은 매우 다양한 부문에 걸쳐 있고 국무원이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한 적은 없지만, 잇따라 발표된 정책들의 배후 논리를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에 앞서 이어지는 절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투자와 소비의 역할에 대해 고찰한다.

## 1.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투자와 소비의 역할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는 2011년까지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달성하였다.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2007년까지는 수출과 투자에 의존해 고속성장하였으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을 비롯한 투자확대로 9%대의 경제성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부진하고 투자와 소비도 둔화되며 경제성장률이 7%대로 줄어드는 이른바 ‘뉴노멀

그림 2-1.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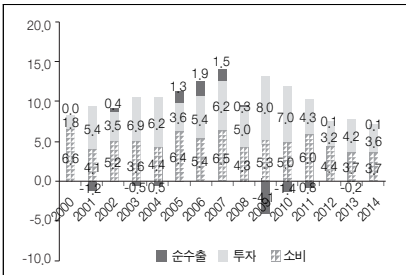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8. 2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2. 소비와 투자의 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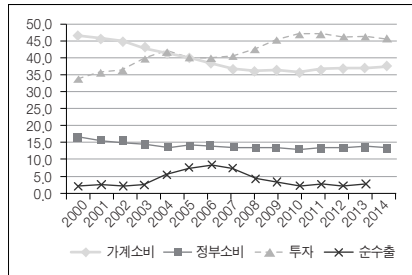
(단위: %p)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8. 2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3. 소비율과 투자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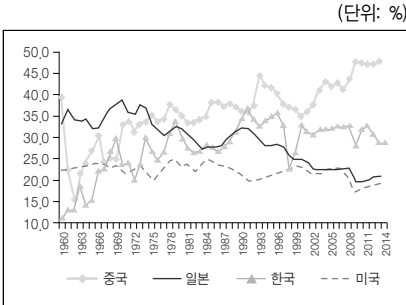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8. 2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시대'에 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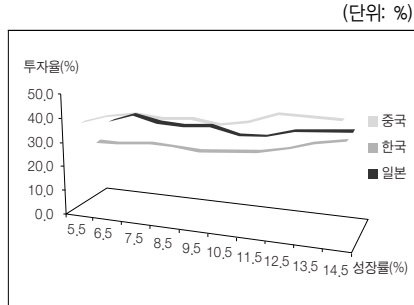
그동안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은 주로 투자에 의해 견인된 것인바, GDP에서 차지하는 투자의 비중은 2000년의 34%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에는 47.3%까지 올라갔으며, 이후 약간의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4년에도 여전히 46%에 이르고 있다. 반면 가계소비의 비중은 2000

그림 2-4. 각국의 투자율 추이



자료: WDI DB(검색일: 2015. 8. 2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단 1960~69년 일본 데이터는 Statistics Japan(검색일: 2015. 8. 24)를 이용.

그림 2-5. 각국의 성장률과 투자율 추이



주: 중국, 한국, 일본의 고속성장기로 중국은 2002~11년, 한국은 1982~91년, 일본은 1960~69년의 10년간임. 자료: WDI DB(검색일: 2015. 8. 2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단 1960~69년 일본 투자데이터는 Statistics Japan(검색일: 2015. 8. 24)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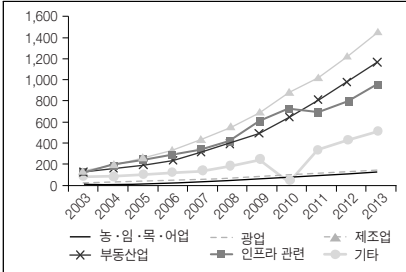
년의 47%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에는 36%로 저점을 찍은 뒤, 최근 몇 년 조금 상승하여 2014년에는 38%에 달하고 있다.

사실 개도국의 공업화 과정에서 투자율의 상승과 소비율의 하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중국의 고속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이 같은 현상이 일반의 예상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노동에 비해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투자의 효율과 수익률이 높아 투자를 늘리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공업화 과정에서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소비구조가 일차산품에서 공업제품으로 업그레이드되는데, 이로 인해 2차 산업이 발전되고 이는 또 자본밀집형 산업인 2차 산업에로의 투자확대를 필요로 하면서 투자율이 증가하고 소비율은 하락하게 된다(Chenery and Syrquin 1975). Guo and N'Diaye(2010)가 1992~2007년 기간 39개 국가를 대상으로 소비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 소비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투자율은 기타 국가와 비교하면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

그림 2-6. 중국의 업종별 투자 추이

(단위: 백억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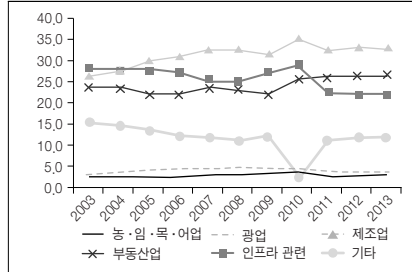


주: 인프라 관련은 전력·가스·수도 생산과 공급업, 건축업, 교통운수·창고·우편업, 수리·환경·공공시설 관리업을 포함함.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8. 2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7. 중국의 업종별 투자 비중 추이

(단위: %)



주: 인프라 관련은 전력·가스·수도 생산과 공급업, 건축업, 교통운수·창고·우편업, 수리·환경·공공시설 관리업을 포함함.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8. 2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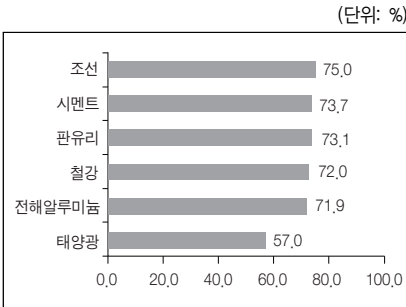
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인도와 같은 개도국과 비교하여도 높다. 더욱이 마찬가지로 높은 투자율을 경험했던 일본이나 한국의 역대 투자율 최고치를 상회하였으며,<sup>5)</sup> 성장률에 비해 서도 투자율이 높다.

한편 중국의 투자는 주로 제조업과 부동산업, 그리고 인프라에 집중되었는데 2013년 기준 제조업 투자가 약 35%를 차지하고, 부동산업과 인프라 관련 투자가 각각 27%와 22%를 차지한다.

이러한 투자구조는 일부 업종의 생산과잉과 부동산 경기 과열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중국국가통계국 쉬셴춘(许善春) 부국장에 따르면 “2013년 1/4분기 중국 제조업의 평균 설비가동률은 78.2%로 2009년 4/4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2/4분기와 3/4분기에는 각각 78.6%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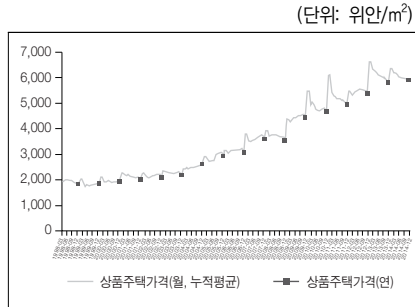
5) WDI, DB(검색일: 2015. 8. 24)와 Statistics Japan(검색일: 2015. 8. 24)에 따르면 1960~2014년 기간 일본의 투자율 최고치는 1970년의 38.8%, 한국의 투자율 최고치는 1991년의 36.8%이다.

그림 2-8. 중국 과잉업종의 설비가동률(2012년)



자료: 国务院(2013); 赵昌文(2014)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9. 중국의 부동산 가격 추이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2. 1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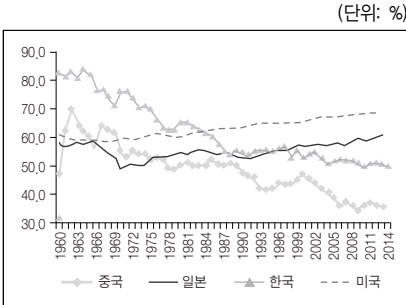
79.6%로 조금 상승하였지만 국제 정상가동수준인 82%에 못 미치며, 2006년에는 설비가동률 조사 이래 평균 수준인 80.1%에도 못 미치고 있다.”<sup>6)</sup> 또한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판유리, 조선 등 대표적인 과잉산업의 설비가동률은 70~75%에 그쳐 심각한 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대표적인 생산과잉업종으로 꼽히는 철강산업을 예로 들면 현재 전 세계 철강의 절반 가량을 생산하는 중국이 세계 공급과잉물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해 글로벌 공급과잉을 주도하고 있다.<sup>8)</sup> 중국의 생산과잉은 전통산업에서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일부 신산업(풍력, 태양광 등)에서도 존재하고 있는데,

6) 中国行业研究网(2013. 12. 25), 「2013年我国工业企业产能利用率逐季回升」, <http://www.chinairm.com/news/20131225/141003527.html>(검색일: 2015. 8. 25). 한편 IMF(2012)에 따른 중국 제조업의 평균 설비가동률은 1990년의 8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에는 6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정부의 계산과 비교하여 격차가 크다.

7) 国务院(2013. 10. 6), 「国务院关于化解产能严重过剩矛盾的指导意见」,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3/content\\_2514934.htm](http://www.gov.cn/gongbao/content/2013/content_2514934.htm)(검색일: 2015. 8.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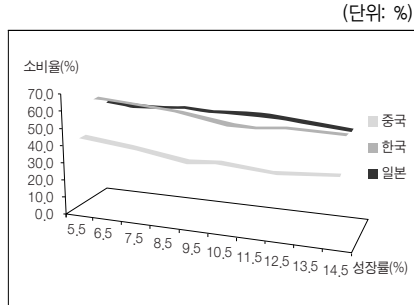
8) 연합뉴스(2015. 8. 12), 「환율카드 꺼내든 중국... 공급과잉·수출부진 타개 포석」,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2/0200000000AKR20150812114800089.HTML?input=1195m>(검색일: 2015. 8. 25).

그림 2-10. 각국의 소비율 추이



자료: WDI DB(검색일: 2015. 8. 2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단 1960~69년 일본 데이터는 Statistics Japan(검색일: 2015. 8. 24)을 이용.

그림 2-11. 각국의 성장률과 소비율 추이



주: 중국, 한국, 일본의 고속성장기로 중국은 2002~11년, 한국은 1982~91년, 일본은 1960~69년의 10년간임. 자료: WDI DB(검색일: 2015. 8. 2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단 1960~69년 일본 투자데이터는 Statistics Japan(검색일: 2015. 8. 24)을 이용.

특히 태양광의 경우 설비가동률이 57%밖에 안 된다.<sup>9)</sup>

부동산 투자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도시화에 따른 주택수요의 증가와 지방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달성 및 세수확보 등의 원인으로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4조 위안에 달하는 재정자금을 투입하며 통화공급을 확대한 결과 대량의 자금이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들었고, 이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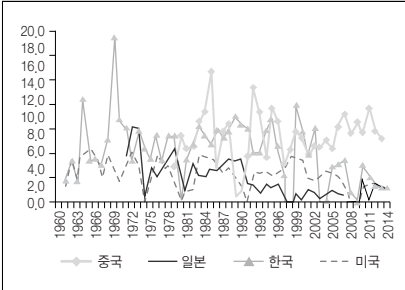
한편 인프라 관련 투자는 도시화 추진에 따른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의 건설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조 위안의 투자 중 1조 5,000억 위안이 기초인프라분야에 투자<sup>10)</sup>되면서 빠르게 증가하였다.

9) 赵昌文(2014. 3. 20), 「中国的产能过剩风险及其化解」, [http://economy.caixin.com/2014-03-20/100654059\\_3.html](http://economy.caixin.com/2014-03-20/100654059_3.html)(검색일: 2015. 8. 24).

10) 国家发展改革委(2009. 3. 6), <http://zfxgk.ndrc.gov.cn/PublicItemView.aspx?ItemID={bc4b9e60-8fdd-42c0-9f27-3cd159e86d30}>(검색일: 2015. 8. 25).

그림 2-12. 각국의 소비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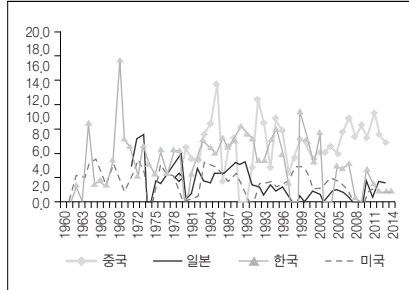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WDI DB(검색일: 2015. 8. 2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단 1960~69년 일본 데이터는 Statistics Japan(검색일: 2015. 8. 24)를 이용.

그림 2-13. 각국의 1인당 소비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WDI DB(검색일: 2015. 8. 2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단 1960~69년 일본 데이터는 Statistics Japan(검색일: 2015. 8. 24)를 이용.

이처럼 중국의 투자율은 기타 국가에 비해서든 성장률에 비해서든 높은 수준이고 과잉투자로 인해 일부 업종에서 생산과잉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소비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1960~2014년 기간 각국의 소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소비율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개도국은 소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한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크게 하락하다 이후 하락추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소비율은 마찬가지로 개도국인 인도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며, 한국과 일본의 역대 소비율 최저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고, 이들 국가의 고속성장기에 비해서도 소비율이 낮다.

그러나 중국은 가계소비증가율 및 1인당 가계소비증가율에서 모두 여타 국가보다 빠르며, 이처럼 소비증가율이 꾸준히 높아져가고 있음에도 소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중국 전체 소비에서 가계소비가 약 76%를 차지하고 정부소비가 약 24%를 차지한다(2014년 기준). 또한 2000년대 들어 가계소비와 정부

소비 모두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GDP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비와 정부소비의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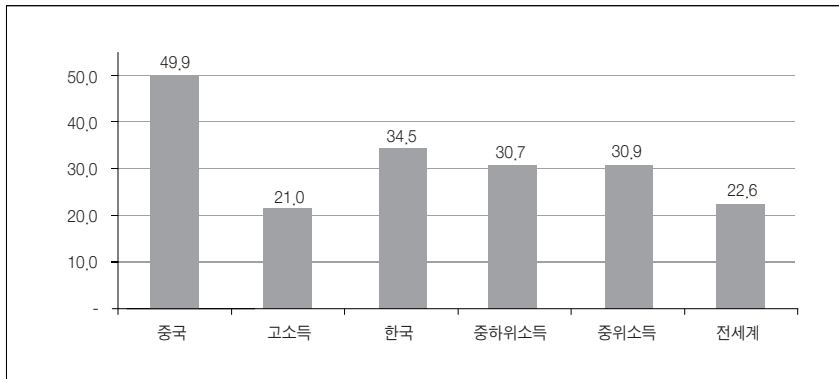
## 2.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

미흡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높은 저축률은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그림 2-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3년 기준 주요국의 총저축률을 비교하면, 중국이 49.9%로 전 세계 평균인 22.6%는 물론 고소득국가 평균(21.0%), 중하위 소득국가 평균(30.7%) 등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가계 저축률 상승추이는 [그림 2-15]에 제시된 바와 같다. GDP 대비 중국 도농주민 저축예금 잔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 이후 75%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2-14. 주요국 GDP 대비 총저축률(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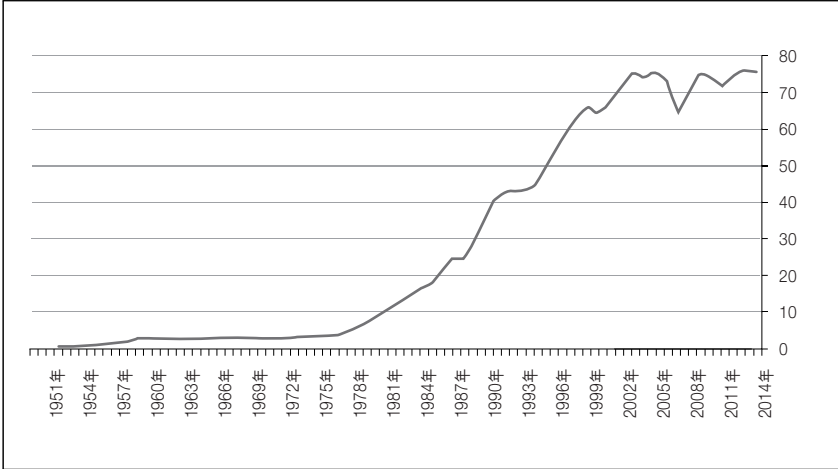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World Bank DB(검색일: 2015. 8. 2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15. 주민 저축예금 잔액/국민총생산

(단위: %)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DB(검색일: 2015. 8. 2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신용(credit)시스템과 보험시장이 부재한 개발도상국에서 가계 저축은 가장 주요한 복지의 수단이다.<sup>11)</sup> 이는 중국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높은 가계 저축률로 연결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확대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중국의 소비확대정책은 주민의 저축률을 떨어뜨리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는 농민공의 시민화, 사회보장 확대, 소비자금융 확대 정책으로 나타난다. 앞의 두 개는 가처분소득이 직접적으로 소비에 사용되는 비중을 늘려주려는 것이고 소비자금융 확대는 가계가 소비를 위한 합리적인 부채를 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11) Orazio P. Attanasio and Miguel Székely(2000), p. 5.

## 가. 농민공 시민화

농촌 출신으로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켜 농민공(農民工)이라고 한다. 이들은 도시에 거주하지만 도시 호적을 갖지 못하고 있기에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무호적자(無戶籍者)’와 비슷한 뜻으로 통용된다. ‘농민공 시민화’란 농민공에게 호적을 부여하여 정식 도시민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농민공들은 불안한 사회적 지위 탓에 사회보장에서 소외돼 있고 의미 있는 소비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농민공의 도시 호적 취득을 막았던 이유는 도시민이 누리는 사회보장체계에 농민을 편입시킬 준비가 안 돼 있었던 데다가 급격한 인구이동을 막고, 농민들에게 배분된 토지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 농촌은 매우 다른 사회보장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도시는 기업과 ‘단위(單位)’<sup>12)</sup>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을 지방정부가 보조해주는 체제였던 반면 농촌은 정부의 보조밖에 없어서 보장 수준과 범위가 많이 달랐다. 농민을 도시로 편입시키려면 사회보장체제를 변화시키고 사회보장부담을 늘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중국이 국가통제의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의 거주지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각급 단위와 행정구역별로 획정된 인구가 수시로 이동한다면 사회통제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된다. 농민공들이 대부분 비정규직 취업상태라서 안정적인 과약을 할 수 없는 것도 큰 문제이다. 셋째, 농촌에서는 농민들에게 가구별로 토지가 배분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도시에 정착해버리면 남아 있는 토지의 경작을 보장할 수 없다. 만약 농민들이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처분하여 도시에 정착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단시일 내

---

12) ‘직장’이란 의미로 쓰이던 중국 사회주의 시절의 용어.

에 답이 나오기 어려운 문제를 초래한다. 토지공유제를 근간으로 하는 중국에서는 토지에 대한 개인재산권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이상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만 명이 도시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농민공을 방치할 수는 없었으므로 장쩌민·주룽지 지도부 당시였던 2001년 3월, 국무원은 「소도시 호적 관리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sup>13)</sup>을 발표한다. 소도시의 상주인구 관리를 계획지표에 따라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즉 소도시에 한해서 농민공의 진입을 완만하게 허용한 것이다. 대도시는 농민공의 진입수요가 많고 사회보장 부담도 크므로 소도시부터 개방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향후 중국 지도부가 농민공에게 호적을 개방하는 지침으로 줄곧 작용한다.

농민공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는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를 표방했던 후진타오 지도부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2008년 10월, 제17차 3중전회에서 채택한 「농촌 개혁·발전 추진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sup>14)</sup>은 농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도농일체화(城鄉一體化)’에서 ‘중소형 도시의 정착조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직장과 거주지를 가진 농민들부터 도시민으로 전환한다’, ‘농민공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보수·자녀교육·공공위생·주택 임대 및 구매에서 도시민과 동일한 대우를 점진적으로 누리도록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시진핑 지도부는 2014년 3월 ‘신형 도시화’라는 정책에 농민공 문제에

---

13) 国务院(2001. 3. 30), 「国务院批转公安部关于推进小城镇户籍管理制度改革意见的通知」, <http://fgk.chinalaw.gov.cn/article/fgxwj/200103/20010300277424.shtml>(검색일: 2015. 8. 25).

14) 中国共产党(2008. 10. 12), 「中共中央关于推进农村改革发展若干重大问题的决定」, [http://www.gov.cn/test/2008-10/31/content\\_1136796.htm](http://www.gov.cn/test/2008-10/31/content_1136796.htm)(검색일: 2015. 8. 25).

표 2-1. '신형 도시화' 계획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및 목표	
도시화를 제고	- 상주인구 도시화율: 2012년 52.6% → 2020년 60% - 호적인구 도시화율: 2012년 35.3% → 2020년 45%
도시민화 및 중서부 도시화 추진	- 2020년까지 도시 상주 농업인구 1억 명의 도시 호적 편입, 1억 명 도시 주거 소외계층의 거주권 확대, 1억 명 규모의 중서부지역 도시화 추진
기본공공서비스, 기초시설, 자원환경 등	- 농민공 자녀 의무교육, 도시 상주인구 사회보장수준 제고 - 도시 대중교통, 배수 처리 및 생활쓰레기 처리 등 수준 제고 - 도시 재생가능에너지 소비 비중 제고, 녹색건축 비중 제고 등
도시인프라 건설	- 인구 20만 명 이상 중소도시에 2020년까지 철도 연결 -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신설

자료: 문익준, 나수엽, 이효진(2014), p.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2. 농민공 시민화 비용 추산

(단위: 위안)

항목	重慶	嘉興	武漢	鄭州	
1. 의무교육	초등학교 학비(元)	3,021	5,808	7,898	3,252
	중학교 학비(元)	3,078	7,322	10,068	4,931
	학교 증축비(元)	2,773	2,659	2,919	3,017
2. 주민합작의료보험(元/年)	62	118	52	31	
3. 기본 양로보험(元)	35,816	36,089	29,754	42,049	
4. 기타 민생 보장 비용	상해보험(元/年)			5	
	최저생활 보장(元/年)	86	77	80	59
	의료비 보조(元/年)	9	8	49	16
	부녀아동 보건(元/年)	14	46	6	
	독거노인(元/年)		14		8
5. 도시관리비(元/年)	491	338	401	260	
6. 주택(元)	8,570	10,284	9,976	8,697	
총계(元)	80,408	83,690	85,087	77,361	

자료: 최필수 외(2012), p. 19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대한 대책을 담았다. 기존 도시화가 토지개발을 통한 공간의 확장이었다면 신형 도시화는 '사람 중심의 도시화'를 표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화를 추진하되 상주인구 기준 도시화와 호적인구 도시화의 갭을 줄이는 방향

으로 한다. 상주인구 도시화율은 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집계하지만, 호적인구 도시화율은 도시 호적을 보유한 사람을 집계하므로, 호적인구 도시화율에는 농민공이 빠져 있다. 이 둘 사이의 갭을 줄이기 위해 2012년 52.6%인 상주인구 도시화율을 2020년까지 60%로 제고시키는 동시에 같은 기간 호적인구 도시화율을 35.3%에서 4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상주인구 기준 도시화율이 7.4% 증가하는 반면 호적인구 도시화율은 10%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서 2020년까지 1억 명의 농민공을 도시 호적에 포함시킨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농민공에 대한 호적부여문제가 도시재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최필수 외(2012)가 소개하는 농민공 시민화 비용을 보면 그 항목이 교육·의료보험·양로보험·주택 등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비용은 도시가 크고 소득이 높을수록 함께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그 도시의 생활수준이 높으므로 거기에 정착하는 비용도 높음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이에 따라 신형 도시화 정책은 2013년 11월 3중전회에서 천명된 도시 규모별 호적개방원칙을 따르고 있다. 즉 소도시는 전면개방, 중급도시는 점진개방, 대도시는 정주(定住)조건의 합리적 조절, 초거대도시는 인구 총 규모를 통제한다는 것이다(최필수, 문익준, 이한나 2013).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먼저 소도시는 농민공 유입수요도 크지 않고 농민공의 시민화 비용도 크지 않으므로 전면개방해도 무방하다. 중급도시는 수요와 비용으로 보아 점진적으로 개방한다. 대도시는 정착조건을 제고시켜서 인구의 과도한 유입을 막는다. 즉 거주환경조건이나 취업조건들을 높게 제시해서 저임금 농민공의 과다유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농민공 진입수요가 가장 많은 초거대도시는 인구의 총량 관리를 통해 기본적으로 농민공의 진입을 막는다.

이 정책은 농민공 진입수요와 도시소득수준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각 지방정부들은 자기 현실에 맞는 농민공 수용정책을 펴고 있어서 일률적인 원칙을 정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2013년 6월 말 현재 중국의 14개 성이 일원화된 호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각각의 현실은 매우 다르다. 그러므로 도시의 규모별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농민공 수용에 관한 가장 효율적인 각론이 될 것이다.

2014년 7월에는 「국무원 호적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sup>15)</sup>(이하 「의견」)이란 문건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첫째, 소도시는 현(縣)급시·현정부소재지·일부 진(鎮)으로 구체화됐고 여기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인원은 거주지가 자가주택이건 임대주택이건간에 구분 없이 현지 호적을 획득할 수 있다.

둘째, 중급도시는 인구 5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의 도시로, 여기서 안정적인 직업과 거주지를 가진 동시에 도시사회보장 기준에 도달한 인원은 각 도시의 능력에 맞게 호적을 획득할 수 있다. 즉 중급도시가 그럴 능력이 있으면 완전히 호적을 개방하고, 그렇지 않다면 직업의 범위와 연한 등의 조건에 따라 호적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조건에 주택의 자가·임대 여부나 면적·금액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또한 도시사회보험 가입요구조건이 3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대도시는 인구 100만~300만 명, 300만~500만 명의 둘로 나누어 기준이 제시됐다. 전자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1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이나 후자에서 좀 더 까다로운 취업과 거주 조건을 만족한 사람은 각

---

15) 国务院(2014b. 7. 24), 「国务院关于进一步推进户籍制度改革的意见」, <http://www.chinanews.com/gn/2014/07-30/6439778.shtml>(검색일: 2015. 8. 25).

지역의 실정에 맞는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여 이를 만족하면 호적을 획득할 수 있다. 도시사회보험 가입요구조건은 5년 이하이다. 그러나 좀 더 까다로운 취업과 거주 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며, 지역별로 어떤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명시적 규정은 없다.

인구 500만 명 이상의 특대형 도시는 주거지·사회보험 참여 현황·연속 주거기록 등을 고려하여 포인트 제도를 엄격히 운영한다. 또한 총량을 컨트롤하되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동인구를 관리한다.

여기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포인트 제도란 광둥성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용됐던 것인데, 거주기간·취업능력·학력·기술소지 등을 점수화하여 도시 호적 취득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각 포인트를 어떻게 제정·운용하는가는 정부에서 일률적인 지침을 주지 않았고 각지에 맡겼다.

「의견」은 이렇게 도시 호적 공급에 관해 규정하는 동시에, 도시 호적의 수요를 조절하는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도시·농촌의 이원화된 호적을 통일한 것, 거주증 제도를 도입한 것, 농촌의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그것이다. 먼저 호적을 통일한 것은 교육·보건·주택 등 사회보장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의미이다. 거주증 제도는 호적지를 떠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사회보장을 누리게 하겠다는 의미이다. 농촌의 재산권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농토의 경영권 양도와 주택용지 소유권 보장에 관한 것이다. 즉 농촌에 있는 유일한 재산인 토지에 대한 농민의 처분권을 넓혀줌으로써 농촌에 남아 있을 유인을 제공한 것이다.

호적에 대한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과 아울러 농민공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조치도 포함됐다. 먼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농촌의 유수(留守)아동문제와 직결되는 도시교육을 개방한다. 즉 부모를 따라 도시로 이주한 아이들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

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민공에 대한 취업교육·양로연금·주택보장에 관한 강화조치도 「의견」에 포함됐다.

각 도시들이 이렇게 새로 호적을 개방하고, 거주증을 지닌 농민공에 대한 사회보장을 넓히려면 재정이 소요된다. 「의견」은 이러한 수요에 비례하여 중앙정부의 재정보조가 함께 이뤄진다고 밝히고 있다. 지방정부가 호적 개혁에 안심하고 동참하도록 한 것이다.

## 나. 사회보장 확대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절 소속 ‘단위(單位)’를 중심으로 제공되던 사회보장체제는 1978년 개혁·개방과 함께 빠르게 붕괴되기 시작했다. ‘단위’란 소속 직장을 가리키는데, 사회주의 시절 단위는 월급과 함께 주거·교육·보건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개혁·개방이 몰고 온 시장화의 물결은 사실상 계획경제의 일부였던 단위들을 빠르게 해체했다. 국유부문이 민간부문에 의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잠식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의 국유부문 구조조정도 이에 한몫을 담당했다. 1980년대부터 급격히 늘어난 체제 밖의 민영경제주체들은 계획경제부문의 자원과 시장을 차지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일부는 이중가격제도를 틈타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인민들은 확장하는 민영부문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거나, 축소되는 국유부문에서 축출되면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을 겪었다.

단위의 해체와 함께 단위가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들 자체도 시장화되기 시작했다. 퇴직 후 노년을 보장하던 직장이 사라지고 민간보험업이 들어섰다. 의료서비스도 상업화되면서 사회주의 시절 장제로 농촌에 배치되었던 의료진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를 중심으로 포진하게 됐다. 1997년 대학이

등록금을 받기 시작하고, 1998년 주택 배급이 중단되고 상업용 주택이 도입된 것이 이러한 시장화의 대미를 장식했다.

개혁·개방이 몰고 온 이러한 변화는 곧 단위를 대체할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수요를 일으켰고, 1986년 제7차 5개년 계획에서 처음으로 사회보장이란 개념이 중국에서 제시됐다(KIEP 북경사무소 2014). 단위가 제공하던 사회안전망을 국가·직장·개인이 나눠서 부담한다는 개념이 이때 처음 제시됐고, 단위의 해체나 본인의 해고 등으로 단위에서 분리된 개인들에게 어떻게 사회적 안전을 제공할 것인가가 논의된 것이다.

1993년 장쩌민·주룽지 지도부에 들어서는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 무상 의료시스템을 대체하게 됐고, 양로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 후 생활보장에 대한 기준이 법제화됐다. 이때 상업보험이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명문화됐다. 1998년에는 사회보장을 총괄할 부급(部級) 조직인 노동사회보장부(勞動和社會保障部)가 신설됐다.

2003년 후진타오·원자바오 지도부가 농민공의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실시했음은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후진타오 지도부의 마지막 작품은 제12차 5개년 계획(2011~15년)이다. 이 계획은 소비를 통한 성장으로의 전환을 천명하고 있으며, 농민공의 시민화와 함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회보장 확대를 설정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5대 보험인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출산보험과 사회보장 카드 발급수량을 주요 지표로 삼아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표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표는 조기 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2015년 10월 현재 유일하게 달성되지 못한 도시 양로보험 참여인 수 지표도 최근 몇 년간 연평균 2,000만 명 가까이 증가세를 보이고

표 2-3. 제12차 5개년 계획에 나타난 중국 사회보장 관련 목표치와 달성 현황

지표	2010년	2015년 목표	실적치
도시 기본 양로보험 참여인 수(억 명)	2.57	3.57	3.41(2014년)
도시 기본 의료보험 참여인 수(억 명)	4.32	4.5	5.98(2014년)
실업보험 참여인 수(억 명)	1.34	1.6	1.7(2014년)
공상보험 참여인 수(억 명)	1.62	2.1	2.06(2014년)
출산보험 참여인 수(억 명)	1.23	1.5	1.7(2014년)
사회보장 카드 발급수량(억 장)	-	8.0	8.09(2015년 10월)

자료: 人力资源和社会保障事业发展(2011), 「“十二五”规划纲要」; 中国新闻网(2015); 중국국가통계국 DB(검색일: 2015. 9. 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있으므로 2015년 말까지 목표치인 3억 5,7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2차 5개년 계획이 발표된 후에 나타난 중요한 보완적 정책들을 살펴 보자. 먼저 제12차 5개년 계획이 발표된 직후인 2011년 7월에 「사회보험법(社會保險法)」이 시행되면서 사회보장체계를 최초로 법제화했다. 「사회보험법」은 상기 5대 보험을 규정하고, 각각의 보장 범위와 대상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법」은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에서, 보험납입자가 지역을 옮겨 거주하더라도 이전 지역의 보험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거주지가 불안정한 농민공과 사회적 이동이 심한 젊은이들을 위한 사회보장조치이다. 이를 위해서 양로보험은 전국 통합시스템을, 나머지 보험은 성급(省級) 통합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여지나(2011)는 「사회보험법」의 가장 중요한 개혁으로 양로보험 운영방식의 전환을 들고 있다. 즉 기존에 현재 노동자들이 버는 수입으로 퇴직자들을 보조해주는 현수현부(現收現付)방식에서, 자신의 납입금 운용수익으로 퇴직 후 자신을 보조하는 적립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적립방식을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이므로 이를 부분적으로 적용한 ‘부분적립방식’을

일단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중국이 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2013년 말에는 「기업연금 직업연금 개인소득세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sup>16)</sup>가 발표됐다. 이 「통지」는 기업 납입분에만 주어지던 소득세 혜택을 2014년부터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또한 2014년 2월 발표된 「전국 통일 도농 주민양로보험제도 건립에 관한 의견」<sup>17)</sup>과 같은 해 7월의 「도농 양로보험 연계제도 잠정시행 방법」<sup>18)</sup>은 모두 현재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돼 있는 양로보험제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도농(城鄉)주민 양로보험과 도시(城鎮)근로자 양로보험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근로자 양로보험은 직장(기업)의 보조납부가 더해지므로 도농주민 양로보험보다 수령액이 더 크다. 2014년에 등장한 조치들은 도농주민 양로보험 적용자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도시근로자 양로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양로금 표준 상향조정, 의료보험 재정보조 확대 등의 정책적 보완을 계속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

16) 财政部·人力资源社会保障部·国家税务总局(2013. 12. 6), 「关于企业年金职业年金个人所得税有关问题的通知」,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312/t20131206\\_1021661.html](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312/t20131206_1021661.html)(검색일: 2015. 8. 25).

17) 国务院(2014a. 2. 21), 「关于建立统一的城乡居民基本养老保险制度的意见」, [http://www.gov.cn/zwggk/2014-02/26/content\\_2621907.htm](http://www.gov.cn/zwggk/2014-02/26/content_2621907.htm)(검색일: 2015. 8. 25).

18) 人力资源社会保障部·财政部(2014. 7. 1), 「城乡养老保险制度衔接暂行办法」, <http://www.gkstk.com/article/78931875.html>(검색일: 2015. 8. 25).

## 다. 소비자금융 확대

박두정(2014)에 따르면 중국의 가계대출 비중은 30.1%(2011년)로 한국 91.1%, 미국 83.7%, 일본 62.7%(이상 2012년)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즉 중국은 가계대출을 확대하여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큼에도 아직 가계대출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형욱(2010)은 그 원인으로 대형 국유은행의 기업대출 중시, 미흡한 개인 신용정보 구축, 그리고 소비금융에 대한 의식 결여를 꼽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소비자금융을 통한 소비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 2009년 7월 「소비금융회사 시행관리 방법」<sup>19)</sup>을 발표했다. 이는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이 「방법」에서 제시된 소비금융회사는 예금수탁기능 없이 소액·단기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비은행 금융기구이다.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 없는 빠른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 소비금융회사들은 기존 대형은행의 전문 자회사로 설립되도록 하는 방침에 따라 2010년 중국은행(中國銀行)·베이징은행(北京銀行)·청두은행(成都銀行)을 시범은행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세 은행은 각각 상하이(上海)·베이징·청두에 쑹인(中銀)·베이인(北銀)·쓰촨면청(四川錦程)이란 이름으로 소비금융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이 세 은행의 자본금은 각각 5억 위안·3억 위안·3억 2,000만 위안이다. 그 후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PPF<sup>20)</sup>라는 외국계 종합 금융회사에 자본금 3억 위안으로 텐진(天津)

19) 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2009. 7. 22), 「消费金融公司试点管理方法」, [http://www.china.com.cn/policy/txt/2009-08/14/content\\_18333170.htm](http://www.china.com.cn/policy/txt/2009-08/14/content_18333170.htm)(검색일: 2015. 8. 25).

20) 1991년 투자펀드 운용회사로 체코에서 세워졌으며, 현재 동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16개국에서 다양한 투자활동을 하고 있다.

에 제신(捷信)소비금융회사를 설립하도록 허가했다. 2012년 말 이 네 회사의 대출 총액은 37억 900만 위안이었다.<sup>21)</sup> 2013년 소비금융회사 시범 설립지역은 16개로 확대됐고 2015년 10월 현재 10개의 소비금융회사가 운영 중이다. 한편 리커창 총리가 2015년 6월 주재한 국무원 회의에서 시범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으므로 소비금융회사는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설립 비준 권한을 성 정부에 이양함에 따라 민간자본·해외자본·인터넷업체 등이 자유롭게 소비금융회사를 설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9월 말 현재 10개 소비금융회사의 대출 총액은 460억 위안으로 2014년 208억 8,000만 위안에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신속한 소비금융 확장은 부작용도 낳고 있다. 소비금융에서 조달된 돈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유입되어 자산거품을 형성하고 대출의 부실화를 초래한 것이다. 2015년 들어 급증한 소매금융 대출액 중 상당 부분이 증시로 흘러들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가운데 2015년 9월 현재 소비금융회사의 불량채권률은 2.85%<sup>22)</sup>로 2014년 말의 1.56%에서 크게 높아졌다.

한편 2015년 대규모 증시 거품 발생과 붕괴의 배후에 주식투자금 대출업체인 이른바 페이즈(配资) 회사가 있었다. 페이즈 회사는 주식시장의 활황을 틈타 주식투자금을 높은 이자율로 대출해주고 짧은 기간 내에 회수하는 금융회사였는데, 이는 부채에 따른 리스크만 가져올 뿐 실질적인 소비진작효과는 전혀 없는 금융행태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정부는 각종 페이즈 회사에 대한 규제를 착수했다. 민간금융의 이러한 부작용은 향후 소비금융회사의 발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21) 바이두(百度) 백과사전(百科), <http://www.bike.baidu.com>(검색일: 2015. 10. 23).

22) 财新网(2015. 10. 29), 「消费金融公司不良率提高至2.85%」, <http://finance.caixin.com/2015-10-29/100867726.html>(검색일: 2015. 11. 3).

### 3.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전략

#### 가. 임금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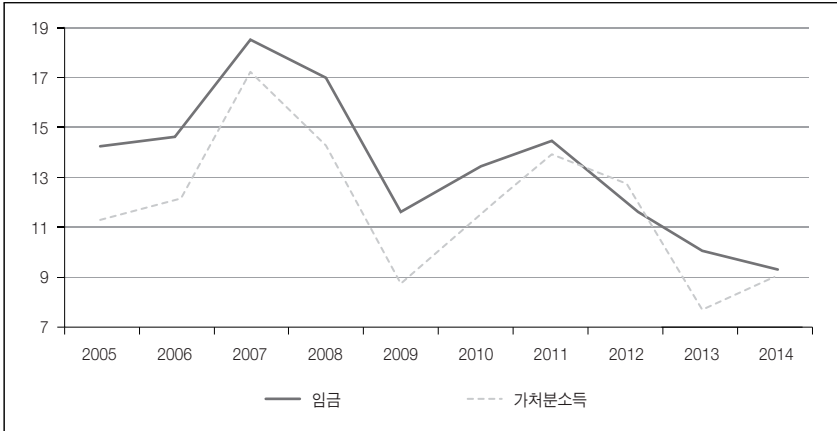
소비진작을 위한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전략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임금인상이다.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국부(國富)에서 민부(民富)로의 전환’이라는 명제 아래 이를 다뤘다. 즉 성장률을 낮추고 주민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높여(一降一升) 같은 수준(7%)으로 맞춘다는 것이다. 제11차 5개년 계획(2006~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1.2%였던 반면 도시와 농촌의 주민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각각 9.7%, 8.9%에 머물렀다. 개혁·개방 이후부터 봐도 2009년까지 경제성장률은 9.9%였던 반면, 도시와 농촌 주민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7.3%와 7.2%에 그쳐 경제성장의 성과에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다(이승신, 최필수, 여지나 2011). 즉 인민들의 소득보다 국가와 기업의 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인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표준을 매년 13%씩 인상하여 실질 평균 임금의 40%선을 유지한다는 것과 주민 가처분소득을 매년 7%씩 성장시키겠다는 지표를 제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중국인구의 고령화와 노동가능인구 감소, 그리고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이기도 하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15~64세 사이의 인구가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아직 중국의 도시화율은 55% 미만으로 더 진행될 여지가 있지만 동부연해지역을 중심으로 농민공으로 대표되는 저임금 노동자 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림 2-16. 도시 취업자 평균 임금 및 도시 가구 일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

(단위: %)



주: 도시 가구 일인당 가처분소득은 2013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집계하고 있으므로 2012년 이전과 엄밀한 비교는 할 수 없음.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DB(검색일: 2015. 9. 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러한 정책과 여건에 따라 중국의 최저임금은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제12차 5개년 계획 후반기에 들어 최저임금 증가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가이드라인이 각기 발표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집계를 하기가 어렵다. 가령 선전시(深圳市)는 2015년에 최저임금을 22.3% 인상했고 베이징시(北京市)는 10.3% 인상했지만,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은 2012년 이후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를 전제로 우리나라의 노조연합회에 해당하는 중화총공회(中華總工會)의 발표를 인용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저임금 증가율은 각각 22% → 20% → 17% → 14%와 같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김영선 2015). 최저임금을 인상한 지역 수도 같은 기간 24개 → 25개 → 26개 → 18개와 같이 2014년에 들어 확연히 감소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더 나빠지면서 정책적으로 인건비 상승을 주도하기가 부담스럽기 때

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금과 가처분소득도 2011년 이후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림 2-16]에 따르면 도시 취업자 평균 임금과 도시 가구 일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모두 2011년 이후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이다. 소득증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경기둔화에 따라 경제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에서 2011년까지 경기부양을 통해 10%에 가까운 성장을 했던 중국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7.7% → 7.7% → 7.3%와 같이 눈에 띄게 느려진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증가율 추세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12차 5개년 계획에서 목표로 했던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성장률보다 높게 달성하겠다는 방침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 나. 서비스업 진흥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에 소비진작과 관계가 깊다. 2014년 기준 GDP 100만 위안당 고용창출인원은 제조업이 7.7명인 반면 서비스업은 10.3명이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경제성장률보다 소득증가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도 서비스업의 진흥이 필요하다.

서비스업은 또한 소비여건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도 소비진작과 관계가 깊다. 서비스업의 발달은 다양한 소비루트의 창출을 의미하고,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원하는 물품을 소비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2010년 43.2%에서 2015년 47.2%로 높인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2014년에 이미 조기 초과 달성됐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2011~14년 사이 44.3% → 45.5% → 46.9% → 48.1%로 높아진 반면, 제조업 비중은 같은 기간 46.1% → 45.0% → 43.7% → 42.7%과 같이 낮아진 것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2012년에 역전됐다. 고용인원의 경우 서비스업이 원래 많았는데 2014년의 경우 서비스업은 3억 1,364만 명, 제조업은 2억 3,099만 명이였다.

사실 12차 5개년 계획에서 서비스업 비중 증가 목표는 상당히 야심찬 것으로 인식됐다. 11차 5개년 계획에서 서비스업 비중 증가 목표달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11차 계획 당시 GDP 중 서비스업 비중 증가 목표는 3%p였으나 실제로는 2.5%p 성장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12차 계획이 4%p 증가를 기획했던 것이므로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던 것이다.

중국정부는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 몇 건의 정책을 발표했다. 2012년 12월에는 「서비스업 발전 12.5계획」<sup>23)</sup>이 구체화되어 발표됐다. 서비스업 발전의 총근간인 이 문건은 서비스업을 ‘생산성’, ‘생활성’, ‘농촌’, ‘해양’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각각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생산성 서비스업이란 금융업, 교통운수, 물류, 하이테크서비스, 설계컨설팅, 과학기술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전자서비스, 엔지니어링 자문, 인력자원, 에너지 절약, 기타 신흥산업의 12가지를 지칭한다. 한편 생활성 서비스업이란 비즈니스 서비스, 문화산업, 여행업, 헬스서비스, 법률서비스, 가정서비스, 체육서비스, 양로서비스, 부동산서비스의 9가지가 포함된다.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 위 「계획」은 외자 유치와 해외진출의 병행, 그리고 주요 서비스 부문의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에 그치지 않고 고부가가치서비스의 발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기초 속에 2011년 9월 「서비스 무역 발전 12.5계획 강요」<sup>24)</sup>가 발표됐다. 중국은 상품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반면 서

---

23) 国务院(2012. 12. 1), 「服务业发展“十二五”规划」, [http://www.gov.cn/zwzgk/2012-12/12/content\\_2288778.htm](http://www.gov.cn/zwzgk/2012-12/12/content_2288778.htm)(검색일: 2015. 8. 25).

비스무역에서는 꾸준히 적자를 보고 있으므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전익호 2012). 이 「강요」는 관광, 정보서비스, 기술무역, 건축서비스, 해양운송 등 30개 주요 분야를 식별하여 중점육성방침을 밝히고 있다(KIEP 북경사무소 2012a).

2013년 11월의 3중전회에서는 서비스업 중 ‘점진적 개방’ 분야로 금융·교육·문화·의료를, ‘외자 진입의 제한 철폐’ 분야로 육아·양로·건축설계·회계·상업물류·전자상거래를 꼽았다(최필수, 문익준, 이한나 2013).

한편 2014년 8월에는 「생산성 서비스 산업 발전 및 산업구조 향상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sup>25)</sup>이 같은 해 10월에는 「과학기술 서비스 산업 발전에 관한 몇 가지 의견」<sup>26)</sup>이 발표됐다. 이 두 각론적 「의견」들은 「계획」에서 제시된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담고 있다.

## 다. 위안화 절상

통화가치의 상승은 곧 구매력의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창출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중국은 그동안 저평가된 통화가치에 기반하여 수출을 통한 국제수지 흑자를 달성해왔기에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무역수지 흑자를 지양하고, 수출과 수입이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는 ‘균형무역’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겠다는 말이 아니라 통화가치 조정을 통해 내수 위주의 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

24) 商务部(2011. 9. 27), 「服务贸易发展十二五规划纲要」, <http://tradeinservices.mofcom.gov.cn/g/2014-03-31/185523.shtml>(검색일: 2015. 8. 25).

25) 国务院(2014c. 7. 28), 「关于加快发展生产性服务业促进产业结构调整升级的指导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4-08/06/content\\_8955.htm](http://www.gov.cn/zhengce/content/2014-08/06/content_8955.htm)(검색일: 2015. 8. 25).

26) 国务院(2014d. 10. 28), 「关于加快科技服务业发展的若干意见」, <http://politics.people.com.cn/n/2014/1028/c1001-25922956.html>(검색일: 2015. 8. 25).

종합적인 전략의 일환이다. 즉 저평가된 통화에 기반한 세계의 공장에서 강한 통화에 기반한 세계의 시장으로 변신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sup>27)</sup> 이를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과거 환율정책을 개괄해보자.

중국은 1994년 이중환율제를 포기하고 위안화 가치를 사실상 달러에 페그시켰다. 1993년 달러당 5.76위안 정도였던 공식 환율을 일거에 폐기하고 달러당 8.62위안이었던 시장환율로 한번에 이동한 충격으로 1994년과 1995년에 20%가 넘는 물가상승을 겪었다. 그 후 중국은 낮은 화폐가치를 무기로 수출 위주의 성장을 했다. 2001년 12월 WTO 가입 후에는 더 빠른 속도로 수출이 증가했다. 이때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이뤄졌어야 했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경기 과열과 무역 흑자의 폭증을 경험했다.

중국은 2005년 7월에 가서야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했다는 구실과 함께 위안화의 점진적 절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7월부터 갑자기 약 2년간 위안화 절상이 중단되고 사실상 달러에 再페그됐다. 수출을 통한 경기방어가 그 목적이었다. 그러나 2010년 6월부터는 다시 완만한 절상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2012년 이후 미국이 양적완화를 천천히 벗어나면서 위안화의 상대적 가치가 절상 일변도로 가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지금과 같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한 위안화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천천히 절상될 이유가 있다.

이렇듯 201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위안화의 절상은 균형무역 추구, 위안화 국제화, 대외 영향력 확대 등 대단히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정책조치이다. 그 중에서도 소비진작과 관련해서는 물가안정, 구매력 향상

---

27) 물론 위안화의 절상은 위안화의 국제화라는 종합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하고, 더 넓은 정치·경제적 함의를 지니나, 여기서는 그것이 실질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지는 측면을 강조하여 기술한다.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위안화를 절상하면 중국인들의 실질 구매력이 올라가고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곧 소비진작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위안화의 절상은 수출감소를 초래하므로 중국당국은 향후 중국이 무역 흑자가 아닌 균형무역을 추구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2015년 8월의 갑작스러운 평가절하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위안화는 2015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미달러대비 4.5% 평가절하되었다. 이는 위안화 환율을 3년 전 수준으로 되돌린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중국 인민은행은 매일 오전 고시하는 매매 기준율 방식을 바꾼 탓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인민은행의 기준환율이 그 전날 시중은행의 보고환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중은행이 무엇을 보고하고 외환당국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사실상 베일에 쌓여 있었다. 그런데 2015년 8월 11일을 기점으로 전일의 외환시장 종가를 기준환율 결정에 명시적으로 참고하기로 한 것이다. 정확히는 전일 시장의 마감가와 외화수급 등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sup>28)</sup> 그래서 IMF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sup>29)</sup>

그러나 8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는 좀 더 시장친화적인 환율결정방식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중국당국이 이 방식을 도입할 때 위안화가 절하될 줄 몰랐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성장전략의 전환에 궤를 맞추어 위안화 절상을 점진적으로 진행해왔지만 최근 경기가 지나치게 둔화되면서 수출을 일정 부분 부양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즉 위안화의 절상을 통한 국내 소비진작효과보다 절하를 통한 수출진작효과를 선택한 것이다.<sup>30)</sup> 향후 위안화 가치의 향방은 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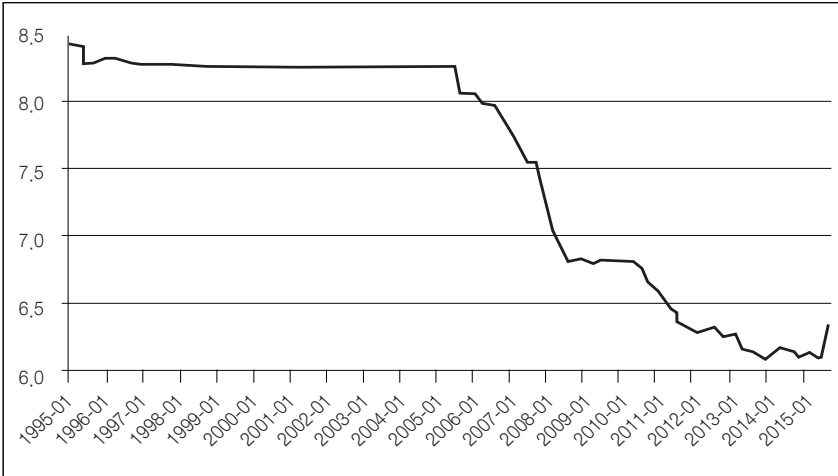
---

28)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5), p. 1.

29) 지만수(2015), p. 22.

그림 2-17. 위안화 대달러 환율 추이(1995년 1월~2015년 9월)

(단위: %)



주: 월평균 spot rate.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9. 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적인 절상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국면에 접어들었다. 또한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정책이 내수 소비 일변도가 아니라는 강력한 시그널은 전달됐다.

실제로 시진핑 지도부 들어서 ‘제조업 2025’, ‘일대일로(一帶一路)’, ‘인프라 현대화’ 등 공급 위주의 경제정책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투자와 수출이 동반되는 이러한 공급 드라이브에는 위안화 가치가 낮은 편이 좀 더 유리하다. 결국 위안화 가치의 방향과 그 속도는 중국 지도부가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공급에 두느냐, 수요에 두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30)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측되는 시점에서 미리 위안화의 가치를 조정하여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 라. 직접보조금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중국정부는 한시적으로 몇 가지 소비 보조금 제도를 운영했다. 농촌주민이 가전제품을 사면 보조금을 주는 가전하향(家電下鄉), 중고제품을 신형으로 교환하면 보조금을 주는 이구환신(以舊換新)이 대표적인 것이다. 주로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했던 이 정책들은 후에 범위를 자동차로 넓혀서 자동차하향(汽車下鄉)으로 이어졌고, 에너지 절약 제품을 특별히 더 우대한다는 면에서 절능혜민(節能惠民)정책도 나타났다.

가장 먼저 등장한 정책은 2008년 12월 가전하향이였다. 농촌주민이 TV · 냉장고 · 휴대전화 · 세탁기를 살 때 판매액의 13%를 보조해주는 것이었다. 보상한도액은 TV 2,000위안, 냉장고 2,500위안, 휴대전화 2,000위안, 세탁기 1,000위안이었다. 그런데 가전하향정책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2월부터 산둥(山東) · 허난(河南) · 쓰촨(四川) · 칭다오(靑島)와 같은 일부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인 그 시점부터 시범제도를 운영했다는 것은 가전하향정책이 농촌지역의 소비진작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돼 있었음을 시사한다. 가전하향의 품목대상은 2009년 오토바이 · 컴퓨터 · 온수기 · 에어컨으로, 2010년에는 전동자전거 · DVD 플레이어 · 전자밥솥 등 다양한 품목이 지역별로 달리 추가됐다. 가전하향정책은 2007년 시범 도입 당시 제시된 4년 시한을 1년 연장하여 2013년 1월에 종료됐다.

이구환신정책은 2009년 6월에 시작됐다. 4년으로 기획됐던 가전하향과 달리 애초 1년 시한을 두 번 연장하여 2011년 말에 종료됐다. TV ·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 · 컴퓨터의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새 제품 가격의 10%를 보조해주는 것이다. 보상한도액은 컴퓨터 400위안, 에어컨 350위안, 세탁기 250위안, 냉장고 300위안이었다.

이 두 정책은 상당한 소비유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집계된다. 상무부(商務部)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말까지 5년간 가전하향제품의 누적 판매대수는 2.98억 대, 판매액은 7,204억 위안을 기록했다.<sup>31)</sup> 이구환신의 경우도 3년간 9,248만 대의 판매로 3,420억 위안의 소비를 가져왔다. 이구환신에 투입된 중앙재정은 300억 위안이었다. 이상의 정책은 애초에 대상업체를 중국 로컬업체로 한정시키면서 하이얼·거리·하이신·메이더·창웨이 등이 수혜업체로 떠올랐다. 이 업체들은 직접적인 판매수익은 물론 물류센터와 판매점을 농촌으로 확장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었다.

이밖에 절능혜민보조금정책이 있다. 에너지 효율등급이 1·2의 10대 가전제품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에어컨을 예로 들면 1등급 제품을 구매할 때 대당 500~850위안을, 2등급 제품은 300~650위안을 보조해주도록 돼 있다. 이 정책의 시종(始終)은 제품별로 상세한 실시 세칙에 따랐으므로 일괄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2009년 5월 「에너지 절약제품 혜민공정에 관한 통지」<sup>32)</sup>와 함께 시작되어 2013년 5월 말로 모든 제품에 대한 혜택이 중단됐다.

자동차하향과 이구환신 정책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말까지 시행됐다. 농민들이 삼륜차·저속화물차를 폐기하고 경량 화물차나 배기량 1,300cc 이하의 소형 승합차를 사면 새차 가격의 10%를 보조해주고 구차량에 대한 폐차비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것이다. 단 오토바이의 경우는 폐차 교환 조건 없이 농민이 새로 구매한 가격의 13%를 보조금으로 준다. 오토바이 보조금정책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월 말까지 시행됐다. 이러한 정책

31) 中国网(2013. 1. 8), 「全国累计销售家电下乡产品2.98亿 实现销售额7204亿」, <http://news.f139.com/detail/993262.html>(검색일: 2015. 11. 3).

32) 财政部·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2009. 5. 18), 「关于开展“节能产品惠民工程”的通知」, [http://www.law-lib.com/law/law\\_view.asp?id=281805](http://www.law-lib.com/law/law_view.asp?id=281805)(검색일: 2015. 8. 25).

에 힘입어 2009년과 2010년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각각 48.3%와 32.4% 증가하여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 됐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판매량 증가속도가 2.5%에 그쳐 자동차하향정책의 여파가 드러났다.

이상의 보조금정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즈음에 기획되어 제12차 5개년 계획 이전에 대부분 종료된 것들이고, 시진핑 지도부에 들어서 다시 시행하고 있지 않다.

## 4. 소비구조 변화 전략

이제까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임금인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시키는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4절에서는 소비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는 정책들로 산아제한 완화와 부동산 시장 건전화를 살펴본다.

### 가. 산아제한 완화

2015년 10월, 5중전회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두 자녀 출산을 제한 없이 허용키로 결의했다. 1983년부터 강제로 실시해온 한 자녀 정책이 큰 틀에서 허물어진 것이다. 이른바 계획생육(計劃生育)이라는 이름의 이 정책은 각 지역별로 약간씩 다르게 적용되기는 했지만 적어도 도시지역 거주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한 자녀가 강요되었고 이를 위반하면 막대한 벌금은 물론 심할 경우 해고에 이르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1990년대 들어서 지역별로 부부 두 사람 모두가 독생자일 때 두 자녀 출생을 허용케

했다. 2013년 3중전회에서 부부 둘 중 하나만 독생자일 경우로 완화된 바 있다. 이번 5중전회에서는 아무 제약 없이 둘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러한 산아제한 완화는 생산 측면에서 노동가능인구를 확충하여 인구 부양력을 높이는 것과 수요 측면에서 인구증가를 통한 총수요증가의 두 가지 전략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유지했던 것은 중국의 제한된 자원으로 과다인구를 부양할 수 없으리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한 다자녀로 분산되기 쉬운 교육자원을 한 자녀로 응집시켜 높은 소양을 지닌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1960~62년의 대기아사태가 이러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1971년부터 계획생육이란 개념이 도입됐고 ‘늦게 · 길게 · 적게’ 아이를 낳자는 완 · 시 · 샤오(晚-稀-少)정책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출산 연령과 기간에 대한 규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마침내 1983년에 이르러서는 아예 한 자녀를 강제하는 정책이 도입됐다. 비록 농촌에서는 첫째가 딸일 경우 둘째를 낳을 수 있도록 하고, 소수민족의 경우에도 둘째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책은 최근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들어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인구보너스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즉 인구의 연령구조가 변하면서 노동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대두됐고, 이는 2014년에 실현됐다. 2014년 노동가능연령(15~64세) 인구가 2013년 10억 582만 명에서 10억 469만 명으로 처음으로 감소했다. 노인부양비율은 2005년 10.7%에서 2014년 13.7%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투입요소인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한다. 그동안 중국이 젊고 풍부한 노동력이 필요 이상으로 공급되는, 이른바 인구보너스

를 경험했다면 이제부터는 노동력을 보충하여 보너스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이 공급 측면에서 산아제한을 완화하는 배경이라면, 총수요의 증가라는 측면에서도 산아제한 완화를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경험하고 있듯이 젊은 인구의 감소는 육아·교육·주택·내구소비재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수요를 위축시킨다. 산아제한 완화는 이런 측면에서 소비의 진작을 가져올 수 있다.

선완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전면 두 자녀 허용 정책의 영향을 받아 매년 태어날 아이의 숫자는 정책 적용시점부터 4년 동안 각각 1,143만 8,000명, 2,001만 6,000명, 1,429만 1,000명, 1,143만 8,000명과 같다.<sup>33)</sup> 여기에 같은 기간 중국 가정의 평균 영유아 소비로 추정되는 9,788.5위안, 1만 963.1위안, 1만 2,278.7위안, 1만 3,752.1위안을 곱하면 이번 정책이 가져올 영유아 시장창출효과는 향후 4년간 각각 1,119억 6,000만 위안, 2,194억 4,000만 위안, 1,755억 5,000만 위안, 1,572억 9,000만 위안과 같다.

선완증권의 이 추정은 일인당 영유아 소비를 단순히 2배로 곱하여 과다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영유아제품은 의류와 유모차 등을 몰려 쓸 수 있으므로 둘째 아이에게 투입할 비용이 첫째 아이에게 투입한 비용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연간 1,000억 위안이 넘는 새로운 시장수요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이것이 ‘영유아’ 수요인데 이들이 자라면서 지속적으로 창출한 수요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발적인 저출산으로 인해 두 자녀 허용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 2014년 새로 태어난 아이의 수는 당국의 예상치인 2,000만 명

33) 申万宏源(2015. 10. 16), 「人口政策变化及“全面二孩”政策影响评估」, [http://stock.cnstock.com/stock/smk\\_gszbs/201510/3591506.htm](http://stock.cnstock.com/stock/smk_gszbs/201510/3591506.htm)(검색일: 2015. 11. 3).

에 못 미친 1,690만 명에 그쳤고, 2015년 5월 조사에서도 부부 중 한 명이 독생자여서 둘째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된 부부 1,100만 쌍 가운데 145만 쌍만이 둘째를 출산하겠다고 했다.<sup>34)</sup> 이번 5중전회의 조치로 새로 둘째를 낳을 수 있게 된 부부는 대략 9,000만 쌍<sup>35)</sup>이다. 이들 중 실제로 얼마나 둘째를 낳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 나. 주거비용 비중 축소

중국주민의 소득 중 상당 부분이 주택에 매여 있다. 최근 20년간 도시 주민 가처분소득은 7.71배 증가한 반면 주거비용은 9.03배 증가했다. 2012년 현재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소비대출 중 개인주택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6.3%로 신용카드대출(11.1%), 자동차대출(1.5%) 등보다 월등히 높았다.<sup>36)</sup> 한편 국가통계국이 집계하는 주민 평균 지출액 중 주택소비의 비중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현금’지출만을 대상으로 집계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소비의 비중이 인위적으로 낮게 잡혀 있어서 중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의 주택수요는 기본적으로 높다. 매년 2,000만 명에 달하는 신규 도시 진입 농민공에 600만 명의 대졸생, 1,300만 명 이상의 결혼커플이

34) 한겨레신문(2015. 10. 29), 「중국 한 자녀 정책 35년만에 폐지」,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715204.html>(검색일: 2015. 11. 3).

35) China Daily(2015. 10. 30), “Family planning policy sees big overhaul,” [http://www.chinadaily.com.cn/china/2015cpcplenarysession/2015-10/30/content\\_22313174.htm](http://www.chinadaily.com.cn/china/2015cpcplenarysession/2015-10/30/content_22313174.htm)(검색일: 2015. 11. 3).

36) 中国行业研究网(2015), 「中国住房支出在居民所有消费中占比最高」, <http://www.chinairn.com/print/4140315.html>(검색일: 2015. 11. 3).

있다. 여기에서 소득이 높아지면서 고소득층의 더 나은 주택을 원하는 수요까지 고려하면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중국의 부동산 수요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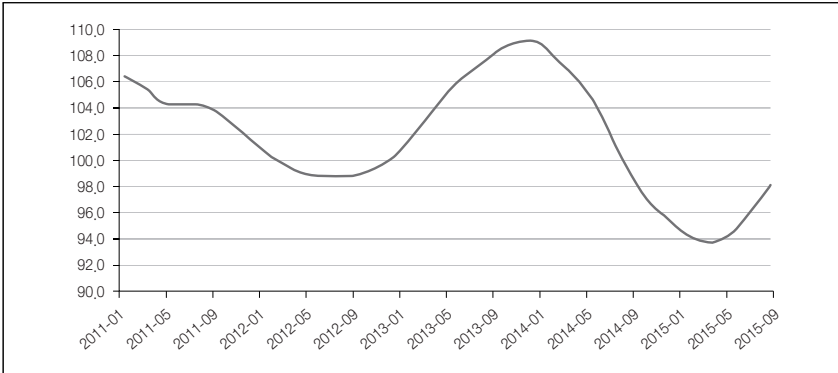
그런데 주민들의 소득이 부동산에 매여 있으면 소비진작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월세를 내건 은행대출을 받건간에 주택에 대한 지출은 여가·문화·자동차 등 잠재적인 다른 지출을 잠식한다. 또한 농민공과 같은 저소득층의 불안정한 주거조건은 도시에서의 정주를 가로막는 진입장벽이기도 하다.

후진타오 지도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추구하여 제12차 5개년 계획에 담았다. 보장성 주택 공급이 그것이다.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서민형 보장성 주택을 총 3,600만 호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2011년과 2012년에 1,000만 호씩,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600만 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2010년의 보장성 주택 건설이 580만 호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매우 야심찬 목표였던 셈이다. 당국은 이러한 보장성 주택 건설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거품을 막고자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시진핑 지도부에 들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착공된 보장성 주택은 3,194만 호, 완공된 주택은 2,014만 호에 불과하다. 4년간 착공 개수는 1,043만 호 → 781만 호 → 630만 호 → 740만 호와 같았고 완공 개수는 432만 호 → 601만 호 → 470만 호 → 511만 호와 같았다.<sup>37)</sup> 중국 주택건설부는 2015년에 새로 착공되는 보장성 주택이 740만 호이므로 2015년 말까지 목표를

37) 胡鞍钢(2015), p. 17.

그림 2-18. 전국 70개 주요 도시 신규 주택 거래가격지수(2011년 1월~2015년 9월, 월별)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9. 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달성하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sup>38)</sup>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말한 3,600만 호 건설이 과연 ‘착공’인지 ‘완공’인지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보장성 주택 건설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2012년 이후 경기둔화 속에서 부동산 가격을 지탱하려는 지방정부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이 반치줘야 지역의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지역의 경기가 살아난다고 여기고 있는데, 보장성 주택 건설이란 형태로 저가주택을 공급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방정부 관료들은 토지사용권을 판매하여 재정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들에 할당된 보장성 주택을 건설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지방정부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시진핑 지도부에 들어서 보장성 주택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판자촌 개

38) 新华网(2015. 7. 17), 「“十二五”建设3600万套保障房的目标有望超额完成, [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5-07/17/c\\_1115960575.htm](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5-07/17/c_1115960575.htm)(검색일: 2015. 11. 5).

조 사업이다. 2015년 7월 중국정부는 ‘판자촌 개조 3년 계획’(2015~17년)을 발표하고 향후 3년간 판자촌 1,800만 호를 개조하겠다고 밝혔다.<sup>39)</sup> 그 중 2015년의 목표는 580만 호이다.

보장성 주택 대신 판자촌 개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후자가 주택의 신규 공급이 아니면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제로 기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보장성 주택 보급이 의도했던 주거안정과 소비진작효과를 누리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피해갈 수 있는 수단인 것이다.

## 5. 소결

이상을 통해 개괄한 중국 소비확대정책을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먼저 농민공 시민화 정책은 매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진행 중이다. 단 농민공 진입의 수요가 가장 큰 초대형 도시에 대한 호적 개방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농민공 문제가 가까운 미래에 중국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보장 확대정책은 각종 법규와 제도가 정비되고 정부의 재정투입이 늘어나면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제12차 5개년 계획의 지표들도 거의 모두 달성됐다. 장차 중국 전역을 커버하는 전산화된 사회보장시스템이 나타날 예정이고, 이는 중국의 사회보장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다. 연금고갈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립시스템으로의 전환도 이미 2011년부터 도입됐다. 중국정부가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

39) 经济参考报(2015. 7. 1), 「国务院: 将制定三年计划加快棚户区改造」, [http://news.xinhuanet.com/house/cq/2015-07-01/c\\_1115775739.htm](http://news.xinhuanet.com/house/cq/2015-07-01/c_1115775739.htm)(검색일: 2015. 11. 5).

평가된다.

소비자금융 확대는 중국의 민간금융 자유화와 맞물려 천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2015년 6월 소비자금융 확대방침이 천명되고, 주식과 부동산 등으로 해당 자금이 유입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좀 더 신중한 감독과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인상은 12·5규획의 목표를 기본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 들어 증가폭이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가 심한 지역에서는 아예 상승이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 가처분소득 증가율도 2011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임금인상부문은 경기둔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평가된다.

서비스업의 비중을 늘린다는 12·5규획의 목표는 2014년에 이미 달성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조업의 불황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최근 중국정부는 서비스업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방과 육성이라는 양면정책을 펼치고 있다.

위안화 절상은 2005년 이후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나 2015년 6월 갑작스러운 절하가 나타난 바 있다. 실제로 위안화의 절상은 매우 완만하게 이뤄지고 있고 2012년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 후에는 절상과 절하가 반복되는 추세였다. 중국의 무역 흑자가 증가하지 않고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위안화 절상도 단방향추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시진핑 지도부가 주도하는 일대일로, 제조업 2025 등 다양한 공급 위주의 정책을 볼 때 위안화 가치를 절상 일변도로 관리하지 않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직접보조금정책은 금융위기 때 시행된 후 현재는 모두 종료됐다. 종료 직후 소비가 감소하는 부작용도 약하게 나타난 바 있다.

표 2-4. 중국 소비확대정책 일람

범주	정책	내역 및 현황	평가
저축 률 축소 전략	농민공 시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년 농민공 보호 개념 도입</li> <li>• 2008년 농민공 호적 개방 본격적 시행</li> <li>• 2014년 신형 도시화 천명</li> </ul>	도시 호적 개방은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진행 중
	사회보 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6년 사회보장 개념 도입</li> <li>• 1993년 의료보험 도입</li> <li>• 1998년 노동사회보장부 신설</li> <li>• 2011년 12·5계획 5대 보험 지표 제시</li> <li>• 2011년 사회보험법 시행, 적립 시스템 도입</li> <li>• 2013년 기업의 연금 납입분에 대한 소득세 혜택 확대</li> <li>• 2014년 도농 양로보험 통합 천명, 전국 사회보장시스템 통합 작업 중</li> </ul>	2015년 말 현재 12·5계획 조기 달성
	소비자 금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3개 시범 소매금융회사 설립</li> <li>• 2015년 6월 소비금융회사 확대 천명</li> <li>• 2015년 10월 현재 10개 회사 운영 중</li> </ul>	소비자금융의 자산시장 유입 우려 대두
가계 가처 분 소득 증대 전략	임금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12·5계획, 최저임금표준 매년 13% 인상, 주민가처분소득 매년 7% 인상 천명</li> </ul>	최근 경기하락에 따라 최저임금 증가율 및 가처분소득 증가율 하락 추세
	서비스 업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12·5계획, 서비스업 비중 제고(47.2%) 천명</li> <li>• 2012년 서비스업 발전 12·5계획 발표, 이후 2014년까지 각 분야 서비스업 발전정책 잇따라 발표</li> </ul>	12·5계획 목표, 2014년 초과 달성(48.1%)
	위안화 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 3(2005. 6)→6. 9(2008. 6)→6. 1(2015. 6)→6. 4(2015. 9)</li> </ul>	완만한 상승세 지속, 최근 급격한 절하에 주목
소비 구조 변화	직접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전하향(2008. 12~2013. 1), 누적판매액 7,204억 위안</li> <li>• 이구환신(2009. 6~2011. 12), 누적판매액 3,420억 위안</li> <li>• 절능혜민(2009. 5~2013. 5)</li> <li>• 자동차하향·이구환신(2009. 3~2010. 12)</li> </ul>	현재 종료
	산아제 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雙獨二孩(1990년대)→單獨二孩(2013. 11)→全面二孩(2015. 11)</li> </ul>	실질적 출산증대효과 미지수
	주거 비용 비중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5계획 보장성 주택 3,600만 호 건설 천명</li> </ul>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보장성 주택 공급 지연

자료: 본문을 통해 저자 정리.

산아제한 완화도 2013년 3중전회와 2015년 5중전회를 통해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산아제한이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 실제로 둘째 아이 출산이 완전히 가능해졌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주거비용 축소를 위한 보장성 주택 보급은 지방정부들이 부동산 경기의 악영향을 우려한 나머지 예상에 못 미치는 진도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의 보장성 주택 보급의지도 그리 강해보이지 않는다.

## 제3장

# 중국의 소비 현황 분석

1. 소비규모
2. 소비격차
3. 소비구조
4.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



앞선 장에서 소비촉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번 장에서는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여 중국의 소비 현황이 어떠한지를 소비규모, 소비격차, 소비구조 및 품목별 소비시장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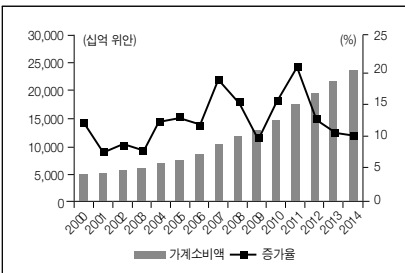
## 1. 소비규모

중국의 가계소비규모는 2000년의 약 4조 7,000억 위안에서 2014년 약 24조 1,500억 위안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명목 연평균 증가율은 12.4%에 달했다. 소비재 소매총액 또한 2000~14년 기간에 약 4조 위안에서 27조 위안으로 약 7배, 연평균 약 15%씩 증가하였다.

수입소비재시장을 살펴보면 2006년의 329억 달러에서 2014년 1,422억 달러로 그 규모가 4.3배 늘어났으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소비재 수입 비중도 2006년의 4.2%에서 2014년 7.2%로 3%p 증가하였다. 비록 아직 중국의 수입에서 중간재가 절대적인 비중(47.6%)을 차지하고 있긴 하나 하락하고 있는 추

그림 3-1. 가계소비액 및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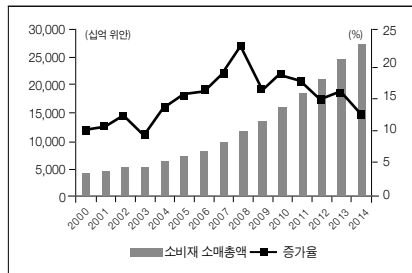
(단위: 십억 위안, %)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8. 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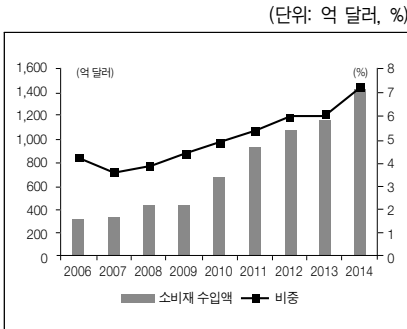
그림 3-2. 소비재 소매 총액 및 증가율 추이

(단위: 십억 위안, %)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8. 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3. 소비자 수입액 및 비중 추이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8. 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1. 중국 수입의 가공단계별 구성

(단위: %)

	2006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2006~14년)
일차상품	17.9	26.5	17.7
중간재	58.5	47.6	9.2
자본재	19.2	14.4	8.0
소비재	4.2	7.2	20.1
미분류	0.3	4.2	58.5
전체	100.0	100.0	12.0

주: 가공단계 분류는 UN의 BEC 분류를 따름.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 통계, <http://www.kita.net> (검색일: 2015. 3. 4)를 이용하여 작성. 정지현, 김부용(2015), p. 20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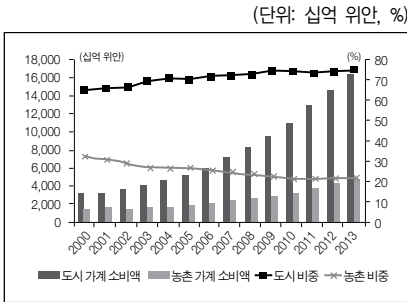
세이며, 이에 반해 소비재는 연평균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중국 전체 수입에서의 비중을 빠르게 확대해가고 있다.

## 2. 소비격차

중국의 고속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불균형의 심화는 소비격차의 확대 대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도농간, 계층간, 지역간 등의 측면에서 나타난다. 우선 도농간 소비격차를 살펴보면 전체 가계소비에서 도시지역의 소비가 약 7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농촌지역의 소비 비중은 2000년의 32.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에는 21.4%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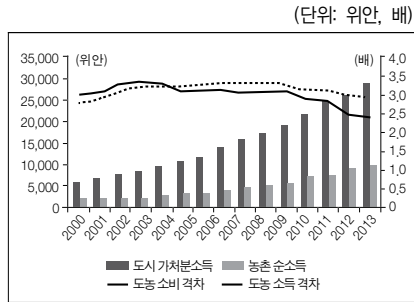
또한 도시와 농촌 지역의 1인당 소비지출액은 2000년대 들어 줄곧 3배 가량

그림 3-4. 도시와 농촌의 가계소비액 및 비중 추이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8. 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5. 도시와 농촌의 가계 1인당 소득과 소비 격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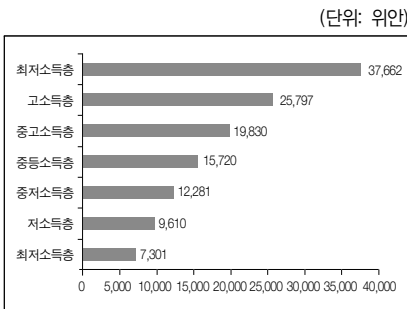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8. 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의 차이를 보였으나, 2010년 이후 소득격차가 줄어들면서 소비격차도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다. 2014년 기준, 도농간 소득격차와 소비격차는 각각 2.9배와 2.4배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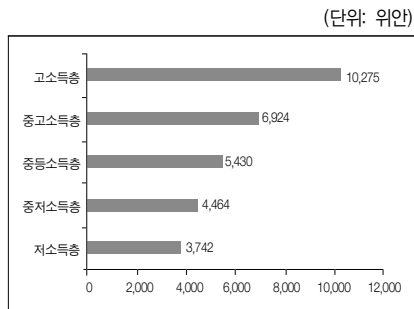
다음으로 계층간 소비격차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최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 간 소비격차가 2000년의 3.6배에서 2006년 6.2배로 정점을 찍은 후 점

그림 3-6. 도시 가계소비지출의 계층간 격차(2012년)



주: 중고소득층, 중등소득층, 중저소득층은 각각 전체 가구 수의 20%를, 나머지 소득층은 각각 10%를 차지함.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8. 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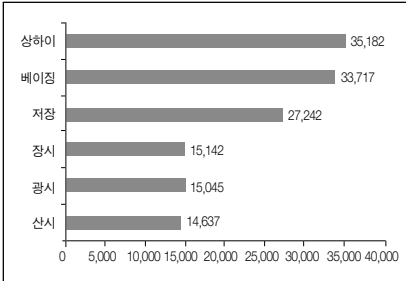
그림 3-7. 농촌 가계소비지출의 계층간 격차(2012년)



주: 고소득층, 중고소득층, 중등소득층, 중저소득층, 저소득층 각각 전체 가구 수의 20%를 차지함.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8. 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8. 도시 가계소비지출의 지역간 격차(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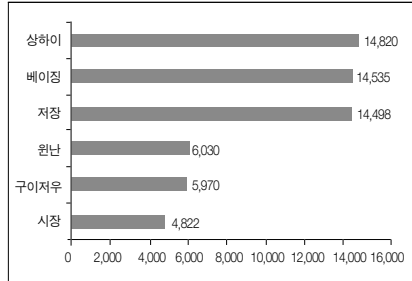
(단위: 위안)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8. 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9. 농촌 가계소비지출의 지역간 격차(2014년)

(단위: 위안)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8. 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차 하락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2012년에도 여전히 5.2배에 달한다. 한편 농촌지역의 계층간 소비격차는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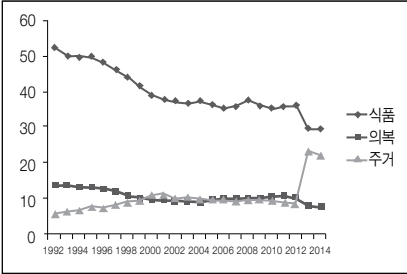
또한 중국의 지역간 소비격차도 존재하는바, 도시지역의 경우 2014년 기준 1인당 소비지출액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산시(山西) 간 격차는 2.3배였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상하이와 가장 적은 시장(西藏) 간 격차는 2.5배에 달했다.

### 3. 소비구조

중국 가계의 소비지출구조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초소비 중 식품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 관련 소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초소비 중 주거 관련 소비의 경우 1990년대 들어 주택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큰 변화가 없다가 최근 2년간 다시 급격히 증가하였다. 서비스 관련 소비 중 교통·통신 분야의 소비가

그림 3-10. 도시 기초소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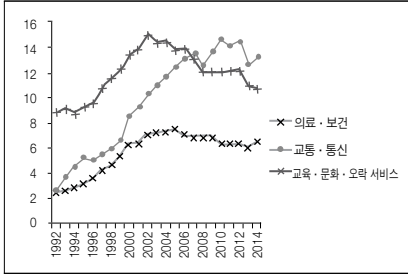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8. 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1. 도시 서비스소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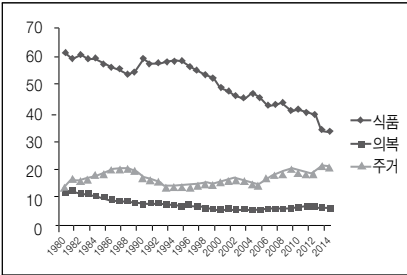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8. 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2. 농촌 기초소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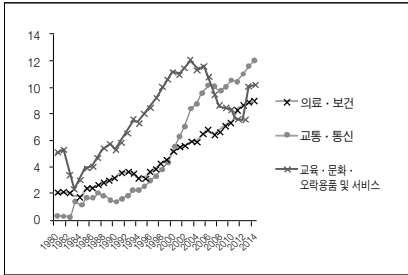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8. 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3. 농촌 서비스소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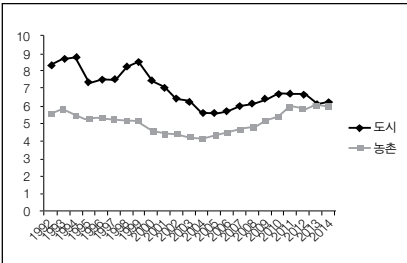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8. 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4. 도시와 농촌의 가정설비용품 및 서비스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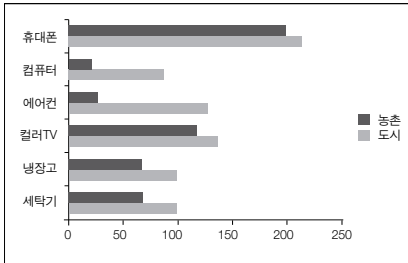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8. 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5. 도시와 농촌의 주요 내구소비재 보급률 비교(2012년)

(단위: %)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8. 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제품의 보급과 관련이 있다.

한편 가정설비용품 및 서비스의 경우 도시지역은 그 비중이 줄어든 데 반해 농촌지역은 증가하여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는 도시지역은 내구소비재 보급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신규 수요보다는 주로 교체 수요에 의한 소비이고, 농촌지역의 경우 신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4.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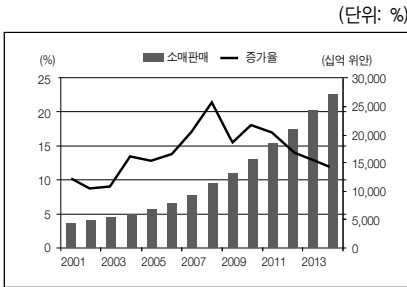
중국의 소매판매는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2010년 이후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최근 경기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인한 저축 선호 등이 소비증가율 둔화의 원인으로 평가된다. 2015 중국소비소강지수(中国消费小康指数)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가 ‘저축을 늘릴 것’이라고 답한 반면, ‘소비를 늘릴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1.4%에 불과하여<sup>40)</sup>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15년 이후 중국 소매판매는 10% 안팎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상품 소매판매의 감소가 서비스업 소매판매의 증가로 상쇄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 중국정부가 12.5규획에 따라 주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도시 가처분소득과 농촌 순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민 소비여력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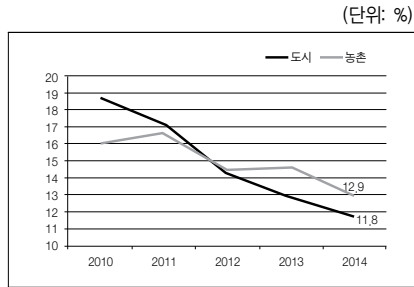
40) 「2015年中国消费的增长仍然会比较平稳」, <http://www.chinairm.com/news/20150105/103908224.shtml>(검색일: 2015. 11. 5).

그림 3-16. 중국의 소매판매 추이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11. 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7. 중국 도시·농촌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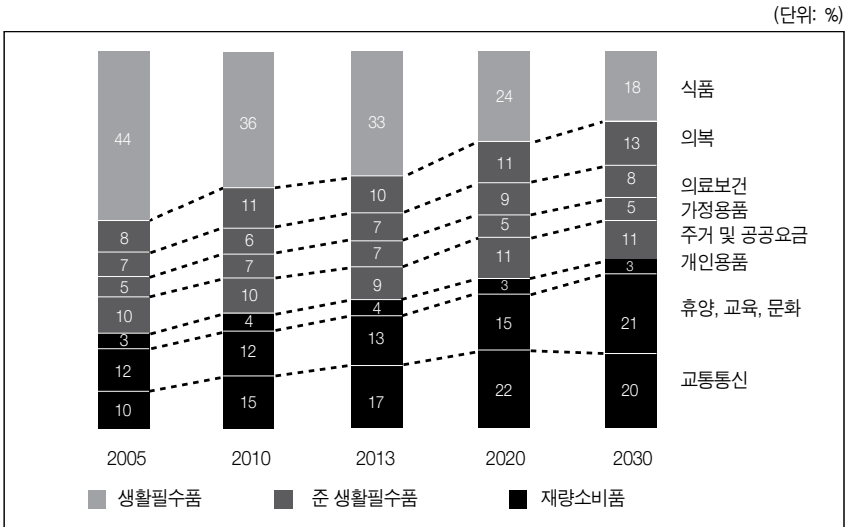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11. 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2. 중국의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2015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9월
소매판매	13.1	12.0	12.4	13.0	13.3	13.6	12.0	12.3	11.9	11.7	10.6	10.3	10.5	10.8	10.9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11. 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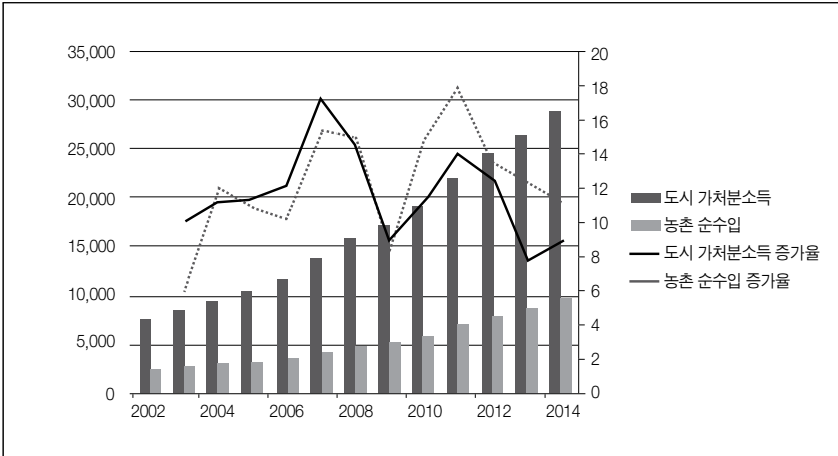
그림 3-18. 비생활필수품 증가 추이



자료: McKinsey Analysis, <http://www.mckinsey.com>(검색일: 2015. 11. 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19. 도시와 농촌의 소득 추이

(단위: RMB, %)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11. 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화·오락·교육·관광·의료 등 서비스업 및 비생 활필수품에 대한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도시와 농촌의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10년 이후 지속적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농촌보다 도시의 증가율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와 농촌 소득 추이를 보면 도시 가처분소득보다 농촌 순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품목별로 소매판매 추이를 살펴보면 기본생활용품, 자동차, 통신기기의 증가율은 10% 내외를 기록한 반면, 체육·오락·용품, 서적·잡지, 문화·사무용품 등 문화 관련 상품과 금은보석류와 같은 사치품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20~40% 정도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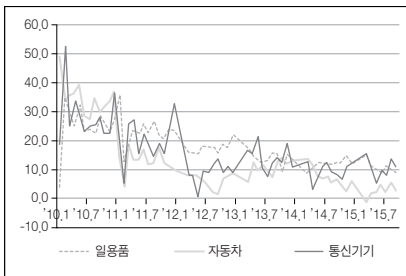
중국의 도시 소비지출 구성을 보면, 전체 소비지출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2000년에는 식품(39%), 교육·문화·오락(13%), 주거(11%), 의복(10%), 교통통신(9%) 순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식품(30%),

주거(22%), 교통통신(13%), 교육·문화·오락(11%), 의복(8%) 순이 되었다. 식품은 중국 소비지출에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4년에는 2000년대비 9%p 감소하였고, 의복이 2000년 10%에서 2014년 8%로 도시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주거와 교통·통신이 각각 2000년의 11%, 9%에서 2014년의 22%, 13%로 도시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2002년 이후 도시와 농촌의 소비지출금액은 의료·보건, 교육·오락·문

그림 3-20. 중국의 주요 품목 소매판매 추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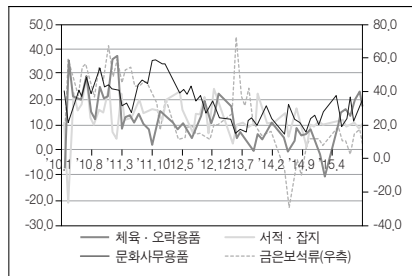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11. 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21. 중국의 주요 품목 소매판매 추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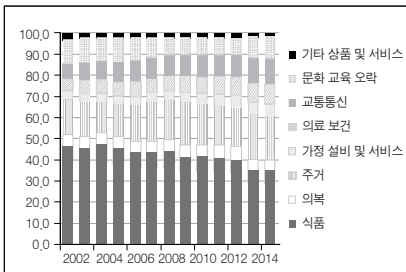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11. 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22. 중국의 도시 소비지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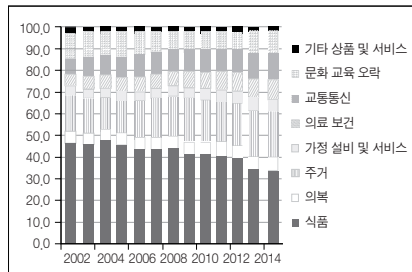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11.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23. 중국의 농촌 소비지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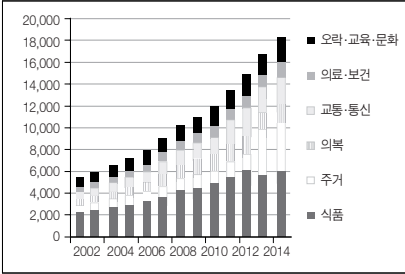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11.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24. 중국의 도시 품목별 소비지출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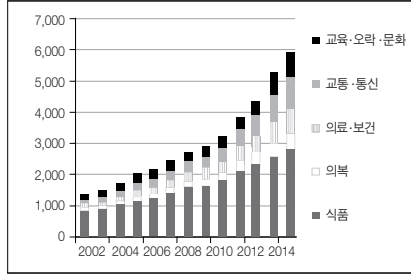
(단위: 위안)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11.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25. 중국의 농촌 품목별 소비지출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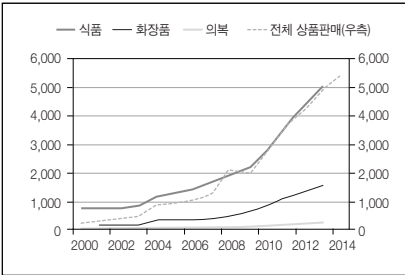
(단위: 위안)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11.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26. 주요 상품 소비지출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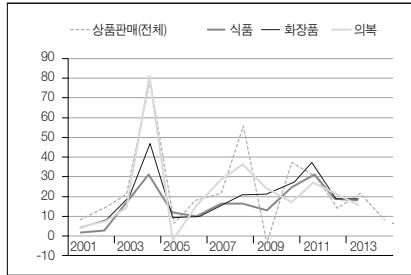
(단위: 십억 위안)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11.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27. 주요 상품 소비지출증가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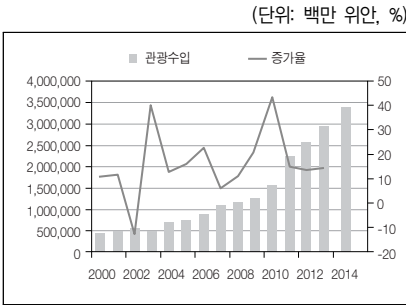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11.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화, 교통·통신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해왔다. 품목별 소비지출을 살펴 보면 식품, 화장품, 의복 등 주요 상품 소비지출금액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그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소득이 증가하면서 오락, 레저, 의료, 교육 등 분야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sup>41)</sup>

중국 서비스업 중 관광업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중국의 관광수입이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2010년 이후 그 증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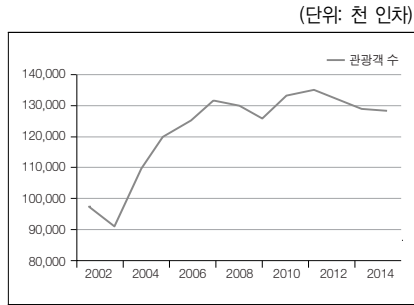
41) 일본정책투자은행(2015), 「中国 經濟の 投資から消費への構造転換」, [http://www.dbj.jp/pdf/investigate/mo\\_report/00000\\_19912\\_file2.pdf](http://www.dbj.jp/pdf/investigate/mo_report/00000_19912_file2.pdf)(검색일: 2015. 11. 5).

그림 3-28. 중국 관광 수입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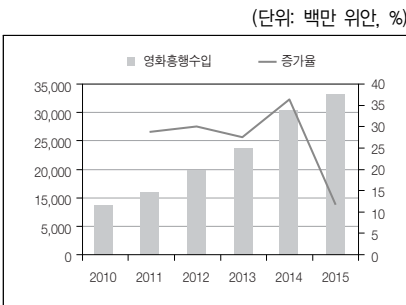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11.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29. 중국 내 관광객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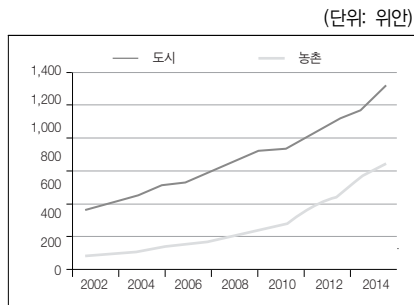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11.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30. 영화 흥행수입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11.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31. 1인당 의료비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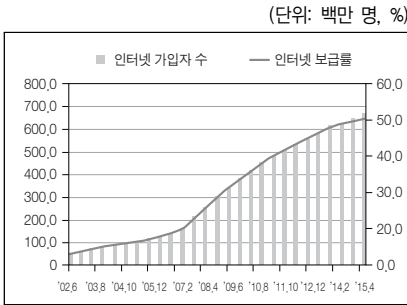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11. 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중국 관광객 수 또한 2003년 이후 크게 증가해오던 추세가 2010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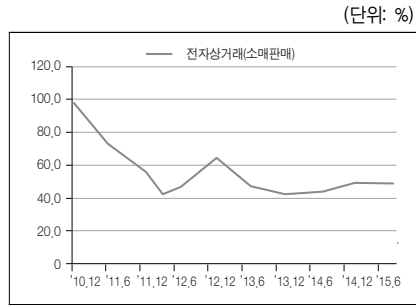
영화 흥행수입은 2010년 101억 7,200만 위안에서 2014년 330억 900만 위안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일본정책투자은행(DBJ)에 따르면 현재 중국 영화 흥행수입은 미국의 절반 정도에도 못 미치지만, 2020년에는 미국을 상회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의료비지출은 중국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도시와 농촌에서 모두 2002년 이후 꾸준히 증

그림 3-32. 인터넷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11. 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33. 전자상거래 증가율 추이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11. 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매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2010년에 100%에 육박했던 전자상거래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5년 6월에 48.7%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50%에 가까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 제4장 중국 소비 제약요인 분석

1. 소득불균형의 심화
2. 인구구조의 변화
3.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4. 낮은 도시화율
5.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6. 높은 주택가격
7. 소결



# 1. 소득불균형의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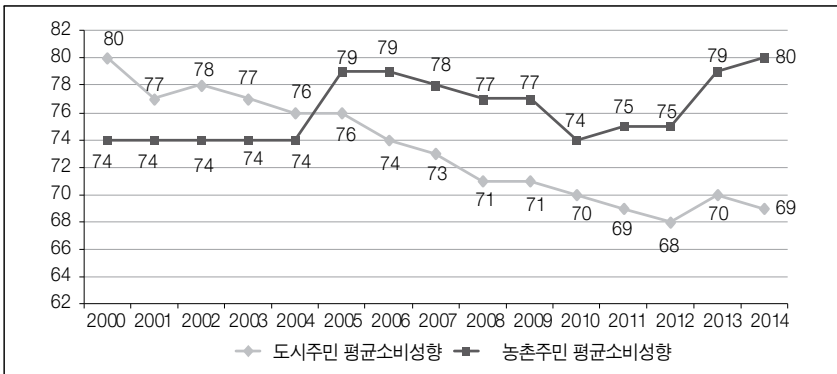
## 가. 소득불균형과 소비의 관계

일반적으로 가처분소득대비 소비지출 비율을 나타내는 평균 소비성향은 소득수준에 반비례하며,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다.<sup>42)</sup> 따라서 저소득층에 비해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 소득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소득불균형은 사회 전체적인 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반대로 소득불균형의 축소는 고소득층에 비해 소비성향이 강한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를 의미하므로 전체 소비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sup>43)</sup>

이와 같이 평균 소비성향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높다는 경향은

그림 4-1. 중국의 도농간 평균 소비성향 비교

(단위: %)



주: 1) 도시주민 평균 소비성향=도시주민 1인당 소비지출÷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2) 농촌주민 평균 소비성향=농촌주민 1인당 소비지출÷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

자료: 중국국가통계국(검색일: 2015. 8. 19); CEIC DB(검색일: 2015. 8. 19) 통계를 근거로 저자 계산.

42) Xu, Dai and Zhong(2010), p. 345.

43) Wang(2011), p. 9.

중국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4-1]은 2000년 이후 중국의 도농간 평균 소비성향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4-1]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주민 소득에 비해 약 3배 정도 낮은 농촌주민의 평균 소비성향이 도시주민의 평균 소비성향보다 높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2014년 기준 농촌주민 평균 소비성향은 80%로 도시주민 평균 소비성향(69%)에 비해 11%p 높으며, 그 격차는 2005년(3%p)에 비해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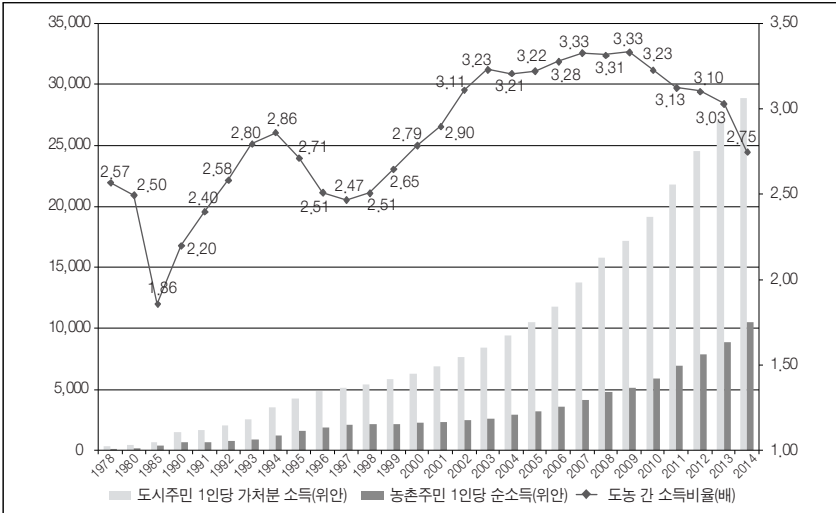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중국의 소비부진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중국의 소득불균형을 그 원인으로 자주 제시하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도 중국의 소득불균형 심화를 소비 제약요인의 하나로 파악하였다. 다음에서는 도시와 농촌, 동부연해지역과 서부지역, 계층간 소득격차의 현황 분석을 통해 중국의 소득불균형 정도를 살펴본다.

## 나.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중국의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는 [그림 4-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의 비율’(이하 도농간 소득비율)로 살펴보았다. 1985년 기준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과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은 각각 739위안, 398위안으로 도농간 소득비율은 약 1.9배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0년 그 비율이 2배를 돌파하였으며,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3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도농간 소득비율은 2009년 3.33배를 기록하며 정점에 달한 이후 2014년에는 2.75배로 떨어져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의 2.5~2.58배, 1990년대 후반의 2.51~2.65배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림 4-2. 중국의 도농간 소득격차

(단위: 위안,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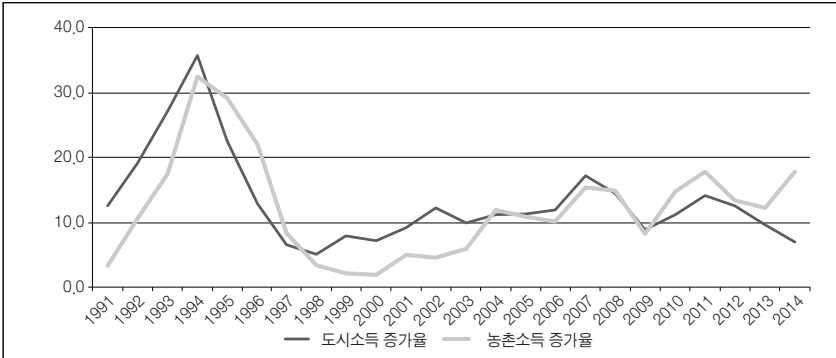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DB(검색일: 2015. 8. 1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국의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는 이와 같이 그 비율뿐만 아니라 소득 증가 폭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농촌과 도시 주민의 소득은 아시아 금융 위기를 겪은 1990년대 후반을 제외하면 2000년 중반까지 안정적인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이 기간 중 대체로 도시주민의 소득증가율이 농촌주민의 소득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그 결과 1978~2014년 기간 동안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이 343위안에서 2만 8,844위안으로 84배 늘어난 반면, 농촌주민의 1인당 순소득은 같은 기간 134위안에서 1만 489위안으로 78배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이와 같은 중국의 도농간 소득격차는 도시주민에 비해 평균 소비성향이 높은 농촌주민의 소득증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2007년 이후 농촌주민의 소득증가율이 도시주민의 소득증가율을 앞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그림 4-3. 도시 및 농촌의 소득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DB(검색일: 2015. 9. 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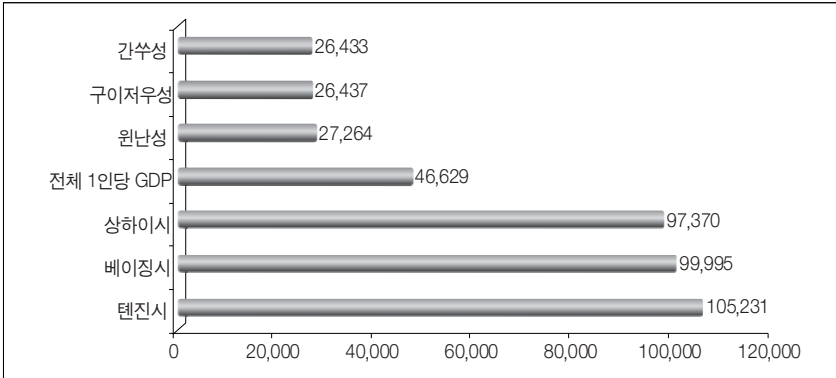
히 도시주민의 소득수준이 약 3배 가까이 높아 도농간 소득격차가 단기에 큰 폭으로 축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다. 지역간 소득격차

중국의 도농간 소득격차 못지않게 동부연해지역과 서부지역 간의 소득 격차도 뚜렷하다. 양 지역간 소득격차는 서부지역 투자 확대 및 발전으로 2000년 중반 이후 완화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중국 내 최고 소득지역인 동부연해의 톈진시, 베이징시, 상하이시 3개 지역 1인당 GDP는 모두 9만 위안을 웃돌고 있다. 이는 중국 전체 1인당 GDP(4만 6,629위안)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반면에 중국 최저 소득지역인 서부지역 3개 성(간쑤성, 구이저우성, 윈난성)의 1인당 GDP는 모두 3만 위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중국 전체 1인당 GDP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기서 제시한 동부연해 3개 시와 서부지역 3개 성의 1인당 GDP 격차는 3.6~4배에 달하는바, 도농간 소득 격차보다 높다.

그림 4-4. 중국의 동부연해 및 서부 지역 1인당 GDP 비교

(단위: 위안)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9. 1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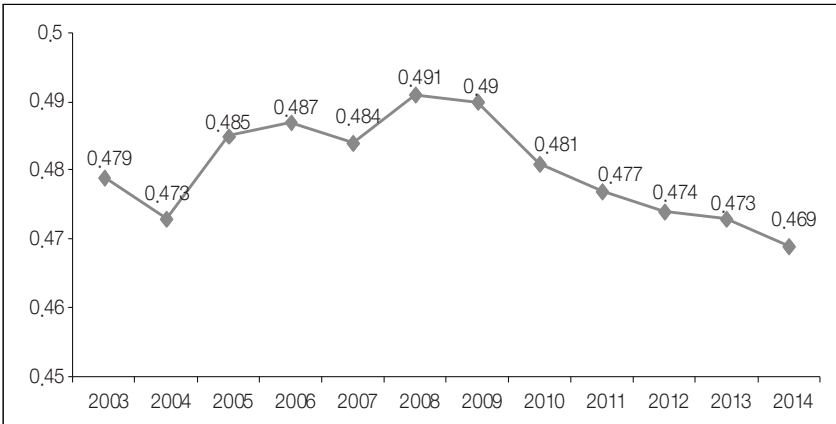
## 라. 계층간 소득불균형 심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수준으로 살펴보면 중국 전체 계층간 소득불균형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sup>44)</sup> 중국의 지니계수는 1970년대 말 0.2 수준에 머물렀으나 1980년대 이후 약 2배 이상 높아져 현재는 약 0.5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 중국 지니계수 수치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중국정부가 그동안 공식적인 지니계수 통계를 주기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며, 여타 민간연구기관이 발표한 수치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sup>45)</sup> 이에 따라 여기서는 중국정부는 물론

44) 지니계수는 전체 소득계층 사이의 소득격차를 계수화한 것으로 소득분배의 불균형(불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완전평등상태)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상태)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적으로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소득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한다.

45) 중국은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 이후 공식적인 지니계수 통계를 발표하지 않다가 2013년 1월 18일 중국국가통계국이 지니계수 수치를 발표하였다 (“China’s Income Inequality Surpasses U.S., Posing Risk for Xi,” 2014. 4. 29).

그림 4-5. 중국의 지니계수 추이(2003~14년)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2013), [http://www.stats.gov.cn/tjgz/tjdt/201301/t20130118\\_17719.html](http://www.stats.gov.cn/tjgz/tjdt/201301/t20130118_17719.html)(검색일: 2015. 8. 1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국내의 연구기관(대학)이 발표한 지니계수 통계를 모두 활용하여 중국의 계층간 소득불균형 정도를 비교한다.

2013년 1월 18일 중국국가통계국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의 지니계수 통계를 일시에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2004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08년 0.491로 정점을 기록한 뒤 점차 그 수준이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4년과 2015년 중국국가통계국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 지니계수는 2013년과 2014년 각각 0.473, 0.469로 완만한 하락추세를 지속하였다.<sup>46) 47)</sup>

중국 국내 및 해외 민간연구기관이 발표한 중국의 지니계수 수치는 중국국가통계국의 발표치와 큰 차이를 보였다. 2012년 12월 청두 소재 시난

46)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2014), [http://www.stats.gov.cn/english/PressRelease/201401/t20140120\\_502079.html](http://www.stats.gov.cn/english/PressRelease/201401/t20140120_502079.html)(검색일: 2015. 8. 12).

47)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2015), [http://www.stats.gov.cn/english/PressRelease/201501/t20150120\\_671038.html](http://www.stats.gov.cn/english/PressRelease/201501/t20150120_671038.html)(검색일: 2015. 8. 12).

차이징대학교(South West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는 「중국국가소득불평등보고」에서 2010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0.61이라고 밝혔다.<sup>48)</sup> 한편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역시 2010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0.55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sup>49)</sup> 이 두 기관이 밝힌 2010년 중국의 지니계수 수치는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0년 지니계수인 0.481을 크게 앞서는 수준이다.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볼 때도 중국의 지니계수가 높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OECD(201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OECD 평균 지니계수는 0.315에 그치고 있으며, 한국(0.302), 덴마크(0.249)는 평균보다 낮다. 반면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국가와 미국, 터키 등의 지니계수가 OECD 국가 가운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국가의 지니계수는 경계수준인 0.4를 웃돌고 있다. 중국정부 발표치인 0.469(2014년 기준)를 기준으로 놓고 이들 국가와 비교해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OECD 평균치를 크게 상회할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중남미국가 수준에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6 참고).

만일 위에서 제시한 민간연구기관 발표치의 중국 지니계수를 비교기준으로 삼는다면, 중국의 계층간 소득불균형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5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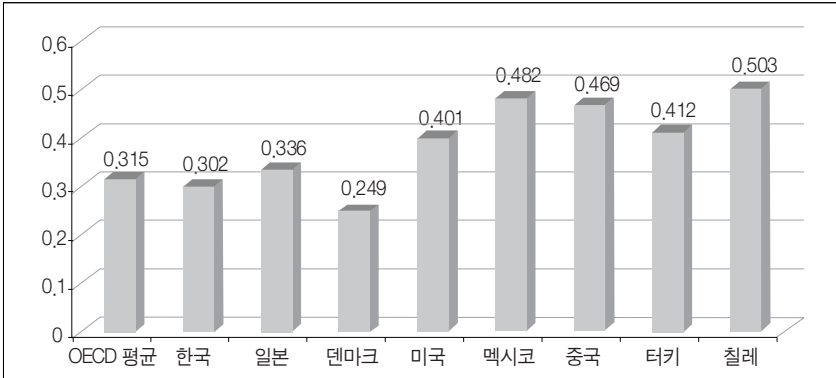
---

48) Reuters(2013. 1. 18), “China lets Gini out of the bottle; wide wealth gap,” <http://www.reuters.com/article/us-china-economy-income-gap-idUSBRE90H06L20130118>(검색일: 2015. 8. 20); 한국금융연구원(2013), p. 20.

49) Bloomberg(2014. 4. 29), “China’s Income Inequality Surpasses U.S., Posing Risk for Xi”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4-04-28/gap-between-rich-poor-worse-in-china-than-in-u-s-study-shows>(검색일: 2015. 8. 20).

50) World Bank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콜롬비아의 지니계수가 0.5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orld Bank DB, 검색일: 2015. 8. 12).

그림 4-6. 주요국의 지니계수 비교



주: 칠레, 일본, 터키는 2011년, 중국은 2014년 기준이며, 나머지 국가는 2013년 이후 기준임.

자료: OECD(2015), p. 56;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2015), [http://www.stats.gov.cn/english/PressRelease/201501/t20150120\\_671038.html](http://www.stats.gov.cn/english/PressRelease/201501/t20150120_671038.html)(검색일: 2015. 8. 1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인구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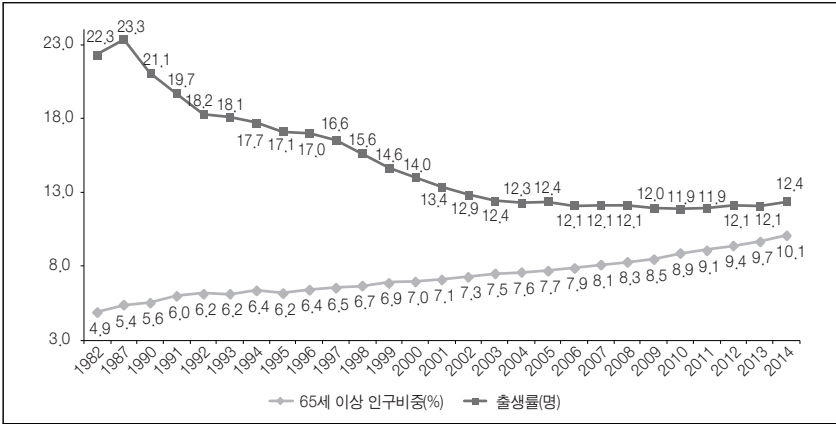
### 가. 인구구조의 변화 현황

중국은 1949년 건국 이후 국가재건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였으나 1950년대 중반부터 산아제한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으며, 1979년 ‘1가구 1자녀’ 정책을 확립하였다.<sup>51)</sup> 이와 같은 인구정책의 변화에 의해 중국의 인구구조도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1979년 ‘1가구 1자녀’의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출생률의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타난 반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출생률은 1987년 23.3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꾸준히 감소한 결

51) 이정진(2013), p. 7.

그림 4-7. 중국의 출생률 및 65세 이상 인구 비중 변화



주: 출생률은 1년 동안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임.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DB(검색일: 2015. 8. 1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과 2014년 12.4명에 머물러 있다.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 4.9%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끝에 2000년 7%에 달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sup>52)</sup> 2014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982년에 비해 5.2%p 증가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 10%대에 다다랐다(그림 4-7 참고).

## 나.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향후 중국의 인구고령화는 더욱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UN의 장기인구전망(2015)에 따르면 2000년 중국은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2%로 ‘고령사회’에 들어설

52) UN 기준에 따르면 65세 인구 비중을 기준으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는 그 비중이 7% 이상, ‘고령사회(Aged Society)’는 14% 이상,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또는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이다(한국은행 2011, p. 9).

표 4-1. 중국 인구구조 변화 전망(2015~50년)

(단위: %)

	총인구 (억 명)	0-14세 비중	65세 이상 비중	생산가능인구 비중 (15-64세)
2015	13.8	17.2	9.6	73.2
2020	14.0	17.1	12.1	70.8
2025	14.1	16.3	14.2	69.6
2030	14.2	14.8	17.2	68.0
2035	14.1	13.7	21.3	65.1
2040	13.9	13.3	24.6	62.1
2045	13.7	13.4	26.0	60.6
2050	13.5	13.5	27.6	58.9

자료: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DB(검색일: 2015. 8. 1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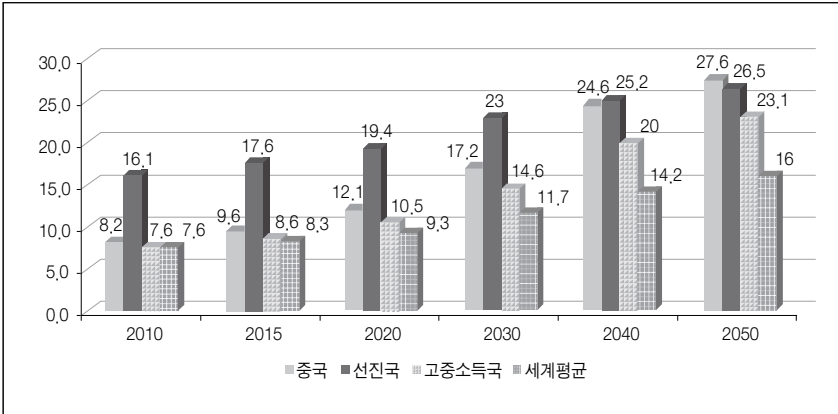
전망이다(표 4-1 참고).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 이르러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노인인구(65세 이상)가 유년인구(0~14세)를 앞서는 상황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고령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도 점차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5년 73.2%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0년 이후로는 70%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중국의 고령화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파악된다. 2010년 기준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8.2%로 중국이 해당된 고중소득(upper-middle-income)국 및 세계 평균인 7.6%에 비해 0.6%p 높은 수준이다.<sup>53)</sup> 반면 선진국 16.1%에 비해서는 7.9%p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의 고령화가 이들 비교 국가에 비해

53) 세계은행은 1인당 GNI가 4,086~1만 2,615달러 사이의 국가를 고중소득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2014년 1인당 GNI가 7,380달러인 중국은 고중소득국에 포함된다.

그림 4-8. 주요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

(단위: %)



자료: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DB(검색일: 2015. 8. 1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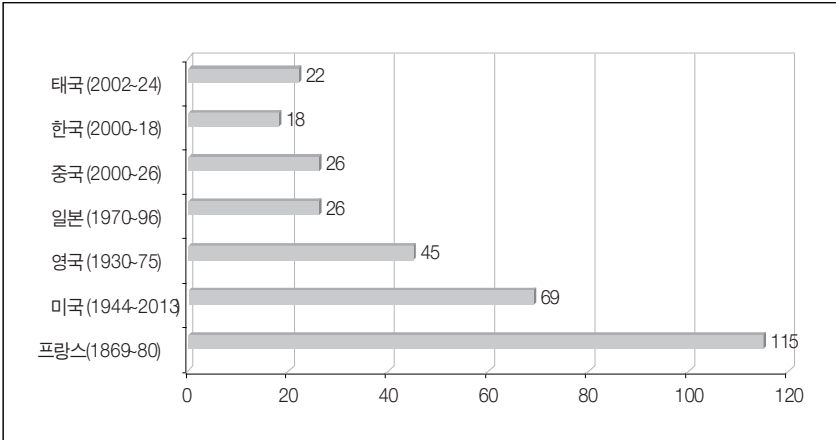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고중소득국 및 세계 평균과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선진국과의 격차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결과 UN은 2050년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선진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그림 4-8 참고).

중국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는 [그림 4-9]에 제시한 주요 국가와의 고령화 진행속도 비교를 통해서 파악해볼 수 있다. 중국이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7%)에서 ‘고령사회’(14%)로 진입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26년인 반면, 프랑스, 미국, 영국은 각각 115년, 69년, 45년이나 걸렸다. 이 같은 중국의 고령화 속도는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고령화 비중이 가장 높은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중국의 고령화 진행 정도를 가늠하게 한다.<sup>54)</sup>

54) 2014년 기준 전 세계에서 65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25.7%)이며, 그 뒤를 이어 이탈리아(22.0%), 독일(21.1%), 그리스(20.9%) 순이다(세계 평균은 8.1%). 중국은 9.2%이다.

그림 4-9.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비교

(단위: 연도)



주: 고령화 속도는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린 기간을 의미함.  
 자료: Kinsella and He(2009), p. 1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추세는 ‘고령화 가속화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 확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는 중국의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를 점차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sup>55)</sup> 인구배당효과에 따르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비중이 높고 부양부담이 크지 않으면 저임의 노동력과 높은 저축률을 바탕

55) ‘인구홍리(人口紅利)’ 또는 ‘인구보너스’로도 불리는 ‘인구배당효과’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증가에 따른 부양률((15세 미만 인구+65세 이상 인구)/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의미한다(한국은행 2011, p. 4).

으로 요소집약적 경제성장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sup>56)</sup> 그러나 반대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하락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이와 같은 인구배당효과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sup>57)</sup> 인구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은 노동력 공급 축소와 이에 따른 임금상승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위에서 설명한 대로 현재 중국은 고령화사회를 넘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다가서고 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5년을 정점으로 하락추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부터 점차 인구배당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유년인구 비중을 추월하게 될 2030년 이후에는 그 효과가 거의 소멸될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세와 인구 고령화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를 초래한다.<sup>58)</sup> 2015년 기준 중국의 노년부양비는 13.0으로 고중소득국 및 세계 평균에 비해 근소하게 높지만, 선진국(26.7)과는 큰 격차를 보이며 낮은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이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선진국과의 격차는 갈수록 줄어들어 2045년 이후에는 오히려 선진국보다 높은 노년부양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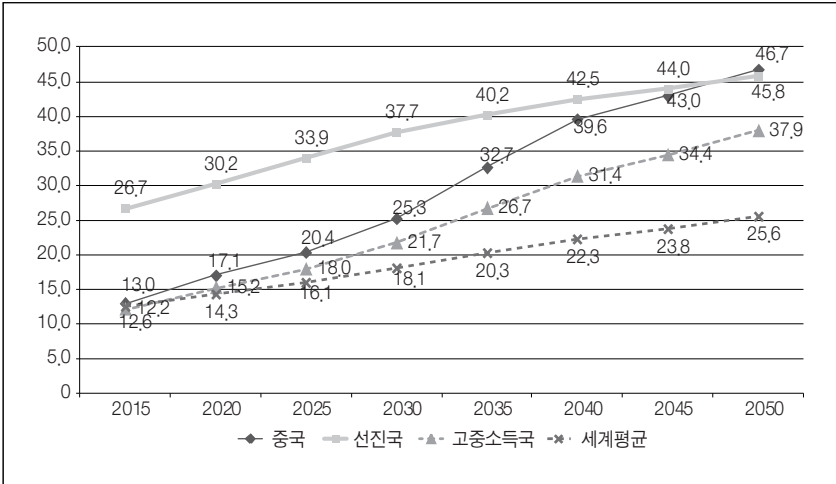
이러한 노년부양비의 증가는 사회 전체적으로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1인당 GDP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림 4-8], [그림 4-9], [그림 4-10]에서 살펴본 대로 중국

56) 이철용(2011), p. 26.

57)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인구배당효과에 의해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고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전체 경제성장률에 대한 인구배당효과의 기여율은 5~27% 정도로 추정된다(한국은행 2011, p. 5).

58)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림 4-10. 주요국의 노년부양비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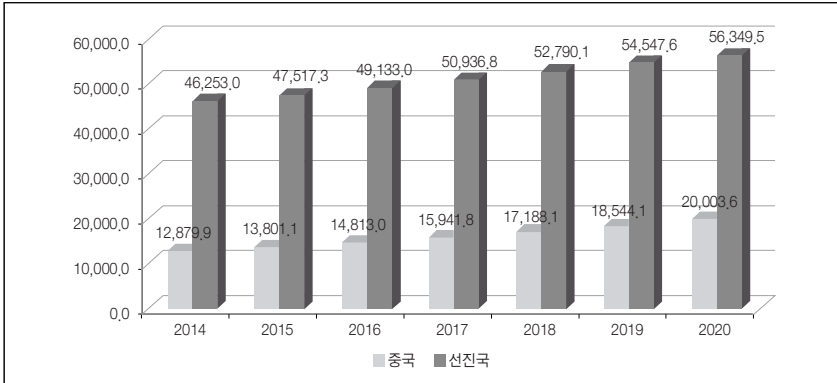


주: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수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DB(검색일: 2015. 8. 1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의 고령화가 선진국에 비해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년부양비 역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중국의 1인당 GDP(IMF, ppp 기준)는 2014년 현재 1만 2,879.9달러로 선진국의 27.8%에 불과하다. 물론 향후 중국의 1인당 GDP는 증가세를 보일 것이지만, 2020년에 이르러서도 2만 달러로 선진국(5만 6,349.5달러)의 35%에 그칠 전망이다. 이처럼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는 중국의 노령인구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이는 결국 젊은 세대(자녀 세대)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켜 이들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소비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4-11. 중국과 선진국의 1인당 GDP 추이(ppp 기준)

(단위: 달러)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2015, 검색일: 2015. 8. 1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3.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 가. 중국 사회보장제도 가입 현황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국가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기금에 의탁하여 사회구성원의 기본생활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제도이다.<sup>59)</sup>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 사회구제, 사회복지, 우대부양조치(优抚安置), 사회상호지원(社会互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사회보험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양로 △실업 △의료 △출산 △산재 5개 항목에 대한 물적 지원을 제공하며, 그 보험료는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부담하고 부족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sup>6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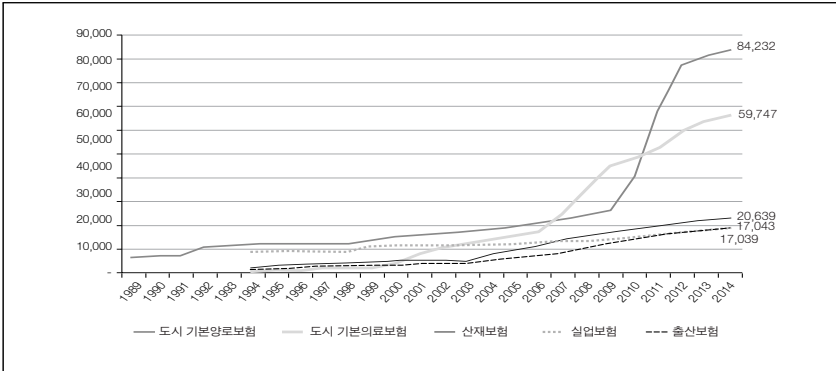
[그림 4-12]는 1989년부터 2014년까지 5대 사회보험 가입자 수의 변화

59) KIEP 북경사무소(2014), p. 3.

60) 위의 자료, p. 3.

그림 4-12. 중국 5대 사회보험 가입자 수 현황

(단위: 만 명)



자료: 중국국가통계국(검색일: 2015. 8. 12); 中华人民共和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2015), 『2014年度人力资源和社会保障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dongtaixinwen/buneyaowen/201505/t20150528\\_162040.htm](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dongtaixinwen/buneyaowen/201505/t20150528_162040.htm)(검색일: 2015. 11. 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2]에서 알 수 있듯이 5대 사회보험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4년 말 기준 도시 기본양로보험, 도시 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의 가입자 수는 각각 8억 4,232만 명, 5억 9,747만 명, 2억 639만 명, 1억 7,043만 명, 1억 7,039만 명이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도시 기본양로보험의 경우에는 2014년 말 기준 중국 총인구가 13억 6,782만 명임을 감안할 때, 전체 인구의 61.6%가 가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추세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단순히 수치의 증가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체제 및 사회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1990년대 초부터 추진하여왔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sup>61)</sup>

표 4-2. 농민공 사회보험 가입자 현황

(단위: 만 명, %)

연도	농민공 총수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가입자	비중	가입자	비중	가입자	비중	가입자	비중
2008	22,542	2,416	10.7	4,266	18.9	1,549	6.9	4,942	21.9
2009	22,978	2,647	11.5	4,335	18.9	1,643	7.2	5,587	24.3
2010	24,223	3,284	13.6	4,583	18.9	1,990	8.2	6,300	26.0
2011	25,278	4,140	16.4	4,641	18.4	2,391	9.5	6,828	27.0
2012	26,261	4,543	17.3	4,996	19.0	2,702	10.3	7,179	27.3
2013	26,894	4,895	18.2	5,018	18.7	3,740	13.9	7,263	27.0
2014	27,395	5,472	20.0	5,229	19.1	4,071	14.9	7,362	26.9

주: 1) 양로보험은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의료보험은 도시 기본양로보험 가입자 기준임.

2) 상기 자료의 출처에는 농민공의 출산보험 가입자 관련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음.

자료: 中华人民共和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2008~14 각 연도 『人力资源和社会保障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hrss.gov.cn/SYrlzyshshzbz/zwgk/szrs/ndtjsj/tjgb/> (검색일: 2015. 11. 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나.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한계와 높은 저축률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회 복지체계의 개편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차별적 개별전략에 따라 도시와 농촌이 분리된 이원화된 체계로 발전해왔다. 즉 복지제도의 개혁과정에서 도·농의 차별구조는 심화되고 신빈민과 농상공 등 대규모의 근로빈민이 사회보장체계 범위에서 배제되게 되었다.<sup>61)</sup>

특히 도시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농민공 수에 비해 이들이 누리는 사회보장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다. [표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민공 총수는 2008년 2억 2,542만 명에서 2014년 2억 7,395만 명으로 약 21.5%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의 농민공 가입자 수 비중 평균을 살펴보면 각각

61) 유재현(2007), p. 13.

62) 류정희(2015), p. 22.

15.4%, 18.8%, 10.1%, 25.8%로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농민공은 여전히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63)</sup>

중국정부는 더 많은 농민공을 사회보장제도의 범위에 포함시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조화사회 건설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표 4-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혁의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농민공들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애로사항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고 있다.<sup>64)</sup> 첫째, 매월 2,000~3,000위안에 불과한 낮은 임금의 10%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하기에 부담이 크다. 둘째, 농민공들 사이에서는 사회보장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납부한 금액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셋째, 근로지역을 이동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많은 농민공들은 호적제도에 얽매어 사회보험 가입지역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즉 일시적으로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들은 돈을 벌고 농촌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고, 도시에 정착할 필요성을 특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급여를 줄여가면서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sup>65)</sup>

화창증권(华创证券)이 2015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타지 진출 농민공(外出农民工)<sup>66)</sup>들의 소득규모는 현재 3조 9,000억 위안에 달하며,

63) 2015년 4월 29일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4년 전국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 보고(2014年全国农民工监测调查报告)」에 따르면 2014년 농민공의 ‘五险一金’ 가입률은 산재보험 26.2%, 의료보험 17.6%, 양로보험 16.7%, 실업보험 10.5%, 출산보험 7.8%, 주택공적금 5.5%이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1.2%, 0.5%, 0.5%, 0.7%, 0.6%, 0.5% 증가한 수치이나 사회보장제도 범위 내에 포함된 농민공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2015, 『2014年全国农民工监测调查报告』, [http://www.stats.gov.cn/tjsj/zxfb/201504/t20150429\\_797821.html](http://www.stats.gov.cn/tjsj/zxfb/201504/t20150429_797821.html), 검색일: 2015. 11. 3).

64) 中国经营网(2014. 9. 19), 「为什么农民工不愿意上社保?」, [http://www.cb.com.cn/economy/2014\\_0919/1084796.html](http://www.cb.com.cn/economy/2014_0919/1084796.html)(검색일: 2015. 11. 5).

65) 김병철(2010), pp. 8~9.

2015년 GDP의 11.3%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엄청난 소비잠재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들은 의료와 양로를 비롯하여 자녀 교육 등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고민이기 때문에 소비 대신 저축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sup>67)</sup> 따라서 중국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농민공들을 사회보장혜택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소비수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제2장 2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흡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높은 저축률은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으며, 평균 도시 가계 저축률은 1982~2012년 기간 동안 12.0%에서 32.1%로 증가하였다.<sup>68)</sup>

중국인들은 과거 계획경제시기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살펴주던 것과 달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예비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s)’을 늘려왔다.<sup>69)</sup> [그림 4-13]에 제시한 대로 지속적인 저축액의 증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중국 도·농 주민의 저축예금 잔액은 1995년 2조 9,662억 위안에서 2014년 48조 5,261억 위안으로 무려 1,536% 증가하였다.

최근 중국경제의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어 경제 리스크요인이 중국 국민들에게도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은

---

66) 타지 진출 농민공(外出农民工)은 조사연도기간 호구(戶口)지역을 떠나 6개월 이상 근무한 농촌 잉여노동력을 의미함(KIEP 북경사무소 2012b,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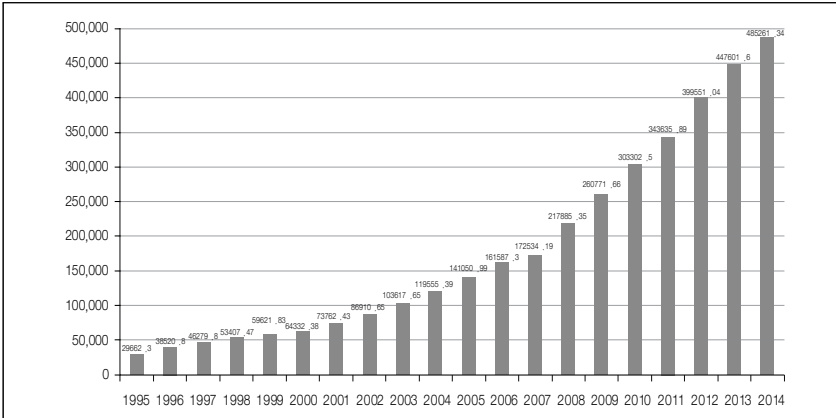
67) 新浪财经(2015. 8. 20), 「报告称农民工月挣近五千 将成拉动消费生力军」, <http://finance.sina.com.cn/china/20150820/212823021728.shtml>(검색일: 2015. 11. 5).

68) Choukhmane, Coeurdacier, and Jin(2014), p. 1.

69) Dexter Roberts(2015), “The Chinese Can’t Kick Their Savings Habit,”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05-01/chinese-consumers-cling-to-saving-suppressing-spending>(검색일: 2015. 10. 24).

그림 4-13. 중국 도·농 주민 저축예금 잔액

(단위: 억 위안)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DB(검색일: 2015. 8. 1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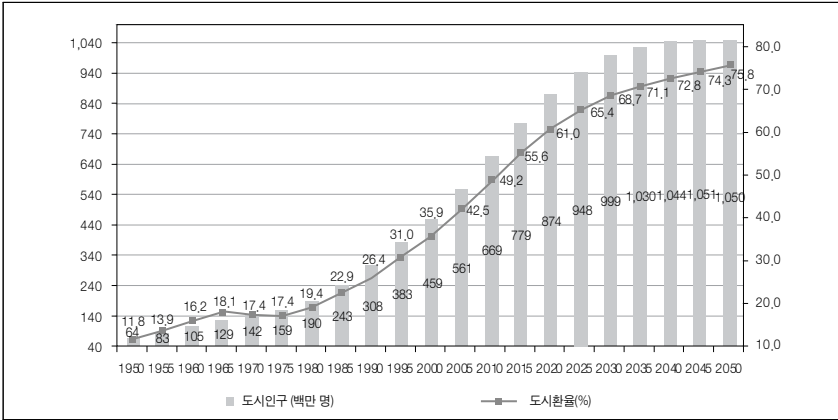
더욱 중요하다. 단일화된 사회보장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한 미래의 잠재적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인들의 불안심리가 투영된 저축습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소비확대정책의 실현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4. 낮은 도시화율

### 가. 중국 도시화 현황 및 전망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직후인 1950년 11.8%에 머물렀던 중국의 도시화율은 1978년 개혁·개방을 계기로 급속히 상승하였다. 특히 WTO 가입 이후 2000년대 연평균 10%대의 고도성장과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의 팽창은 급속한 도시개발 확대와 도시 상주인구 급증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도시 상주인구는 1978년 1억 7,245만 명에서 2014년 7억

그림 4-14. 중국의 도시인구 및 도시화율 장기 전망



자료: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DB(검색일: 2015. 8. 1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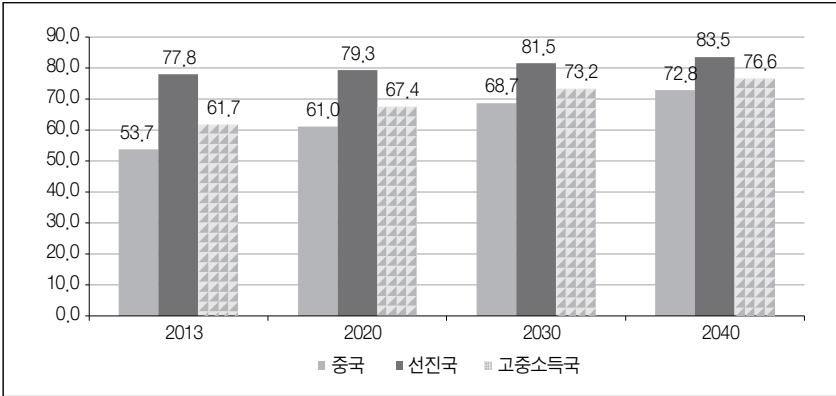
4,916만 명으로 약 4.3배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도시화율(총인구대비 도시 상주인구 비율)은 17.9%에서 36.9%p 상승한 54.8%까지 치솟았다.

이와 같이 개혁·개방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도시화 정책 추진으로 중국의 도시화율은 2011년 이후 50%를 웃돌고 있다.<sup>70)</sup> 또한 UN의 도시화 전망에 따르면 향후 중국의 도시화율은 2020년 이후 현재의 속도보다는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꾸준한 상승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전망치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화율은 2020년에는 60%대에 진입하고 2030년 68.7%, 2040년 72.8%, 2050년 75.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4-15 참고).

70) 1980년대와 1990년 중국정부의 주된 도시화 정책방향은 소규모 도시 위주의 도시화 추진정책을 의미하는 ‘소성진(小城鎮)’이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정부가 도시화를 국가발전전략의 하나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10차 5개년 계획, 11차 5개년 계획 및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도시화 전략의 구상과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최필수 외 2012, p. 48).

그림 4-15. 주요국의 도시화율 비교

(단위: %)



자료: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DB(검색일: 2015. 8. 1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현재 도시화율 및 향후 전망치는 선진국은 물론 중국과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2013년 기준 중국의 도시화율은 53.7%로 선진국 평균인 77.8%는 물론 중국과 소득수준이 비슷한 고중소득국 평균인 61.7%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UN은 향후 중국의 도시화율은 선진국 및 고중소득국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하였다(그림 4-15 참고). 이에 따르면 2020~40년까지 중국과 선진국 및 고중소득국 도시화율 격차는 점차 축소되나 여전히 선진국과 고중소득국에 비해 각각 10%p 이상, 6~4%p의 차이로 낮은 도시화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 나. 신형 도시화 계획의 한계

중국의 도시화율은 이와 같이 선진국이나 고중소득국에 비해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도시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도시화율 통계를 작성하고 있어

과장되어 있는 측면도 강하다. 즉 중국은 도시 상주인구를 6개월 이상 거주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현재 약 2억 7,000만 명에 달하는 농민공을 도시인구에 포함시키고 있다. 만일 이들 농민공을 제외하면 중국의 도시화율은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농민공은 도시 호적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에서 생산활동에만 종사할 뿐이며 실질적으로 도시민으로서의 혜택을 거의 향유하지 못한다. 따라서 주택이나 공공서비스 소비를 포함한 소비자로서 농민공의 경제활동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요인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단순한 통계적 의미의 도시화율 상승만으로는 실질적인 소비확대를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파악된다.

이와 같은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중국정부는 제2장 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형 도시화’ 계획을 도시화 정책의 주된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도시 유입 이주민인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통해 도시주민의 소비를 확대한다는 것이 ‘신형 도시화’ 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도시주민과 농민의 1인당 연간 평균 소비지출이 각각 1만 9,968위안, 8,382위안으로 도시주민의 소비지출이 농민에 비해 약 2.4배 높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신형 도시화’는 소비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형 도시화’를 제대로 추진하는 데는 제약요인과 한계점도 상존한다. 우선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호적제도 개혁의 심화가 필요하다. 농민공에 대한 도시 호적 부여는 ‘신형 도시화’ 추진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바, ‘신형 도시화’ 계획에서는 도시인구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호적제도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호적제도 개혁 추진의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 실행방안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농민공의 도시민화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도시 호적 부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sup>71)</sup> 이에 따라 농민공들이 진정한 도시민으로 정착하여 실질적인 도시 소비군으로 성장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도시화를 위해서는 개발에 수반되는 택지 및 공업용지와 같은 토지의 확보가 필요한바, 토지제도 개혁 역시 ‘신형 도시화’ 계획의 중요 선결과제 중 하나다. 현행 중국의 토지제도 규정에 따르면 농민이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농촌토지(농지)는 해당 지방정부의 ‘수용’을 통해 도시화를 위한 토지로 전환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민에게 낮은 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된 반면, 지방정부는 농민으로부터 수용한 토지를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고가로 매각하면서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병폐를 낳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화를 위한 농지 수용과정에서 농민은 낮은 수준의 보상금만을 받게 되며, 결과적으로 실지 농민으로 전락하여 안정적인 도시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토지의 ‘저가 수용·고가 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토지 재정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큰 지방정부가 재정수입 감소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관련 개혁의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신형 도시화’ 계획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당장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신형 도시화’를 통해 단기에 괄목할 만한 수준의 소비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71) 농민공 1인 도시민화에 소요되는 비용(연평균 인프라 유지보수 및 공공서비스 관리, 1인당 사회보장, 의무교육, 주택보장에 필요한 자금 등을 포함)은 약 13만 위안으로 추정된다(최명해, 한나라 2013, 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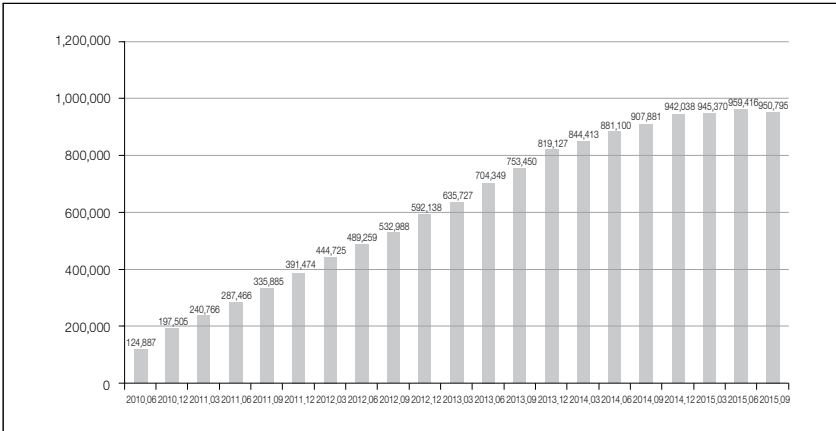
## 5.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제2장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정부는 가계대출 확대를 통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소비금융회사 시행관리방법」을 발표하는 등 소비금융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으로 중국의 소액대출액은 2010년 6월 1일 기준 1,248억 8,700만 위안에서 2015년 9월 1일 기준 9,507억 9,500만 위안으로 약 661% 증가하였다.<sup>72)</sup>

중국정부는 2015년 6월 소비금융회사 시범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혀 향후 이를 통한 가계대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림 4-16. 중국 소액대출액 변화 추이

(단위: 백만 위안)



주: 각 분기별 데이터는 월별 1일 기준임.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11. 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72) 중국 전체 소액대출회사는 2010년 말 기준 2,614개에서 2015년 9월 말까지 8,965개로 증가하였다(中国人民银行 2011, 『2010年小额贷款公司数据统计报告』, <http://www.pbc.gov.cn/diaochatongjisi/116219/116225/2850803/index.html>, 검색일: 2015. 10. 22; 中国人民银行 2015, 『2015年三季度小额贷款公司统计数据报告』, <http://www.pbc.gov.cn/diaochatongjisi/116219/116225/2968461/index.html>, 검색일: 2015. 10. 22).

표 4-3. 중국 전체 신규 대출에서 가계 신규 대출의 비중

(단위: 십억 위안, %)

연도	전체 신규 대출액	가계 신규 대출액	비중
2009	9,594	2,460	25.64
2010	7,945	2,870	36.12
2011	7,472	2,420	32.39
2012	8,204	2,520	30.72
2013	8,892	3,710	41.72
2014	9,781	3,290	33.64
2015	9,890	3,000	30.33

주: 2015년은 2015년 9월까지임.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11. 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것이 단기간 내에 소비확대로 연결될 것으로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표 4-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009년 이후 중국 전체 신규 대출에서 가계 신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기업대출의 비중이 높다. 2014년 3/4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도 34.9%로 주요 선진국 평균치인 78.7%보다 낮다.<sup>73)</sup>

무엇보다 소비잠재력이 가장 높은 농촌주민의 소비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농촌의 금융서비스체계는 도시보다 매우 열악하다. 제정조(2010)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주택대출, 자동차대출, 신용카드 등을 포함한 소비자금융은 도시주민이 주대상이었다. 농촌지역의 금융서비스는 주로 농업은행, 농촌합작금융기구, 우체국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상업은행에 비해 경영이념이 부족하고 소비자금융상품도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sup>74)</sup> 특히 농촌지역 주민은 대출받기가 상대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농촌 가계는 27.6%에 불과하다(전국

73) 이치훈(2015), p. 3.

74) 제정조(2010), pp. 61~62.

평균 40.5%).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보유율도 1.6%에 머물러 있다(전국 평균 10.4%).<sup>75)</sup>

한편 최근에는 인터넷 카드 발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공 등 다양한 신용카드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신용카드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sup>76)</sup> 그러나 「2014 중국 신용카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전국 신용카드 누계 발급량은 3억 9,100만 장에 달하고,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은 0.29장으로 집계되었다.<sup>77)</sup> 즉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이 1장에 미치지 못하며 신용소비확대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에서는 2007년부터 국유기업에 비해 대출이 어려운 소형기업과 개인들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 P2P 금융이 등장하였다.<sup>78)</sup> 김은화(2014)에 따르면 2014년 말 온라인 P2P 대출 플랫폼은 1,575개로 전년대비 두 배 가깝게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만 신규 설립된 플랫폼은 700개가 넘는다. 그리고 2014년 기준 중국의 온라인 P2P 금융 거래량은 2,528억 위안으로 2013년 거래량의 2.39배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출 잔액은 1,036억 위안으로 급증하였다. 또한 2014년 상반기 P2P 대출 이용자는 18만 9,000명, 투자자는 44만 3,6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P2P 금융의 급성장은 금융부실, 해킹, 사기 등 건전한 금융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야기시키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sup>79)</sup>

---

75) 강혜진(2015), 「中 농업, 새로운 기회가 보인다」,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9066&ARTICLE\\_SE=20302](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9066&ARTICLE_SE=20302)(검색일: 2015. 8. 16).

76) 한국금융연구원(2014), p. 31.

77) 网易财经(2014. 6. 5), 「2014中国信用卡报告(全文)」, [http://money.163.com/14/0605/07/9TV763DD002552HQ\\_all.html](http://money.163.com/14/0605/07/9TV763DD002552HQ_all.html)(검색일: 2015. 10. 28).

78) P2P(Peer-to-Peer) 금융은 투자자와 대출자들이 은행 등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김은화 2014, pp. 1~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금융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비금융회사 설립, 신용카드시장 확대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P2P 금융 등 새로운 대출경로가 생겨나면서 소액대출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단순히 대출액 증가를 근거로 소비자금융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 마련과 소비자금융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6. 높은 주택가격

### 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개관

1998년 이전까지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분배하는 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8년 기존 복지개념의 무상분배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소유체제로 전환하는 주택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사유화가 진행됨으로써 개인의 주택구매수요가 확대되었으며, 도시화의 진척과 함께 부동산 투자가 급속히 늘어났다.<sup>80)</sup> 이후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2000년대를 거치면서 약 10년간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경제 고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sup>81)</sup>

이 기간 중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경제성장률을 두 배 이상 웃도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부동산 및 주택 개발 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기 이전인 2008년까지 모두 20% 이상의 증가율을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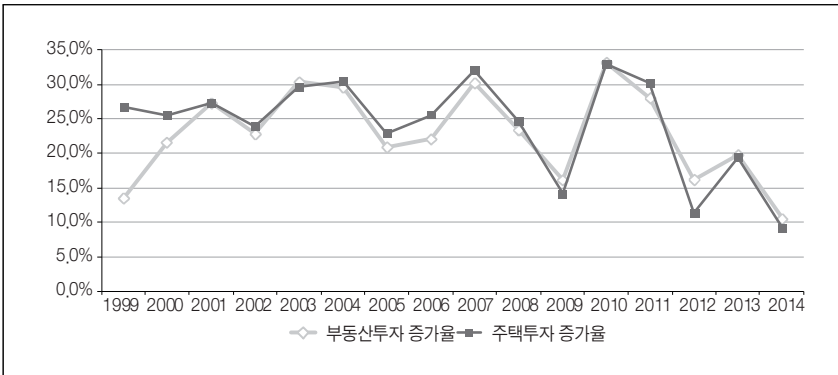
---

79) 김은화(2014), pp. 2~4.

80)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2008), p.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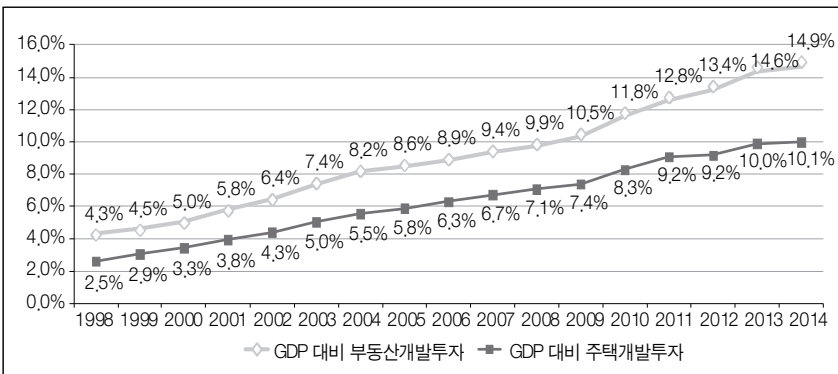
81) IMF(2015), p. 3.

그림 4-17. 중국 부동산 및 주택 개발 투자증가율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DB(검색일: 2015. 8. 2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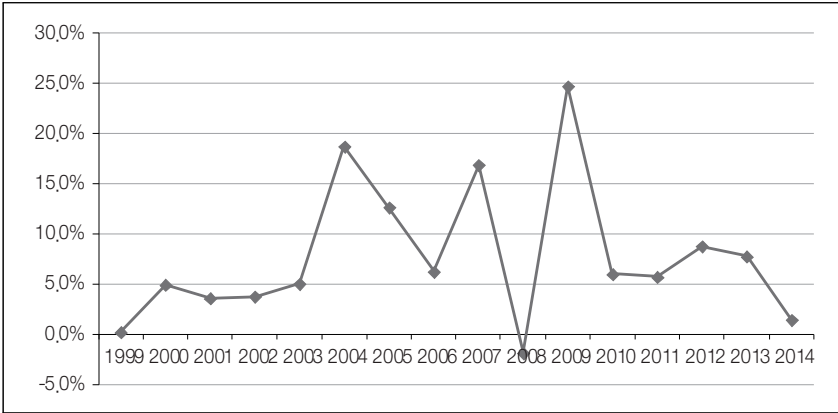
그림 4-18. 중국 부동산 및 주택 개발 투자 비중 추이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DB(검색일: 2015. 8. 20)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하였다. 특히 2003년과 2004년 부동산 투자는 무려 30% 내외의 팽창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GDP 대비 부동산 개발 투자의 비중은 1998년 4.3%에서 2014년에는 약 3.5배 증가한 14.9%로 높아졌다. 특히 주택 개발 투자는 보다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며 같은 기간 중 GDP 대비 비중은 2.5%에서 4배 증가한 10.1%에 이른다.

그림 4-19. 중국의 평균 주택판매가격 상승률



주: 여기서 주택판매가격은 1평방미터당 위안 기준임.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8. 2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와 같이 1998년 중국 부동산 제도 개혁 이후 주택사유화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투자 붐이 일어난 결과 주택가격은 이전에 비해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2003년 이후 상하이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의 주택가격은 과열양상을 보일 정도로 치솟았으며, 2004년 중국의 주택가격은 2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당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중심의 부동산 가격 안정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2008년(-1.9%)을 제외하고 중국의 주택가격은 대체로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행된 중국정부의 대대적인 확대재정정책 및 금융완화정책의 결과 2009년 주택가격은 24.7%의 급등세를 기록하며 버블논란을 야기하였다.

## 나. 주택가격의 적정성

일반적으로 어떤 주택시장의 가격수준을 가늠하고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PIR(Price-to-Income Ratio,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도 중국의 주택가격 수준과 적정성을 살펴 보기 위해 PIR을 활용하여 주요국과 비교하고자 한다. 여러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들이 PIR 통계를 추산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주택시장 조사연구기관으로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Performance Urban Planning(이하 PUP)의 조사결과를 활용한다.<sup>82)</sup>

PUP는 세계 주요국 대도시의 PIR을 조사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 4-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주택구입능력 등급을 평가하고 있다.<sup>83)</sup> PIR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되며, PIR이 커질수록 주택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PUP는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PIR 수준은 3.0이라고 보았다. 즉 PIR 3.0 이하(소득대비 주택가격이 3배 이하)이면 주택구입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구매여력이 적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PIR이 3.0을 초과하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구입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뜻하는바, PIR이 5.1 이상이면 주택구입 부담감이 가장 큰 단계(주택구입을 심각할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로 평가한다.

---

82) PUP는 세계 주요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주택구입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PIR을 조사·발표하고 있다. PUP는 최근 2014년 3/4분기 통계를 기준으로 9개 주요국(호주, 캐나다, 홍콩, 아일랜드,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영국, 미국) 378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11th Annual Demographia International Housing Affordability Survey: 2015*를 통해 발표하였다. PUP가 조사하는 PIR은 주택가격 적정성, 주택구입능력 등 주택시장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의 하나로 World Bank, UN 및 주요 대학연구기관에서도 권장하고 있다.

83) 여기서 PIR은 '가계의 연간 총소득 중간값' 대비 '주택가격 중간값'의 비율을 의미한다.

표 4-4. PIR에 의한 주택구입능력(Housing Affordability)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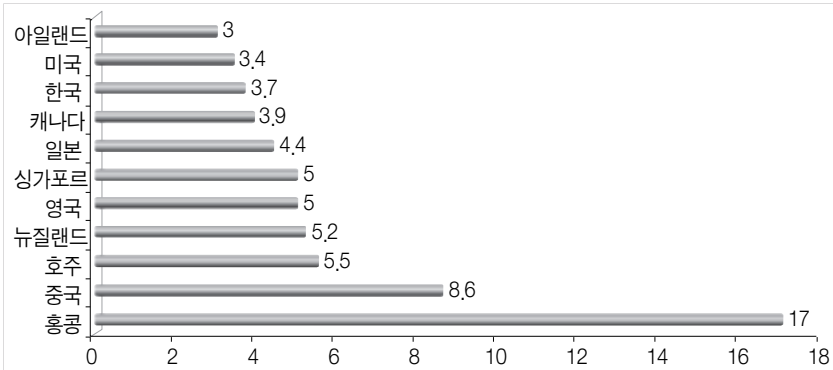
등급	PIR
심각한 부담(Severely Unaffordable)	5.1 이상
상당한 부담(Seriously Unaffordable)	4.1~5.0
다소 부담(Moderately Unaffordable)	3.1~4.0
주택구입 부담 가능(Affordable)	3.0 이하

자료: Performance Urban Planning(2015), p. 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PUP의 2015년 조사결과 조사대상국 중 아일랜드와 미국의 PIR이 각각 3.0, 3.4로 주택구입 부담이 가장 작은 나라로 나타났다. 반면 뉴질랜드와 호주는 각각 5.2, 5.5로 최고 등급인 5.1을 초과함으로써 주택구입에 상당한 부담을 갖는 국가로 드러났다. 홍콩의 PIR은 무려 17.0에 달해 조사대상국 중 가장 심각하게 주택구입에 부담을 주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PIR은 8.6으로 홍콩을 제외한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되며, 가계의 주택구입 부담이 심각하게 큰 국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 동부연해지역 대도시의 PIR은 세계 주요 대도시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의 주택구입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선전의 PIR은 19.6으로 PUP 조사대상 국가 및 지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홍콩을 앞섰으며, 베이징(15.6), 상하이(12.8), 톈진(11.2)도 밴쿠버(10.6), 시드니(9.8), 샌프란시스코(9.2)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루어볼 때 중국의 주택가격은 일반적인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가계에 상당한 재정 부담을 주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택구입을 위한 저축유인을 제고함으로써 가계의 소비수요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0. 주요국 PIR 비교(2014년 기준)<sup>84)</sup>



주: 중국은 Economist의 조사결과치(중국 주요 40개 대도시 대상)이며, 한국은 2013년 기준 국민은행 조사결과치임.  
 자료: Performance Urban Planning(2015), p. 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7. 소결

이상과 같이 본 장에서는 소득불균형 심화, 인구구조 변화, 미흡한 사회 보장제도, 낮은 도시화율,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높은 주택가격을 중국의 소비확대 제약요인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2009년 이후 도농간 소득격차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지역간(동부연해지역과 서부지역) 소득격차와 지니계수로 본 계층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중국정부는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통해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소득분배제도 개혁의 핵심은 개인소득 증대 및 국유기업 이익(배당금) 공유를 통한 초기 분배(1차 분배)와 과세를 통한 분배의 공평성을 추구하는 재분배(2차 분배)의 개선을 가속화하는 데 있

84) PUP는 중국과 한국의 PIR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중국, 한국에 대해서는 각각 Economist, 국민은행의 조사결과치를 인용하여 주요 9개국과 비교하였다.

다. 이를 통해 중산층을 확대하고 계층간 소득격차를 축소하겠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정책목표인 것이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로 인해 소득증가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유기업의 이익 공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에 부딪칠 우려가 있으며, 과세를 통한 재분배의 개선을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분배제도 개혁은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바, 당장 중국의 소득불균형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령화 가속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하락’으로 대변할 수 있다. 이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 부담을 가중시켜 젊은 세대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소비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완비가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1990년대 초부터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해 온 결과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차별화된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인해, 특히 농민공의 수혜비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단일화된 사회보장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가계저축이 지속됨으로써 소비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존재한다.

낮은 도시화율 역시 소비확대 제약요인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중국의 도시화율은 55%에 육박하였으나, 선진국 및 고중소득국 수준을 밑돌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통해 소비확대를 도모하는 ‘신형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형 도시화’를 본격 추진하는 데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제도개혁(호적제도 및 토지제도)의 한계에 부딪칠 우려도 상존한다. 한편

중국정부는 소비자금융 활성화를 통한 소비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전한 기업대출 중시 관행, 미흡한 개인 신용정보 구축과 소비금융에 대한 인식 결여, 신용카드시장의 더딘 발전으로 소비자금융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높은 주택가격 역시 소비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의 하나로 파악된다. 버블논쟁을 야기하며 치솟던 중국의 주택가격은 2012년 이후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주요 대도시의 PIR(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세계 주요국 대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주택가격은 가계의 주택구입을 위한 저축유인을 제고함으로써 소비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2장 4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정부는 과도한 주택가격으로 인한 주거비용 축소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주택 건설을 비롯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경기둔화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지방정부의 이해가 얽혀 있어 보장성 주택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소비를 확대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소비확대를 통한 성장방식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정책 마련만으로는 다양한 소비 제약요인을 단기에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따르며,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수반하는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 시행과 제도개혁 추진에 얽혀 있는 계층간 이해관계의 조율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소비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는 현재 추진 중인 개혁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2012년 이후 7%대의 성장률로 둔화되며 뉴노딜 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위에서 제시한 소비 제약요인이 단기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 중국의 소비확대 제약요인 평가

항목	현황	평가
소득 불균형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농간 · 지역간 · 계층간 소득격차 여전히 높은 수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분배제도 개혁의 한계</li> <li>- 당분간 소득불균형 지속</li> </ul>
인구구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화 가속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하락</li> <li>•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2%로 '고령사회'에 들어설 전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년부양비 증대로 인한 젊은 세대의 재정적 부담은 가처분소득 감소를 초래</li> <li>- 사회보장제도 원비가 필요</li> </ul>
미흡한 사회보장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체계에서 도농의 차별구조 심화</li> <li>• 농민공의 사회보장 수혜비율은 여전히 저조</li> <li>•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가계 저축액 증가 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화된 사회보장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가계의 '저축습관'이 '소비습관'으로 변화 가능</li> </ul>
낮은 도시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화율 상승추세: 1980년 19.4% → 2000년 35.9% → 2013년 53.7%(선진국 평균 77.8%)</li> <li>•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통한 도시주민 소비확대를 목표로 '신형 도시화' 계획 추진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화율 상승만으로 실질적인 소비확대 창출에는 한계</li> <li>-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위해 호적제도와 도시화에 따르는 토지제도 개혁이 필수</li> </ul>
소비자 금융 발달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전히 기업대출 중시 관행, 미흡한 개인 신용정보 구축, 소비금융에 대한 인식 결여, 신용카드 시장 발전 미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금융 관련 제도 마련, 인프라 구축, 소비금융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li> </ul>
높은 주택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이후 주택가격 둔화추세</li> <li>• 높은 PIR 수준으로 볼 때 소비 제약요인 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장성 주택 건설 추진의 한계</li> </ul>

자료: 본문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제5장 중국 소비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방법과 데이터
3. 분석결과
4. 소결



## 1. 선행연구 검토

중국의 낮은 수준의, 그리고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계소비율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설명되고 있는 요인은 저축률과 소득이다. Blanchard and Giavazzi(2005), Kuijs(2005), Modigliani and Cao(2004) 등은 모두 가계소비율 감소가 저축률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특히 노인 가구에서 두드러지는데 의료, 연금, 교육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미흡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저축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Chamon and Prasad(2008)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노인층이 젊은층보다 저축이 많아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 패턴과 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ziz and Cui(2007) 등은 가계소비율 하락은 높은 저축률보다는 가계소득률의 감소에 보다 크게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중국 소비의 결정요인을 가계 소득요인과 저축률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요인이라는 두 가지 큰 흐름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저축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노인부양비율, 금융발전수준, 1인당 GDP, 서비스업 고용비율 등을 꼽고 있다.

한편 중국의 소비 결정요인과 관련한 실증분석을 보면 중국만 놓고 분석하기보다는 중국을 비롯한 국가별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Guo and N'Diaye(2010)를 들 수 있다. 이들은 39개 국가에 대한 1980~2008년 기간의 불균형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계소비를 가계소득, 그리고 가계저축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요인(3차 산업 고용비율, 실질환율, 금융발전수준, 실질이자율, 정부소비, 인구구조 등)의 함수로 보았으며, 상술한 요인들이 대부분 유의하게 나타나 중국 특유의 소비 결정요인은 매우 적다고 보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Wang(2011)도 1978~2008년 기간 213개 국가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수준(1인당 GDP, 1인당 GDP의 실질 성장률), 인구구조, 인플레이션, 실업률, 의료·보건·교육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 은행신용, 이자율, 서비스업 발전, 정부소비, 지니계수 등을 소비의 결정요인으로 보았다. Wang(2011)에 따르면 1인당 GDP, 정부소비, 실업률, 서비스업 발전, 교육에 대한 지출 등은 실증분석방법이나 국가 그룹에 관계없이 가계소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ee, Syed and Liu(2013)은 1997~2010년까지의 중국 성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계소득, 정부소비, 은행신용, 서비스업 고용비율, 노인부양비율, 투자 등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가계소득, 노인부양비율과 투자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어떠한 종류의 투자가 가계소득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본 결과 농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가계소득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제조업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가계소득증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제조업과 부동산에 치우친 투자구조를 농업과 서비스업 위주로 전환하여 투자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 2. 방법과 데이터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중국 성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살펴봄으로써 중국 소비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은 우선 경제성장률, 1인당 GDP, 가계소득, 정부 소비, 투자, 노인부양비율, 서비스업 발전, 물가상승률 등의 일반적인 소비 결정요인 외에 중국 특유의 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수들로는 낮은 금융발전수준, 낮은 수준의 도시화, 확대되는 소득 격차, 높은 주택가격 등이다.<sup>85)</sup> 다음으로 정부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교육, 사회보장, 의료, 주택보장 등과 관련된 정부의 재정지출, 최저임금 기준 등 변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또한 투자종류별로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Lee, Syed and Liu(2013)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투자종류별로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밖에 2009년을 기준으로 금융위기 전과 후로 나누어 가계소비의 결정요인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본다는 점,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으로 나누어 가계소비의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는 점 등에서도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술한대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중국 가계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네 가지 모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본모형은 [식 5-1]과 같다.

$$\frac{C}{Y} = 1 - \exp[\alpha_1 (\frac{\dot{Y}}{Y}) + \alpha_2 (\frac{Y}{N})^{\alpha_3} + \alpha_4 (\frac{Y^h}{Y}) + \alpha_5 (\frac{G}{Y}) + \alpha_6 (\frac{I}{Y}) + \alpha_7 \pi + \alpha_8 D + \alpha_9 (\frac{Y^s}{Y})] + \epsilon^e$$

[식 5-1]

85) 물론 이러한 중국적 요인이 중국 특유의 요인이라기보다는 개도국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중국의 경우 여타 국가에 비해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빠른 경제성장과 동반되어 나타난 특징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특유의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식 5-1]에서  $Y$ 는 GDP,  $Y^h$ 는 가계소득,  $Y^s$ 는 서비스업 부가가치를 나타낸다.  $\frac{Y}{N}$ 와  $\frac{\dot{Y}}{Y}$ 는 각각 1인당 GDP와 경제성장률로 경제발전수준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Modigliani 1966).  $G$ 는 정부소비,  $I$ 는 고정자산투자,  $\pi$ 는 물가상승률,  $D$ 는 노인부양비율을 나타낸다. 물가상승률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계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피구효과를 통해 가계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고, 이자율을 통해 가계소비를 낮출 수도 있다.

다음으로 [식 5-2]는 중국 특유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식 5-1]의 기본 모형에 금융발전수준, 도시화, 소득격차, 주택가격 등의 변수를 차례로 추가하여 보았다.

$$\begin{aligned} \frac{C}{Y} = & 1 - \exp[\alpha_1(\frac{\dot{Y}}{Y}) + \alpha_2(\frac{Y}{N})^{\alpha_3} + \alpha_4(\frac{Y^h}{Y}) + \alpha_5(\frac{G}{Y}) + \alpha_6(\frac{I}{Y}) + \alpha_7\pi + \alpha_8D + \alpha_9(\frac{Y^s}{Y}) \\ & + \alpha_{10}(F^{\alpha_{11}}, U, \frac{U_i}{R_i}, H_i)] + \epsilon \end{aligned}$$

[식 5-2]

[식 5-2]에서  $F^{\alpha_{11}}$ 은 1인당 소액대출로 본 금융발전수준,  $U$ 는 도시화 수준,  $\frac{U_i}{R_i}$ 는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수준, 그리고  $H_i$ 는 주택가격지수를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 [식 5-3]에서는 정부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기본모형에 교육지출, 사회보장과 취업 지출, 의료·보건 지출, 주택보장 지출 등과 더불어 최저임금 기준을 차례로 통제해보았다.

$$\frac{C}{Y} = 1 - \exp[\alpha_1 (\frac{\dot{Y}}{Y}) + \alpha_2 (\frac{Y}{N})^{\alpha_3} + \alpha_4 (\frac{Y^h}{Y}) + \alpha_5 (\frac{G}{Y}) + \alpha_6 (\frac{I}{Y}) + \alpha_7 \pi + \alpha_8 D + \alpha_9 (\frac{Y^s}{Y}) + \alpha_{10} (\frac{E}{G_E}, \frac{S}{G_E}, \frac{M}{G_E}, \frac{H_S}{G_E}, W)] + \epsilon^c$$

[식 5-3]

[식 5-3]에서  $G_E$ 는 정부 총재정지출,  $E$ 는 교육에 대한 지출,  $S$ 는 사회 보장과 취업에 대한 지출,  $M$ 은 의료와 보건에 대한 지출,  $H_S$ 는 주택보장에 대한 지출을 나타낸다.  $W$ 는 최저임금 기준 인상률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식 5-4]에서는 기본모형에 투자종류별 변수를 차례로 통제하여 보았다.

$$\frac{C}{Y} = 1 - \exp[\alpha_1 (\frac{\dot{Y}}{Y}) + \alpha_2 (\frac{Y}{N})^{\alpha_3} + \alpha_4 (\frac{Y^h}{Y}) + \alpha_5 (\frac{G}{Y}) + \alpha_6 (\frac{I}{Y}) + \alpha_7 \pi + \alpha_8 D + \alpha_9 (\frac{Y^s}{Y}) + \alpha_{10} (\frac{I_a}{I}, \frac{I_m}{I}, \frac{I_r}{I}, \frac{I_s}{I})] + \epsilon^c$$

[식 5-4]

[식 5-4]에  $I_a$ ,  $I_m$ ,  $I_r$ ,  $I_s$ 는 각각 농업, 제조업, 부동산, 그리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나타낸다.

상술한 모형들을 실증분석함에서 본 연구에서는 FE(Fixed Effect: 고정 효과)와 RE(Random Effect: 확률효과)의 두 가지 기법으로 추정하였으며, FE와 RE 모델 중 어느 모델이 더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Hausman 검증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의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불균형 패널 데이터로 구체적인 변수는 다음과 같다.

가계소비: GDP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비의 비중

1인당 GDP: 당해 연도 기준 1인당 GDP의 로그값

가계소득: GDP에서 차지하는 임금소득의 비중

정부소비: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소비의 비중

투자: GDP에서 차지하는 고정자본투자의 비중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노인부양비율: 생산가능인구(15~64세)대비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

서비스업 발전: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서비스업 발전(고용):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부문 고용비율

금융발전: 1인당 소액대출의 로그값

도시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도시인구(상주인구 기준)의 비율

소득격차: 농촌가계 1인당 순소득대비 도시가계 1인당 가처분소득 비율

주택가격: 신축 주택 판매가격지수

교육지출: 전체 정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지출 비중

사회보장지출: 전체 정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지출 비중

의료지출: 전체 정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료·보건 지출 비중

주택보장지출: 전체 정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주택보장지출 비중

최저임금인상: 전년대비 최저임금 기준 인상률

농업 투자: 전체 고정자산 투자에서 차지하는 농업 투자 비중

제조업 투자: 전체 고정자산 투자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투자 비중

부동산 투자: 전체 고정자산 투자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투자 비중

서비스업 투자: 전체 고정자산 투자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투자 비중

연해지역: 베이징(北京)시, 톈진(天津)시, 허베이(河北)성, 랴오닝(辽宁)성, 상하이(上海)시, 장쑤(江苏)성, 저장(浙江)성, 푸젠(福建)성, 산둥(山东)성, 광둥(广东)성, 하이난(海南)성 등 11개 성·시

내륙지역: 산시(山西)성, 내이멍구(内蒙古)자치구, 지린(吉林)성, 헤이룽장(黑龙江)성, 안후이(安徽)성, 장시(江西)성, 허난(河南)성, 후베이(湖北)성, 후난(湖南)성, 광시(广西)자치구, 충칭(重庆)시, 쓰촨(四川)성, 구이저우(贵州)성, 윈난(云南)성, 티벳(西藏)자치구, 산시(陕西)성, 간쑤(甘肃)성, 칭하이(青海)성, 닝샤(宁夏)자치구, 신장(新疆)자치구 등 20개 산·시·자치구 이상의 변수들은 CEIC DB(검색일: 2015. 9. 25)를 이용하였으며, 기본 통계량은 [표 5-1]과 같다.

표 5-1. 기본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가계소비	434	36.99	7.09	22.90	62.00
경제성장률	465	11.69	2.45	4.90	23.80
1인당 GDP	465	9.84	0.79	7.90	11.60
서비스업 발전	465	41.30	7.94	28.30	77.90
서비스업 발전(고용)	318	33.12	8.99	16.90	74.10
도시화	301	49.69	14.12	22.30	89.60
노인부양비율	434	11.81	2.50	6.10	21.90
정부소비	434	15.65	5.61	8.70	49.80
투자	434	50.85	15.04	27.70	115.10
가계소득	434	47.43	6.75	31.40	70.40
소득격차	434	3.02	0.65	1.80	5.60
최저임금인상	279	17.17	15.17	0.00	102.60
교육지출	434	15.91	2.69	8.60	22.20
사회보장지출	218	12.43	3.34	5.80	25.50
의료지출	434	5.21	1.48	0.00	9.10
주택보장지출	126	3.81	1.88	0.40	11.00
물가상승률	465	2.40	2.18	-3.30	10.10
금융발전	155	5.65	1.06	2.60	7.80
주택가격	120	2.81	5.88	-10.00	20.20
농업 투자	310	3.35	1.91	0.20	10.70
제조업 투자	310	26.87	11.09	2.00	51.10
부동산 투자	310	23.90	9.48	5.60	59.20
서비스업 투자	310	31.92	7.73	18.60	74.90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9. 25)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3. 분석결과

우선 기본모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5-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우선 경제성장과 1인당 GDP 및 투자는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투자율이 증가하고 소비율은 하락한다는 Chenery and Syrquin (1975)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노인부양비율 또한 소비율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4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비율의 증가로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설명한다. 양로나 의료와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노인부양비율의 증가는 미래에 대비한 저축의 증가와 소비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Guo and N'Diaye(2010)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가계소득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의 낮은 노동소득분배율이 소비확대를 제약해왔음이 확인되었다. Guo and N'Diaye(2010)에 따르면 2000~07년 기간 중국 소비율 하락의 3분의 1은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수출지향형 경제성장으로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이 낮고, 더딘 고용성장은 다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회귀분석결과에서 서비스업 발전은 부가가치 기준이든 고용 기준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86)</sup> 이는 한편으로 제조업에 비해 보다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의 발전이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소비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

86) 서비스업 발전과 관련하여 성별 고용 기준 데이터는 2011년 이후부터는 찾아볼 수 없어, 본 연구의 뒷부분 실증분석에서는 2014년까지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표 5-2.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기본모형(전체)

	Model I		Model II	
	FE	RE	FE	RE
경제성장률	-0,341 (0,000)***	-0,391 (0,000)***	-0,207 (0,023)**	-0,236 (0,009)***
1인당 GDP	-4,124 (0,000)***	-4,454 (0,000)***	-5,153 (0,000)***	-5,692 (0,000)***
가계소득	0,053 (0,066)*	0,068 (0,020)**	0,045 (0,188)	0,058 (0,080)*
정부소비	-0,010 (0,819)	-0,055 (0,211)	0,023 (0,669)	-0,011 (0,837)
투자	-0,064 (0,000)***	-0,061 (0,000)***	-0,096 (0,000)***	-0,086 (0,000)***
물가상승률	-0,031 (0,601)	0,007 (0,914)	-0,108 (0,102)	-0,073 (0,276)
노인부양비율	-0,289 (0,002)***	-0,178 (0,053)*	-0,292 (0,015)**	-0,156 (0,175)
서비스업 발전	0,371 (0,000)***	0,312 (0,000)***		
서비스업 발전(고용)			0,121 (0,090)*	0,136 (0,024)**
상수항	70,525 (0,000)***	75,206 (0,000)***	91,515 (0,000)***	94,193 (0,000)***
R <sup>2</sup>	0,781	0,778	0,764	0,762
Obs.	434	434	318	318
Hausman test	0,000		0,000	

주: 1) ( ) 안의 숫치는 t값임.  
 2) Hausman test값은 p값임.  
 3) FE 모델과 RE 모델에 대한 R<sup>2</sup>값은 within 값임.  
 4)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의미함.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9. 25)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계산.

른 한편으로 서비스업의 발전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소비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중국은 서비스업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비중이 낮고, 특히 선진국과 비교하여 서비스업 발전수준이

표 5-3.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기본모형(연해지역과 내륙지역)

	연해지역		내륙지역	
	FE	RE	FE	RE
경제성장률	-0.364 (0,000)***	-0.385 (0,000)***	-0.285 (0,001)***	-0.374 (0,000)***
1인당 GDP	-2.500 (0,000)***	-1.964 (0,000)***	-5.271 (0,000)***	-6.103 (0,000)***
가계소득	-0.035 (0,444)	0.012 (0,784)	0.101 (0,006)***	0.106 (0,004)***
정부소비	-0.267 (0,011)**	-0.379 (0,000)***	0.023 (0,653)	-0.075 (0,145)
투자	-0.147 (0,000)***	-0.189 (0,000)***	-0.035 (0,067)*	-0.029 (0,139)
물가상승률	-0.076 (0,314)	-0.073 (0,362)	-0.045 (0,576)	-0.009 (0,911)
노인부양비용	-0.313 (0,001)***	-0.287 (0,002)***	0.016 (0,922)	0.409 (0,005)***
서비스업 발전	0.341 (0,000)***	0.234 (0,000)***	0.305 (0,000)***	0.242 (0,000)***
상수항	64,306 (0,000)***	64,743 (0,000)***	76,954 (0,000)***	84,969 (0,000)***
R <sup>2</sup>	0.757	0.746	0.803	0.794
Obs.	154	154	280	280
Hausman test	0,008		0,000	

주: 1) ( ) 안의 숫치는 t값임.  
 2) Hausman test값은 p값임.  
 3) FE 모델과 RE 모델에 대한 R<sup>2</sup>값은 within 값임.  
 4)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의미함.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9. 25)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계산.

매우 낮기 때문에 소비확대를 제약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정부소비와 물가는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정부소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한편으로 정부소비가 많으면 밀어내기 효과로 인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비 비중이 줄어들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정부소비가 교육, 사회보장, 취업 등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경우 가계소비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

표 5-4.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기본모형(금융위기 전후)

	금융위기 이전(2000-07년)		금융위기 이후(2008-14년)	
	FE	RE	FE	RE
경제성장률	-0.436 (0.001)***	-0.495 (0.000)***	-0.057 (0.376)	-0.073 (0.267)
가계소득	0.092 (0.027)**	0.138 (0.001)***	0.173 (0.000)***	0.197 (0.000)***
정부소비	0.040 (0.500)	0.059 (0.320)	-0.036 (0.749)	-0.167 (0.073)*
투자	-0.156 (0.000)***	-0.143 (0.000)***	-0.028 (0.091)*	-0.037 (0.022)**
물가상승률	-0.138 (0.155)	-0.108 (0.286)	-0.020 (0.685)	-0.045 (0.375)
노인부양비율	-0.285 (0.054)*	-0.240 (0.097)*	-0.169 (0.096)*	-0.122 (0.226)
서비스업 발전	0.503 (0.000)***	0.339 (0.000)***	0.414 (0.000)***	0.303 (0.000)***
상수항	29,386 (0.000)***	33,216 (0.000)***	13,540 (0.001)***	19,178 (0.000)***
R <sup>2</sup>	0.671	0.663	0.318	0.298
Obs.	248	248	186	186
Hausman test	0.345		0.968	

주: 1) ( ) 안의 숫치는 t값임.  
 2) Hausman test값은 p값임.  
 3) FE 모델과 RE 모델에 대한 R<sup>2</sup>값은 within 값임.  
 4)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의미함.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9. 25)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계산.

나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소비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가계소비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밀어내기 효과가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분석결과에 걸쳐 R<sup>2</sup>은 0.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FE 모형과 RE 모형을 검증한 Hausman test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RE 모형이 보다

효율적이다'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FE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가계소득증대에 의한 가계소비증가 효과가 내륙지역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고 연해지역에서는 유의도를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으로 인한 가계소비율의 하락이 내륙지역에서 더 두드러짐을 나타낸다. 즉 소득수준이 보다 낮은 내륙지역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이 보다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전(2000~07년)과 이후(2008~14년)로 나누어 분석해본 결과, 경제성장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이 금융위기 이전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유의성이 사라졌다. 이는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소비율이 하락한다는 이론을 재차 검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본모형에 중국 요인(금융발전, 도시화, 소득격차, 주택가격)을 차례로 통제해본 결과는 [표 5-5]~[표 5-8]에 표시되어 있다. 4개 요인 중 금융발전, 도시화, 소득격차, 주택가격 모두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발전은 RE 모형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금융발전이 소비진작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일정 부분 증명되었다. 다시 말해 그동안 금융의 미발달이 소비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는 것이다. 도시화 또한 기대한 것과 같이 내수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중국이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며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금융위기 이후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5-8 참고). 중국의 심각한 소득격차는 가계소비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그 반대

의 결과가 나타났다. 4장에서 기술했듯이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의 소득이 저소득층에 비해 과도하게 집중되는 소득불균형은 사회 전체적인 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중국의 경우에도 고소득층의 평균 소비성향이 저소득층에 비해 낮고 도농간, 계층간 및 지역간 소득격차가 커 이것이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증분석에서 예상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중국 가계소비의 70% 정도가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소득불균형 정도를 도농간 소득격차로 측정했기에 도시지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전체 지니계수나 도시지역 내의 소득격차를 반영하는 변수를 사용했다라면 유의미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러한 변수의 지역별 접근에는 어려움이 있다. 주택가격 또한 높은 주택가격이 소비를 제약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RE 모형)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의 부의 효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투자와 투기가 심한 중국에서 주택은 자산 효과가 크므로, 그동안의 빠른 자산가격 상승이 소비를 증가시키는 부의 효과를 초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변수의 사용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축 주택 판매가격지수라는 변수를 사용했는데, 만약 소득대비 주택가격이나 주택가격의 절대치를 변수로 사용했다면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지역별 데이터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

표 5-5.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중국요인(전체)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FE	RE	FE	RE	FE	RE	FE	RE
경제성장률	-0.217 (0.007)***	-0.262 (0.002)***	-0.374 (0.000)***	-0.440 (0.000)***	-0.395 (0.000)***	-0.457 (0.000)***	-0.083 (0.523)	-0.242 (0.045)**
1인당 GDP	-3.410 (0.009)***	-5.941 (0.000)***	-8.659 (0.000)***	-7.313 (0.000)***	-4.211 (0.000)***	-4.442 (0.000)***	-0.805 (0.751)	-7.632 (0.000)***
가계소득	0.005 (0.904)	0.032 (0.461)	-0.061 (0.112)	0.006 (0.879)	0.047 (0.099)*	0.056 (0.054)*	-0.021 (0.725)	0.002 (0.976)
정부소비	-0.131 (0.207)	-0.289 (0.001)***	0.255 (0.000)***	0.021 (0.751)	0.016 (0.719)	-0.059 (0.175)	-0.141 (0.317)	-0.261 (0.021)**
투자	0.042 (0.028)**	0.010 (0.604)	0.058 (0.002)***	0.024 (0.220)	-0.047 (0.003)***	-0.052 (0.001)***	0.030 (0.266)	0.013 (0.563)
물가상승률	-0.004 (0.957)	-0.043 (0.589)	0.021 (0.708)***	0.009 (0.890)	-0.032 (0.593)	0.002 (0.968)	0.030 (0.846)	-0.256 (0.031)**
노인부양비율	0.056 (0.639)	0.161 (0.180)	-0.303 (0.005)***	-0.175 (0.122)	-0.337 (0.000)***	-0.189 (0.038)**	0.165 (0.311)	0.140 (0.337)
서비스업 발전	0.420 (0.000)***	0.351 (0.000)	0.280 (0.000)***	0.200 (0.001)***	0.364 (0.000)***	0.306 (0.000)***	0.441 (0.002)***	0.372 (0.000)***
금융발전	0.192 (0.490)	0.620 (0.019)**						
도시화			0.359 (0.000)***	0.169 (0.003)***				
소득격차					1,710 (0.000)***	1,685 (0.000)***		
주택가격							0.012 (0.654)	0.047 (0.040)**
상수항	52,088 (0.000)***	81,718 (0.000)***	97,365 (0.000)***	98,010 (0.000)***	66,719 (0.000)***	71,333 (0.000)***	24,302 (0.423)	104,163 (0.000)***
R <sup>2</sup>	0.498	0.436	0.641	0.598	0.788	0.782	0.501	0.430
Obs.	124	124	279	279	434	434	90	90
Hausman test	0,000		0,000		0,000		0,518	

주: 1) ( ) 안의 숫자는 t값임.

2) Hausman test값은 p값임.

3) FE 모델과 RE 모델에 대한 R<sup>2</sup>값은 within 값임.

4)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의미함.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9. 25)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계산.

표 5-6.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중국요인(연해지역)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FE	RE	FE	RE	FE	RE	FE	RE
경제성장률	-0.391 (0,018)**	-0.461 (0,013)**	-0.329 (0,001)***	-0.485 (0,000)***	-0.373 (0,000)***	-0.468 (0,000)***	-0.272 (0,400)	-0.771 (0,018)**
1인당 GDP	6.478 (0,061)*	-9,080 (0,000)***	-4,167 (0,000)***	-3,531 (0,001)***	-2,557 (0,000)***	-2,289 (0,000)***	8,638 (0,102)	-7,871 (0,002)***
가계소득	0,024 (0,748)	-0,110 (0,157)	-0,066 (0,217)	-0,007 (0,909)	-0,036 (0,437)	-0,002 (0,964)	0,003 (0,983)	-0,139 (0,233)
정부소비	-0,276 (0,206)	-1,478 (0,000)***	0,067 (0,675)	-0,598 (0,000)***	-0,269 (0,011)**	-0,445 (0,000)***	-0,156 (0,720)	-1,414 (0,000)***
투자	-0,009 (0,896)	-0,085 (0,014)**	-0,076 (0,039)**	-0,131 (0,000)***	-0,145 (0,000)***	-0,187 (0,000)***	-0,082 (0,461)	-0,064 (0,206)
물가상승률	0,020 (0,851)	-0,212 (0,378)	-0,069 (0,344)	-0,037 (0,684)	-0,074 (0,334)	-0,056 (0,503)	0,424 (0,152)	-0,235 (0,522)
노인부양비율	0,194 (0,239)	-0,370 (0,073)*	-0,182 (0,111)	-0,315 (0,009)***	-0,316 (0,001)***	-0,263 (0,006)***	0,120 (0,618)	-0,348 (0,230)
서비스업 발전	0,422 (0,040)**	0,743 (0,000)***	0,270 (0,011)**	0,297 (0,001)***	0,344 (0,000)***	0,259 (0,000)***	0,518 (0,185)	0,709 (0,000)***
금융발전	-1,907 (0,008)***	1,075 (0,053)*						
도시화			0,210 (0,015)**	0,025 (0,657)				
소득격차					0,226 (0,842)	1,741 (0,075)*		
주택가격							-0,034 (0,454)	0,041 (0,493)
상수항	-42,007 (0,211)	129,793 (0,000)***	63,613 (0,000)***	79,348 (0,000)***	64,293 (0,000)***	64,660 (0,000)***	-80,330 (0,212)	126,707 (0,000)***
R <sup>2</sup>	0,744	0,275	0,522	0,394	0,757	0,738	0,706	0,256
Obs.	44	44	99	99	154	154	33	33
Hausman test	0,000		0,000		0,023		0,000	

주: 1) ( ) 안의 숫치는 t값임.

2) Hausman test값은 p값임.

3) FE 모델과 RE 모델에 대한 R<sup>2</sup>값은 within 값임.

4)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의미함.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9. 25)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계산.

표 5-7.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중국요인(내륙지역)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FE	RE	FE	RE	FE	RE	FE	RE
경제성장률	-0.177 (0.109)	-0.206 (0.102)	-0.294 (0.001)***	-0.319 (0.004)***	-0.324 (0.000)***	-0.388 (0.000)***	0.044 (0.849)	-0.041 (0.833)
1인당 GDP	-4.719 (0.002)***	-9.798 (0.000)***	-10.203 (0.000)***	-8.121 (0.000)***	-5.042 (0.000)***	-5.940 (0.000)***	-2.997 (0.348)	-12.644 (0.000)***
가계소득	0.014 (0.799)	0.049 (0.426)	-0.037 (0.447)	0.079 (0.174)	0.095 (0.009)***	0.102 (0.006)***	-0.004 (0.959)	0.028 (0.681)
정부소비	-0.017 (0.897)	-0.311 (0.001)***	0.296 (0.000)***	-0.099 (0.207)	0.048 (0.354)	-0.067 (0.192)	-0.135 (0.457)	-0.192 (0.079)*
투자	0.051 (0.026)**	-0.005 (0.833)	0.089 (0.000)***	0.034 (0.183)	-0.025 (0.192)	-0.028 (0.159)	0.037 (0.276)	0.028 (0.247)
물가상승률	0.007 (0.947)	-0.047 (0.714)	0.016 (0.823)	-0.022 (0.817)	-0.044 (0.580)	-0.014 (0.864)	-0.121 (0.614)	-0.624 (0.001)***
노인부양비율	0.085 (0.675)	0.507 (0.005)***	-0.263 (0.225)	0.772 (0.000)***	-0.107 (0.522)	0.348 (0.022)**	0.291 (0.263)	0.381 (0.022)**
서비스업 발전	0.330 (0.001)***	0.254 (0.007)***	0.106 (0.249)	0.035 (0.699)	0.320 (0.000)***	0.246 (0.000)***	0.415 (0.013)**	0.280 (0.005)***
금융발전	0.514 (0.124)	1.325 (0.000)***						
도시화			0.425 (0.000)***	0.090 (0.276)				
소득격차					1.511 (0.013)**	0.623 (0.243)		
주택가격							0.051 (0.359)	0.130 (0.010)*
상수항	64,560 (0.000)***	117,881 (0.000)***	113,009 (0.000)***	101,822 (0.000)***	70,331 (0.000)***	82,040 (0.000)***	45,999 (0.223)	152,560 (0.000)***
R <sup>2</sup>	0.492	0.328	0.708	0.602	0.807	0.797	0.516	0.399
Obs.	80	80	180	180	280	280	57	57
Hausman test	0.000		0.000		0.378		0.089	

주: 1) ( ) 안의 숫자는 t값임.

2) Hausman test값은 p값임.

3) FE 모델과 RE 모델에 대한 R<sup>2</sup>값은 within 값임.

4)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의미함.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9. 25)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계산.

표 5-8.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중국요인(금융위기 전후)

	금융위기 이전(2000-07년)				금융위기 이후(2008-14년)			
	Model I		Model II		Model I		Model II	
	FE	RE	FE	RE	FE	RE	FE	RE
경제성장률	-0,046 (0,776)	-0,030 (0,851)	-0,322 (0,026)**	-0,309 (0,034)**	-0,173 (0,006)***	-0,249 (0,001)***	-0,208 (0,003)***	-0,250 (0,001)***
1인당 GDP	-8,734 (0,000)***	-11,641 (0,000)***	-3,885 (0,000)***	-5,433 (0,000)***	-6,313 (0,000)***	-4,675 (0,000)***	-2,503 (0,001)***	-2,120 (0,008)***
가계소득	-0,031 (0,773)	0,005 (0,954)	0,048 (0,243)	0,052 (0,210)	0,101 (0,011)**	0,130 (0,004)***	0,094 (0,030)**	0,118 (0,012)**
정부소비	0,073 (0,370)	0,008 (0,916)	0,058 (0,300)	0,008 (0,891)	0,014 (0,886)	-0,228 (0,010)*	-0,034 (0,744)	-0,349 (0,000)***
투자	0,015 (0,811)	-0,064 (0,172)	-0,094 (0,002)***	-0,092 (0,001)***	0,030 (0,074)*	0,016 (0,383)	0,020 (0,277)	0,002 (0,902)
물가상승률	0,045 (0,756)	0,140 (0,303)	-0,036 (0,709)	0,049 (0,625)	0,024 (0,574)	-0,009 (0,868)	0,024 (0,621)	0,005 (0,921)
노인부양비율	0,132 (0,678)	0,660 (0,004)***	-0,222 (0,133)	0,074 (0,595)	-0,064 (0,503)	-0,120 (0,249)	-0,268 (0,007)***	-0,148 (0,161)
서비스업 발전	-0,010 (0,954)	0,146 (0,155)	0,461 (0,000)***	0,307 (0,000)***	0,357 (0,000)***	0,248 (0,000)***	0,449 (0,000)***	0,326 (0,000)***
도시화	-0,197 (0,475)	0,095 (0,304)			0,390 (0,000)***	0,159 (0,010)*		
소득격차			2,610 (0,001)***	2,366 (0,000)***			0,273 (0,801)	1,636 (0,093)*
상수항	129,294 (0,000)***	134,046 (0,000)***	56,206 (0,000)***	74,564 (0,000)***	60,566 (0,000)***	64,719 (0,000)***	40,933 (0,001)	41,843 (0,000)***
R <sup>2</sup>	0,644	0,607	0,706	0,690	0,516	0,417	0,414	0,333
Obs.	93	93	248	248	186	186	186	186
Hausman test	0,334		0,000		0,997		0,000	

주: 1) ( ) 안의 숫치는 t값임.

2) Hausman test값은 p값임.

3) FE 모델과 RE 모델에 대한 R2값은 within 값임.

4)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의미함.

5) 금융발전(1인당 소액대출로 측정)과 주택가격(신축주택 판매가격지수로 측정)은 금융위기 이전 데이터를 지역별로 찾아볼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9. 25)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계산.

그 다음으로 기본모형에 정부정책(교육지출, 의료지출, 사회보장지출, 주택보장지출, 최저임금인상)을 차례로 통제한 결과는 [표 5-9]~[표 5-12]에 나타나 있다. [표 5-9]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5개의 정부정책 중 어느 요인도 가계소비증대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인상의 경우 연해지역에서 소비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표 5-10 참고), 실제로 2000년대 후반 이후 본격 시행된 최저임금인상은 내륙지역보다는 연해지역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도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림으로써 소비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 정부의 교육지출 증대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을 설명해준다(표 5-12 참고). 의료와 사회보장의 경우 최근 들어 각종 법규와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정부의 재정투입이 늘어나면서 순조롭게 진행 중이나, 이제 막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어 아직 소비증대로 이어지기에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보장의 경우 한편으로 중앙정부의 보장성 주택 보급의지가 그리 강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지방정부들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등 예상에 못 미치는 진도를 보이고 있어 소비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9.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정부정책(전체)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Model V	
	FE	RE	FE	RE	FE	RE	FE	RE	FE	RE
경제성장률	-0,337 (0,000)***	-0,372 (0,000)***	-0,359 (0,000)***	-0,401 (0,000)***	-0,225 (0,001)***	-0,279 (0,000)***	-0,227 (0,004)***	-0,337 (0,000)***	-0,340 (0,000)***	-0,368 (0,000)***
1인당 GDP	-4,150 (0,000)***	-4,551 (0,000)***	-3,592 (0,000)***	-4,100 (0,000)***	-4,444 (0,000)***	-4,619 (0,000)***	-2,513 (0,007)***	-4,320 (0,000)***	-5,065 (0,000)***	-5,027 (0,000)***
가계소득	0,052 (0,068)*	0,067 (0,022)**	0,060 (0,037)**	0,073 (0,013)**	-0,012 (0,748)	0,041 (0,314)	0,003 (0,948)	0,009 (0,836)	-0,053 (0,182)	0,015 (0,725)
정부소비	-0,010 (0,812)	-0,054 (0,213)	-0,016 (0,718)	-0,055 (0,209)	0,098 (0,284)	-0,242 (0,002)***	-0,130 (0,202)	-0,331 (0,000)***	0,126 (0,059)*	-0,110 (0,093)*
투자	-0,064 (0,000)***	-0,059 (0,000)***	-0,065 (0,000)***	-0,061 (0,000)***	0,033 (0,089)*	0,000 (0,996)	0,041 (0,038)**	0,026 (0,165)	0,044 (0,022)**	0,005 (0,809)
물가상승률	-0,036 (0,564)	-0,011 (0,869)	-0,043 (0,469)	-0,001 (0,983)	0,052 (0,324)	0,029 (0,627)	-0,001 (0,985)	-0,052 (0,524)	-0,002 (0,970)	-0,009 (0,882)
노인부양비용	-0,290 (0,002)***	-0,185 (0,044)**	-0,279 (0,003)***	-0,177 (0,054)*	-0,307 (0,002)***	-0,190 (0,078)*	0,052 (0,659)	0,175 (0,149)	-0,402 (0,000)***	-0,195 (0,084)*
서비스업 발전	0,370 (0,000)***	0,313 (0,000)***	0,358 (0,000)***	0,304 (0,000)***	0,476 (0,000)***	0,344 (0,000)***	0,413 (0,000)***	0,353 (0,000)***	0,325 (0,000)***	0,262 (0,000)***
교육지출	0,025 (0,780)	0,095 (0,280)								
의료지출			-0,286 (0,034)**	-0,192 (0,161)						
사회보장지출					-0,127 (0,165)	-0,071 (0,439)				
주택보장지출							-0,043 (0,678)	0,102 (0,345)		
최저임금인상									0,002 (0,835)	0,002 (0,831)
상수항	70,388 (0,000)***	74,465 (0,000)***	67,307 (0,000)***	72,948 (0,000)***	65,264 (0,000)***	75,729 (0,000)***	44,547 (0,000)***	69,043 (0,000)***	79,904 (0,000)***	82,612 (0,000)***
R <sup>2</sup>	0,781	0,778	0,784	0,780	0,447	0,363	0,504	0,439	0,506	0,453
Obs.	434	434	434	434	218	218	126	126	248	248
Hausman test:	0,000		0,000		0,569		0,000		0,000	

주: 1) ( ) 안의 숫치는 t값임.

2) Hausman test값은 p값임.

3) FE 모델과 RE 모델에 대한 R<sup>2</sup>값은 within 값임.

4)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의미함.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9. 25)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계산.

표 5-10.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정부정책(연해지역)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Model V	
	FE	RE	FE	RE	FE	RE	FE	RE	FE	RE
경제성장률	-0,351 (0,000)***	-0,380 (0,000)***	-0,394 (0,000)***	-0,439 (0,000)***	-0,286 (0,009)***	-0,654 (0,000)***	-0,215 (0,204)	-0,491 (0,003)***	-0,340 (0,002)***	-0,542 (0,000)***
1인당 GDP	-2,553 (0,000)***	-2,082 (0,000)***	-2,218 (0,000)***	-1,515 (0,003)***	-1,319 (0,329)	-4,581 (0,000)***	-0,698 (0,783)	-4,335 (0,023)**	-0,934 (0,423)	-3,235 (0,003)***
가계소득	-0,037 (0,431)	-0,001 (0,987)	-0,025 (0,593)	0,032 (0,475)	-0,065 (0,305)	-0,120 (0,074)*	-0,048 (0,567)	-0,127 (0,114)	-0,071 (0,205)	-0,053 (0,373)
정부소비	-0,263 (0,013)**	-0,324 (0,001)***	-0,295 (0,006)***	-0,401 (0,000)***	-0,104 (0,537)	-1,003 (0,000)***	-0,223 (0,390)	-1,237 (0,000)***	-0,066 (0,691)	-0,671 (0,000)***
투자	-0,146 (0,000)***	-0,175 (0,000)***	-0,144 (0,000)***	-0,178 (0,000)***	-0,150 (0,002)***	-0,124 (0,001)***	-0,032 (0,691)	-0,126 (0,002)**	-0,137 (0,001)***	-0,129 (0,001)***
물가상승률	-0,085 (0,273)	-0,081 (0,302)	-0,071 (0,348)	-0,063 (0,420)	-0,076 (0,307)	0,003 (0,976)	-0,034 (0,801)	-0,376 (0,139)	-0,157 (0,033)**	-0,104 (0,222)
노인부양비율	-0,315 (0,001)**	-0,301 (0,001)***	-0,309 (0,001)***	-0,294 (0,001)***	-0,294 (0,012)**	-0,402 (0,002)***	0,013 (0,944)	-0,377 (0,065)*	-0,271 (0,013)**	-0,329 (0,005)***
서비스업 발전	0,335 (0,000)***	0,244 (0,000)***	0,344 (0,000)***	0,239 (0,000)***	0,337 (0,011)**	0,436 (0,000)***	0,531 (0,038)**	0,579 (0,000)***	0,251 (0,022)**	0,336 (0,000)***
교육지출	0,068 (0,560)	0,016 (0,878)								
의료지출			-0,256 (0,214)	-0,470 (0,018)**						
사회보장지출					-0,054 (0,751)	0,101 (0,316)				
주택보장지출							-0,139 (0,669)	0,948 (0,040)**		
최저임금인상									0,029 (0,016)**	0,030 (0,034)**
상수항	63,874 (0,000)***	64,569 (0,000)***	62,724 (0,000)***	62,029 (0,000)***	50,423 (0,001)***	97,811 (0,000)***	24,779 (0,362)	90,468 (0,000)***	49,067 (0,000)***	79,581 (0,000)***
R2	0,757	0,751	0,759	0,750	0,501	0,314	0,656	0,285	0,528	0,439
Obs.	154	154	154	154	78	78	44	44	88	88
Hausman test	0,004		0,000		0,000		0,000		0,002	

주: 1) ( ) 안의 숫치는 t값임.

2) Hausman test값은 p값임.

3) FE 모델과 RE 모델에 대한 R<sup>2</sup>값은 within 값임.

4)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의미함.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9. 25)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계산.

표 5-11.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정부정책(내륙지역)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Model V	
	FE	RE	FE	RE	FE	RE	FE	RE	FE	RE
경제성장률	-0,284 (0,002)***	-0,352 (0,000)***	-0,293 (0,001)***	-0,371 (0,000)***	-0,133 (0,126)	-0,101 (0,327)	-0,210 (0,058)*	-0,285 (0,023)**	-0,220 (0,025)**	-0,197 (0,086)*
1인당 GDP	-5,276 (0,000)***	-6,374 (0,000)***	-4,773 (0,000)***	-5,898 (0,000)***	-4,926 (0,000)***	-5,089 (0,000)***	-2,628 (0,022)**	-5,323 (0,000)***	-5,834 (0,000)***	-6,120 (0,000)***
가계소득	0,101 (0,006)***	0,105 (0,005)***	0,106 (0,004)***	0,108 (0,004)***	0,007 (0,874)	0,088 (0,087)*	-0,006 (0,917)	-0,013 (0,836)	-0,024 (0,633)	0,085 (0,126)
정부소비	0,023 (0,655)	-0,087 (0,092)*	0,021 (0,678)	-0,069 (0,181)	0,235 (0,026)**	-0,294 (0,001)***	-0,043 (0,734)	-0,406 (0,000)***	0,177 (0,018)**	-0,132 (0,089)*
투자	-0,035 (0,068)*	-0,026 (0,195)	-0,038 (0,050)**	-0,031 (0,123)	0,072 (0,001)***	0,009 (0,716)	0,056 (0,020)**	0,026 (0,305)	0,077 (0,001)***	0,026 (0,312)
물가상승률	-0,046 (0,584)	-0,040 (0,655)	-0,060 (0,459)	-0,016 (0,848)	0,088 (0,188)	0,026 (0,761)	0,008 (0,936)	-0,036 (0,768)	0,006 (0,938)	-0,026 (0,776)
노인부양비용	0,015 (0,925)	0,431 (0,003)***	0,019 (0,908)	0,388 (0,009)***	0,000 (0,999)	0,511 (0,007)***	0,032 (0,868)	0,449 (0,019)**	-0,058 (0,796)	0,693 (0,000)***
서비스업 발전	0,305 (0,000)***	0,237 (0,000)***	0,298 (0,000)***	0,243 (0,000)***	0,429 (0,000)***	0,291 (0,004)***	0,333 (0,001)***	0,355 (0,000)***	0,216 (0,034)**	0,084 (0,379)
교육지출	0,005 (0,963)	0,177 (0,124)								
의료지출			-0,228 (0,187)	-0,071 (0,689)						
사회보장지출					-0,146 (0,164)	-0,111 (0,314)				
주택보장지출							-0,058 (0,634)	0,157 (0,280)		
최저임금인상									0,001 (0,956)	0,000 (0,973)
상수항	76,920 (0,000)***	84,596 (0,000)***	73,690 (0,000)***	83,419 (0,000)***	62,540 (0,000)***	71,560 (0,000)***	48,100 (0,000)***	78,303 (0,000)***	82,125 (0,000)***	83,983 (0,000)***
R <sup>2</sup>	0,803	0,791	0,804	0,780	0,554	0,400	0,485	0,345	0,586	0,482
Obs.	280	280	280	280	140	140	82	82	160	160
Hausman test	0,000		0,939		0,000		0,678		0,000	

주: 1) ( ) 안의 숫치는 t값임.

2) Hausman test값은 p값임.

3) FE 모델과 RE 모델에 대한 R<sup>2</sup>값은 within 값임.

4)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의미함.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9. 25)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계산.

표 5-12.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정부정책(금융위기 전후)

	금융위기 이전(2000-07년)				금융위기 이후(2008-14년)			
	Model I		Model II		Model I		Model II	
	FE	RE	FE	RE	FE	RE	FE	RE
경제성장률	-0.203 (0.159)	-0.103 (0.472)	-0.204 (0.150)	-0.136 (0.334)	-0.165 (0.017)**	-0.188 (0.013)**	-0.204 (0.003)***	-0.240 (0.001)***
1인당 GDP	-3.204 (0.001)***	-5.806 (0.000)***	-3.118 (0.001)***	-5.468 (0.000)***	-2.881 (0.000)***	-3.253 (0.000)***	-2.412 (0.000)***	-3.186 (0.000)***
가계소득	0.064 (0.128)	0.074 (0.082)*	0.065 (0.119)	0.081 (0.055)*	0.092 (0.031)**	0.113 (0.014)**	0.092 (0.036)**	0.122 (0.009)***
정부소비	0.049 (0.394)	0.044 (0.444)	0.056 (0.327)	0.053 (0.353)	-0.054 (0.595)	-0.322 (0.000)***	-0.030 (0.775)	-0.322 (0.000)***
투자	-0.133 (0.000)***	-0.106 (0.000)***	-0.135 (0.000)***	-0.110 (0.000)***	0.027 (0.136)	0.012 (0.518)	0.017 (0.349)	0.003 (0.860)
물가상승률	-0.022 (0.834)	0.056 (0.598)	-0.009 (0.932)	0.109 (0.294)	0.001 (0.983)	-0.029 (0.588)	0.010 (0.843)	0.004 (0.940)
노인부양비용	-0.138 (0.352)	0.105 (0.464)	-0.145 (0.328)	0.097 (0.497)	-0.286 (0.003)***	-0.196 (0.055)*	-0.272 (0.005)***	-0.183 (0.077)*
서비스업 발전	0.474 (0.000)***	0.298 (0.000)***	0.455 (0.000)***	0.294 (0.000)***	0.437 (0.000)***	0.332 (0.000)***	0.453 (0.000)***	0.330 (0.000)***
교육지출	-0.089 (0.489)	0.056 (0.645)			0.203 (0.012)**	0.241 (0.005)***		
의료지출			-0.385 (0.101)	-0.413 (0.086)*			-0.164 (0.362)	0.188 (0.314)
상수항	57.367 (0.000)***	80.924 (0.000)***	57.637 (0.000)***	80.705 (0.000)***	42.602 (0.000)***	53.407 (0.000)***	41.971 (0.000)***	56.039 (0.000)***
R <sup>2</sup>	0.691	0.673	0.695	0.678	0.438	0.382	0.417	0.339
Obs.	248	248	248	248	186	186	186	186
Hausman test	0,000		0,000		0,051		0,313	

주: 1) ( ) 안의 숫자는 t값임.

2) Hausman test값은 p값임.

3) FE 모델과 RE 모델에 대한 R<sup>2</sup>값은 within 값임.

4)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의미함.

5) 사회보장지출과 주택보장지출은 금융위기 이전 데이터를 지역별로 찾아볼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됨.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9. 25)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계산.

끝으로 투자종류별로 가계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모형에 종류별 투자(농업 투자, 제조업 투자, 부동산 투자, 서비스업 투자)를 차례로 통제한 결과는 [표 5-13]~[표 5-17]에 표시되어 있다. [표 5-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 투자와 부동산 투자는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반면, 농업 투자와 서비스업 투자는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 투자와 서비스업 투자가 가계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Lee, Syed and Liu(2013)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제조업 투자와 부동산 투자는 기업수익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농업 투자와 서비스업 투자는 가계소득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계소비확대로 연결되는 것이다. 한편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제조업 투자와 부동산 투자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내륙지역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나 내륙지역의 제조업과 부동산 분야의 투자 효율성이 보다 문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해지역에서는 농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내륙지역에서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각각 소비증대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5-14, 표 5-15 참고), 금융위기 이전에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농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각각 소비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6, 표 5-17 참고).

표 5-13.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투자종류(전체)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FE	RE	FE	RE	FE	RE	FE	RE
경제성장률	0.107 (0.228)	0.052 (0.584)	0.041 (0.635)	-0.014 (0.884)	-0.051 (0.555)	-0.072 (0.438)	-0.004 (0.960)	-0.046 (0.613)
가계소득	-0.163 (0.002)***	-0.107 (0.045)**	-0.144 (0.005)***	-0.086 (0.101)	-0.157 (0.002)***	-0.107 (0.037)**	-0.137 (0.005)***	-0.093 (0.067)*
정부소비	0.475 (0.000)***	0.284 (0.001)***	0.426 (0.000)***	0.201 (0.016)**	0.374 (0.000)***	0.201 (0.017)**	0.453 (0.000)***	0.243 (0.003)***
물가상승률	-0.207 (0.011)**	-0.209 (0.017)**	-0.187 (0.019)**	-0.181 (0.037)**	-0.119 (0.134)	-0.120 (0.166)	-0.104 (0.185)	-0.103 (0.228)
노인부양비율	-0.538 (0.000)***	-0.385 (0.011)**	-0.458 (0.002)***	-0.280 (0.061)*	-0.611 (0.000)***	-0.429 (0.003)***	-0.565 (0.000)***	-0.404 (0.005)***
서비스업 발전	0.447 (0.000)***	0.301 (0.000)***	0.329 (0.000)***	0.167 (0.019)**	0.506 (0.000)***	0.399 (0.000)***	0.318 (0.000)***	0.202 (0.003)***
농업 투자	0.424 (0.021)**	0.246 (0.192)						
제조업 투자			-0.173 (0.000)***	-0.177 (0.000)***				
부동산 투자					-0.240 (0.000)***	-0.211 (0.000)***		
서비스업 투자							0.257 (0.000)***	0.238 (0.000)***
상수항	21.462 (0.000)***	27.210 (0.000)***	31.988 (0.000)***	38.045 (0.000)***	30.107 (0.000)***	32.161 (0.000)***	20.481 (0.000)***	25.578 (0.000)***
R <sup>2</sup>	0.295	0.289	0.329	0.308	0.359	0.351	0.376	0.362
Obs.	310	310	310	310	310	310	310	310
Hausman test	0.000		0.116		0.000		0.000	

주: 1) ( ) 안의 숫자는 t값임.

2) Hausman test값은 p값임.

3) FE 모델과 RE 모델에 대한 R<sup>2</sup>값은 within 값임.

4)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의미함.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9. 25)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계산.

표 5-14.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투자종류(연해지역)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FE	RE	FE	RE	FE	RE	FE	RE
경제성장률	-0,201 (0,044)**	-0,229 (0,059)*	-0,312 (0,004)***	-0,332 (0,009)***	-0,344 (0,001)***	-0,343 (0,021)**	-0,328 (0,003)***	-0,340 (0,008)***
가계소득	-0,119 (0,040)**	-0,129 (0,046)**	-0,170 (0,010)***	-0,116 (0,085)*	-0,164 (0,009)***	-0,053 (0,460)	-0,151 (0,019)**	-0,120 (0,075)*
정부소비	0,280 (0,040)**	-0,238 (0,153)	0,381 (0,011)**	-0,134 (0,418)	0,307 (0,039)**	-0,522 (0,003)***	0,400 (0,008)***	-0,113 (0,495)
물가상승률	-0,143 (0,091)*	-0,132 (0,267)	-0,161 (0,087)*	-0,135 (0,283)	-0,115 (0,216)	-0,137 (0,387)	-0,143 (0,133)	-0,119 (0,346)
노인부양비율	-0,314 (0,008)***	-0,366 (0,015)**	-0,322 (0,014)**	-0,349 (0,029)**	-0,396 (0,003)***	-0,425 (0,019)**	-0,335 (0,013)**	-0,418 (0,008)***
서비스업 발전	0,041 (0,663)	0,205 (0,002)***	-0,013 (0,903)	0,066 (0,373)	0,043 (0,689)	0,191 (0,029)**	-0,066 (0,533)	0,105 (0,097)*
농업 투자	0,987 (0,000)***	0,786 (0,003)***						
제조업 투자			0,050 (0,339)	-0,074 (0,146)				
부동산 투자					-0,109 (0,015)**	0,037 (0,584)		
서비스업 투자							0,051 (0,378)	0,097 (0,130)
상수항	37,172 (0,000)***	38,502 (0,000)***	42,445 (0,000)***	47,575 (0,000)***	46,630 (0,000)***	42,120 (0,000)***	43,979 (0,000)***	41,497 (0,000)***
R <sup>2</sup>	0,414	0,293	0,278	0,142	0,316	0,053	0,277	0,169
Obs.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Hausman test	0,000		0,000		0,000		0,000	

주: 1) ( ) 안의 숫치는 t값임.  
 2) Hausman test값은 p값임.  
 3) FE 모델과 RE 모델에 대한 R<sup>2</sup>값은 within 값임.  
 4)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의미함.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9. 25)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계산.

표 5-15.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투자종류(내륙지역)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FE	RE	FE	RE	FE	RE	FE	RE
경제성장률	0,057 (0,652)	0,049 (0,735)	-0,029 (0,806)	0,005 (0,970)	-0,051 (0,675)	0,0004 (0,998)	-0,011 (0,924)	0,017 (0,898)
가계소득	-0,153 (0,025)**	-0,091 (0,227)	-0,134 (0,036)**	-0,087 (0,226)	-0,138 (0,034)**	-0,084 (0,253)	-0,119 (0,057)*	-0,083 (0,242)
정부소비	0,496 (0,000)***	0,119 (0,259)	0,420 (0,000)***	0,055 (0,592)	0,403 (0,000)***	0,078 (0,463)	0,462 (0,000)***	0,114 (0,257)
물가상승률	-0,177 (0,109)	-0,196 (0,127)	-0,121 (0,245)	-0,123 (0,314)	-0,088 (0,411)	-0,098 (0,440)	-0,041 (0,692)	-0,055 (0,653)
노인부양비율	-1,074 (0,000)***	-0,202 (0,440)	-0,904 (0,000)***	-0,076 (0,761)	-0,888 (0,001)***	-0,028 (0,914)	-0,875 (0,000)***	-0,137 (0,584)
서비스업 발전	0,691 (0,000)***	0,542 (0,000)***	0,557 (0,000)***	0,421 (0,000)***	0,693 (0,000)***	0,575 (0,000)***	0,526 (0,000)***	0,404 (0,001)***
농업 투자	0,180 (0,453)	-0,333 (0,203)						
제조업 투자			-0,242 (0,000)***	-0,227 (0,000)***				
부동산 투자					-0,266 (0,000)***	-0,211 (0,005)***		
서비스업 투자							0,286 (0,000)***	0,254 (0,000)***
상수항	20,610 (0,002)***	21,649 (0,001)***	31,879 (0,000)***	30,381 (0,000)***	26,447 (0,000)***	21,961 (0,001)***	15,364 (0,010)***	16,143 (0,010)***
R <sup>2</sup>	0,372	0,277	0,449	0,371	0,427	0,355	0,470	0,408
Obs.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Hausman test	0,000		0,000		0,000		0,000	

주: 1) ( ) 안의 숫치는 t값임.

2) Hausman test값은 p값임.

3) FE 모델과 RE 모델에 대한 R<sup>2</sup>값은 within 값임.

4)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의미함.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9. 25)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계산.

표 5-16.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투자종류(금융위기 이전)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FE	RE	FE	RE	FE	RE	FE	RE
경제성장률	-0.539 (0.017)**	-0.725 (0.001)***	-0.574 (0.009)***	-0.723 (0.001)***	-0.509 (0.020)**	-0.738 (0.001)***	-0.553 (0.010)***	-0.696 (0.002)***
가계소득	0.126 (0.172)	0.284 (0.002)***	0.153 (0.093)*	0.288 (0.001)***	0.078 (0.411)	0.223 (0.015)**	0.118 (0.187)	0.241 (0.006)***
정부소비	0.265 (0.023)**	0.083 (0.445)	0.255 (0.024)**	0.017 (0.876)	0.196 (0.104)	-0.004 (0.970)	0.210 (0.067)*	0.007 (0.953)
물가상승률	-0.230 (0.108)	-0.129 (0.414)	-0.177 (0.215)	-0.074 (0.645)	-0.180 (0.211)	-0.048 (0.765)	-0.153 (0.287)	-0.050 (0.750)
노인부양비율	-0.182 (0.513)	-0.054 (0.842)	-0.076 (0.783)	0.141 (0.587)	-0.204 (0.457)	0.111 (0.672)	-0.076 (0.782)	0.109 (0.673)
서비스업 발전	0.823 (0.000)***	0.229 (0.044)**	0.768 (0.000)***	0.139 (0.226)	0.829 (0.000)***	0.365 (0.003)***	0.741 (0.000)***	0.202 (0.073)*
농업투자	0.028 (0.945)	-0.275 (0.444)						
제조업 투자			-0.145 (0.059)*	-0.160 (0.027)**				
부동산 투자					-0.167 (0.119)	-0.188 (0.051)*		
서비스업 투자							0.159 (0.032)**	0.184 (0.013)**
상수항	3.987 (0.625)	25.595 (0.000)***	7.912 (0.323)	30.659 (0.000)***	10.392 (0.236)	25.268 (0.000)***	1.919 (0.804)	20.045 (0.003)***
R <sup>2</sup>	0.425	0.298	0.449	0.299	0.442	0.339	0.455	0.350
Obs.	124	124	124	124	124	124	124	124
Hausman test	0.000		0.000		0.000		0.000	

주: 1) ( ) 안의 숫치는 t값임.

2) Hausman test값은 p값임.

3) FE 모델과 RE 모델에 대한 R<sup>2</sup>값은 within 값임.

4)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의미함.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9. 25)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계산.

표 5-17.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 투자종류(금융위기 이후)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FE	RE	FE	RE	FE	RE	FE	RE
경제성장률	-0.033 (0.617)	-0.042 (0.522)	-0.085 (0.207)	-0.088 (0.204)	-0.076 (0.255)	-0.075 (0.263)	-0.056 (0.411)	-0.053 (0.438)
가계소득	0.161 (0.000)***	0.182 (0.000)***	0.170 (0.000)***	0.192 (0.000)***	0.155 (0.001)***	0.184 (0.000)***	0.170 (0.000)***	0.196 (0.000)***
정부소비	-0.010 (0.926)	-0.161 (0.089)*	0.044 (0.680)	-0.142 (0.126)	0.022 (0.833)	-0.129 (0.168)	0.021 (0.847)	-0.133 (0.155)
물가상승률	0.010 (0.842)	-0.003 (0.954)	0.013 (0.791)	-0.007 (0.883)	0.015 (0.759)	-0.006 (0.911)	0.003 (0.955)	-0.023 (0.661)
노인부양비율	-0.148 (0.139)	-0.088 (0.374)	-0.151 (0.134)	-0.080 (0.433)	-0.204 (0.057)*	-0.117 (0.268)	-0.154 (0.153)	-0.068 (0.518)
서비스업 발전	0.418 (0.000)***	0.332 (0.000)***	0.372 (0.000)***	0.272 (0.000)***	0.435 (0.000)***	0.324 (0.000)***	0.400 (0.000)***	0.302 (0.000)***
농업 투자	0.320 (0.043)**	0.320 (0.043)**						
제조업 투자			-0.075 (0.096)*	-0.051 (0.219)				
부동산 투자					-0.052 (0.128)	-0.026 (0.437)		
서비스업 투자							0.005 (0.901)	-0.027 (0.496)
상수항	10,201 (0.011)**	14,466 (0.000)***	14,644 (0.001)***	19,055 (0.000)***	12,839 (0.002)***	16,659 (0.000)***	11,306 (0.006)***	16,436 (0.000)***
R <sup>2</sup>	0.324	0.305	0.318	0.289	0.316	0.294	0.305	0.283
Obs.	186	186	186	186	186	186	186	186
Hausman test	0.000		0.000		0.001		0.788	

주: 1) ( ) 안의 숫자는 t값임.

2) Hausman test값은 p값임.

3) FE 모델과 RE 모델에 대한 R<sup>2</sup>값은 within 값임.

4)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의미함.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9. 25)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계산.

## 4. 소결

이상의 실증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중국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수준, 가계소득, 투자, 노인부양비율, 서비스업 발전수준, 금융발전수준, 도시화, 교육지출, 최저임금인상 등이다.

우선 기본요인 중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은 소비에 유의미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들어 중국의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이 전반적으로는 투자율이 상승하고 소비율이 하락하는 단계에 처해 있음을 설명한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의 유의도가 사라져 금융위기 이후 소비율이 하락하는 단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계소득과 서비스업 발전수준은 소비와 유의미한 플러스 관계를, 투자와 노인부양비율은 유의미한 마이너스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낮은 서비스업 발전수준, 높은 투자율, 그리고 높은 노인부양비율이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해왔음을 설명해준다.

중국 요인 중 금융발전과 도시화는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낮은 금융발전수준과 낮은 도시화율 역시 중국의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임을 확인시켜준다. 소득격차와 주택가격은 예상과 달리 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소득불균형의 경우 중국 가계소비의 70% 이상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균형 정도를 도농간 소득격차로 측정했기에 도시지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며, 주택의 경우 투자나 투기성이 강한 중국에서 자산으로서의 부의 효과를 가져와 나타난 결과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5-18. 중국의 소비 결정요인

	변수명	부호		해석과 평가
		예상	결과	
기본 요인	경제성장률	?	-	- 중국의 경제성장수준은 전반적으로는 투자율이 상승하고 소비율이 하락하는 단계 - 단 금융위기 이후 소비율이 하락하는 단계에서 벗어나기 시작
	1인당 GDP	?	-	- 현재의 경제발전수준은 투자율이 상승하고 소비율이 하락하는 단계
	가계소득	+	+	- 그동안의 낮은 노동소득분배율이 가계소비확대 제약
	투자	-	-	- 높은 투자율이 가계소비확대 제약
	농업	+	+	- 농업에 대한 투자는 가계소득증대로 이어져 가계소비촉진
	제조업	-	-	-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기업수익증대로 이어져 가계소비확대 제약
	부동산	-	-	-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기업수익증대로 이어져 가계소비확대 제약
	서비스업	+	+	-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가계소득증대로 이어져 가계소비 촉진
	노인부양비율	-	-	- 높은 노인부양비율이 가계소비확대 제약
	서비스업발전	+	+	- 낮은 서비스업 발전수준이 가계소비확대 제약
중국 요인	금융발전	+	+	- 낮은 금융발전수준이 가계소비확대 제약
	도시화	+	+	- 낮은 도시화율수준이 가계소비확대 제약
	소득격차	-	+	- 소득격차의 확대가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반대의 결과가 나타남 - 가계소비의 70% 이상이 도시에 집중되어, 도농간 소득격차로 측정된 소득격차가 도시지역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음.
	주택가격	-	+	- 높은 주택가격이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반대의 결과가 나타남. - 주택의 부의 효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며, 주택가격 절대치가 아닌 상승률로 측정된 영향도 있을 수 있음.
	교육지출	+	+(금융위기 이후)	-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교육지출 비중이 증가하며, 가계소비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
	의료지출	+	-(유의하지 않음)	- 각종 법규와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정부의 재정투입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로 재정지출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어 가계소비증대로 이어지지 못함.
정부 정책 요인	사회보장지출	+	-(유의하지 않음)	- 각종 법규와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정부의 재정투입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로 재정지출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어 가계소비증대로 이어지지 못함.
	주택보장지출	+	-(유의하지 않음)	- 중앙정부의 보장성 주택 보급의지가 그리 강하지 않으며, 지방정부가 부동산 경기침체를 우려해 주택보장지출 확대에 소극적
	최저임금인상	+	+(연해지역)	- 연해지역에서 최저임금 기준 인상이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가계소비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

자료: 본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정부정책요인 중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며 가계소비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 사회보장, 주택보장 등에 대한 지출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와 사회보장의 경우 현재 각종 법규 및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정부의 재정투입도 소폭 늘어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로 정부의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어 가계소비증대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기준의 인상은 연해지역에서 가계소비증대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정책이 연해지역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투자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제조업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는 가계보다는 기업 수익을 증가시켜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한 반면, 농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가계소득과 가계소비 확대에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제6장 평가와 시사점

1. 평가 및 전망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 1. 평가 및 전망

## 가.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방식 전환에 대한 평가와 전망

중국은 2000년대 이후 WTO 가입에 따른 수출증가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공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2010년까지 투자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가계 소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Chenery and Syrquin(1975) 등이 지적하였듯이 사실 개도국의 공업화 과정에서 투자율의 상승과 소비율의 하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중국의 고속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이 같은 현상이 일반의 예상과 배치되는 중국 특유의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2장에서 살펴보았듯 기타 선진국이나 개도국과 비교하여,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의 고속성장기에 비해서도 중국은 지나치게 소비율이 낮고 투자율은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의 투자가 인프라와 더불어 주로 제조업과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철강, 시멘트 등 업종의 생산과잉과 부동산 경기 과열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 부채의 유동성 리스크 증대, 상업은행의 부실화, 그림자 금융 등 중국의 거시안정성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향후 중국이 투자에서 소비로의 성장전략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방정부의 경우 여전히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나 고용창출 등을 위해 생산과잉 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가 2015년 10월 새롭게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 심화 방안도 지방정부의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지방정부들이 재원의 상당 부분을 토지사용권 매각수입에 의존하고 있어,<sup>87)</sup> 지방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유인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속적인 부동산 투자는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중국정부는 2014년 상하이 를 비롯한 10개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허용한 데 이어, 2015년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차환규모를 3조 2,000억 위안으로 확정하는 등 지방정부의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채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혁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해보인다. 즉 중앙의 일부 조세수입권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일부 재정지출은 중앙으로 이전하는 조정이 필요해보인다. 그 다음으로 도시화의 측면에서 보면 도시화 추진과정에서 인프라나 주택 등에 대한 투자수요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전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소비 주도의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성장률의 하락을 용인하면서도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성장동력의 전환을 위해 중국은 향후 투자에서 제조업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투자주체에서도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할

---

87) 1994년에 분세제 개혁을 시행한 이후 상당 부분의 지방 재정수입이 중앙 재정으로 전이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줄어든 반면, 재정지출 부담은 증가하게 되었다. 2013년 기준 전체 재정수입에서 중앙과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47:53이나, 재정지출에서 중앙과 지방이 부담하는 비중은 15:85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매우 크다(중국국가 통계국 DB(검색일: 2015. 11. 1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지방정부는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토지사용권 매각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바,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1~4월 기간 국유토지사용권 매각수입이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달하였으며, 2013년 이 비중은 무려 6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卖地时代结束: 土地出让金一季度仅占地方财政收入32%」(2015. 5. 25), <http://finance.sina.com.cn/china/20150525/005922253699.shtml>(검색일: 2015. 11. 22).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5장의 투자종류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농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소비를 촉진시키는 반면, 제조업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중국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투자구조의 조정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향후 신형 도시화나 일대일로와 같은 전략적 사업의 추진에 의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9월에만 중국 발개위는 철도와 도로 관련 8,800억 위안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승인하였는데,<sup>88)</sup> 현재 부동산과 제조업 투자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만 유일하게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상승하고 있다. 향후 중국은 고속철이나 지하철과 같은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장비제조업, 첨단기술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반면 생산과잉, 에너지 고소비 및 환경오염 제조업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투자구조를 조정함과 동시에 중국정부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소비확대를 제약해온 여러 가지 요인을 해소하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당국의 정책기조로 중국은 당장 몇 년 내에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비 주도의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화장품이나 영화와 같은 일부 품목,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같은 1선 대도시와 청두(成都), 시안(西安), 우한(武漢) 등의 일부 신흥 거점도시, 빠링허우(80後)와 주링허우(90後)<sup>89)</sup> 등의 일부 계층에서는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소비시장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전망된다. 또

88) 「发改委稳增长: 9月批复基建投资超8000亿」(2015. 9. 29), [http://finance.ifeng.com/a/20150929/14000290\\_0.shtml](http://finance.ifeng.com/a/20150929/14000290_0.shtml)(검색일: 2015. 11. 22).

89)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킨다.

한 2011년부터 미약하게나마 소비율이 상승하고 투자율이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현상이다. 이밖에 소비구조가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고, 온라인 구매가 급증하는 변화가 중국의 소비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다.

## 나.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중국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정책들은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농민공의 시민화, 사회보장 확대, 소비자금융 확대),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전략(임금인상, 서비스업 진흥, 위안화 절상, 직접보조금 지급 등), 소비구조 변화 전략(산아제한 완화, 주거비용 비중 축소)의 세 가지 범주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과 관련하여 농민공의 시민화는 리커창 총리가 내수확대의 최대 동력으로 꼽고 있는 ‘신형 도시화’의 핵심 내용으로 농민공에게 도시민과 동등한 기본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현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한 호적제도 개혁과 토지제도 개혁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농민공의 시민화에는 막대한 공공비용이 수반되는바, 이에 농민공 진입의 수요가 가장 큰 초대형 도시에 대한 호적 개방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토지제도 개혁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수입원인 토지사용권 매각수입 감소로 이어져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내수확대를 위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호적을 개방하고, 농민공의 시민화 비용을 중앙, 지방, 기업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며,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동원해 농민공의 시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 확대정책 관련 사회보험은 각종 법규와 제도가 정비되고 정부의 재정투입이 늘어나면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12차 5개년 계획의 지표들도 거의 모두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5장의 실증분석결과에서 사회보장 확대정책(정부 재정지출에서 사회보장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이 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사회보장에 필요한 기금은 주로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사회보장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구축되었지만, 양로보험제도의 경우 양로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않고 있어 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많으며, 일부 성의 경우 양로보험 납부율이 매우 높아 신규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과 같은 문제점<sup>90)</sup>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당국은 사회보험제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양로나 의료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실업, 공상, 생육 보험을 확대할 계획에 있는 등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대책을 가지고 있어 향후 사회보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소비자금융 확대는 중국의 민간금융 자유화와 맞물려 천천히 진행 중이다. 소비자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소비자금융회사 설립, 신용카드 시장 확대를 비롯해 P2P 금융과 같은 새로운 대출경로를 마련하며 소비자금융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금융 확대방침과 더불어 최근 해당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 등으로 유입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향후 보다 신중한 감독과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 최저임금 기준을 연평균 13%씩 올린다는 목표는 기본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실증분

---

90) 성균중국연구소(2014), 『차이나 핸드북』, pp. 263~264.

석결과에서도 연해지역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인상률이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임금인상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경기침체로 최저임금 기준 증가폭이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 최저임금 기준을 비롯하여 평균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이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13·5규획에서 2020년까지 1인당 주민소득을 2010년의 2배로 올리겠다는 목표와 함께 임금결정 메커니즘 및 최저임금인상 메커니즘 개선, 임금단체협상제도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sup>91)</sup>

서비스업 비중은 2014년 48.1%에 달해 2015년까지 서비스업 비중을 47%로 늘린다는 12·5계획의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제조업의 불황이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용하기는 했지만, 중국정부는 산업고도화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업 비중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서비스업 육성과 개방이라는 양면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상하이로 비롯한 4대 자유무역시범구가 서비스업 개방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위안화 절상은 2005년 이후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나 2015년 8월 기준 환율조정으로 갑작스러운 절하가 나타난 바 있다. 실제로 위안화의 절상은 매우 완만하게 이뤄지고 있고 2012년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 후에는 절상과 절하가 반복되는 추세였다. 중국의 무역 흑자가 증가하지 않고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위안화 절상도 단방향 추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시진핑 지도부가 주도하는 일대일로, ‘중국 제조 2025’ 등 다양한 공급 위주의 정책을 볼 때 위안화 가치를 절상 일변도로

---

91)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2015. 11. 4), [http://news.xinhuanet.com/ziliao/2015-11/04/c\\_128392424\\_2.htm](http://news.xinhuanet.com/ziliao/2015-11/04/c_128392424_2.htm)(검색일: 2015. 11. 22).

관리하지 않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직접보조금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진한 가전하향, 이구환신, 자동차하향 등의 단기적인 소비촉진정책으로, 현재 이러한 정책은 모두 종료되었다. 직접보조금정책으로 소비가 단기간에 촉진되는 성과를 보았지만, 종료 직후 소비가 감소하는 부작용도 약하게 나타난 바 있다. 최근 들어서는 신에너지 자동차와 같이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신흥산업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민간에 구입보조금을 지급해 순수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sup>92)</sup>

산아제한 완화도 2013년 3중전회와 2015년 5중전회를 통해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주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산아제한정책이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 1990년대 들어서 부부 두 사람 모두가 독생자일 경우 두 자녀 출산을 허용케 했으나 저출산현상이 지속되었다. 따라서 현재 아무런 제약 없이 둘째 아이 출산이 가능해졌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주거비용 축소를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은 중·저소득층의 실수요를 위한 보장성 주택 공급과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의 양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보장성 주택의 경우 지도부의 보급의지가 그리 강해보이지 않고, 특히 지방정부들이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예상에 못 미치는 진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14년 들어 중국

---

92) 财政部·科技部·工业和信息化部·发展改革委(2015. 4. 22), 「关于2016-2020年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支持政策的通知」, [http://jj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ui/201504/t20150429\\_1224515.html](http://jj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ui/201504/t20150429_1224515.html)(검색일: 2015. 11. 22).

표 6-1. 중국의 소비확대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범주	정책	내용	평가	전망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	농민공의 시민화	- 농민공에게 도시민과 동등한 기본 공공서비스 부여	- 현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진행 중이며, 이를 위 한 호적제도 개혁과 토지제도 개혁도 추진 중	- 2020년까지 호적인구 기준 도시화율이 55%로 상승될 전망 - 농민공의 시민화에 막대한 공 공비용이 수반되어 쉽지 않음.
	사회보장 확대	- 사회보험을 비롯해 주 거, 교육, 보건 등 다양 한 사회안전망 확대	- 각종 법규와 제도가 정비되고 정부의 재정투입이 증가하며 12·5계획 목표 조기 달성	- 정부의 문제인식이 분명하고 대책을 갖고 있어 사회보장 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소비자 금융 확대	- 소비자금융회사 설립, 신 용카드시장 확대, P2P 금융발전 등 소비자 금 융환경 개선	- 민간금융 자유화와 맞물려 천 천히 진행 중	- 소비자금융의 자산시장 유입 을 우려하여 신중한 감독과 규제가 이뤄지면서 발전할 전망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전략	임금 인상	- 최저임금 기준을 연평 균 13%씩 인상	- 최근 들어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목표 달 성	- 임금 결정 및 인상 메커니즘 개선으로 지속적으로 인상될 전망
	서비스업 진흥	- 산업고도화와 국제경 쟁력 확보를 위해 서 비스업 진흥	- 2014년 서비스업 비중이 48.1%로 2015년 목표인 47%를 조기 달성	- 서비스업 육성과 개방 동시 진행 - 자유무역시범구를 중심으로 서비스시장 개방을 추진할 전망
	위안화 절상	- 2005년 이후 꾸준히 절상	- 완만하게 진전	- 무역흑자 둔화, 성장률 둔화 등으로 위안화 절상의 단방 향 추세를 기대하기는 어려 울 전망
소비구조 변화 전략	산이제한 완화	- '1가구 1자녀' 정책을 완화하여 2자녀 출산 허용	- 현재 가전제품 관련 보조금지 급정책은 종료되었으며 일 정한 성과를 거둠. - 종료 직후 소비가 감소하는 부작용도 약간 나타남.	- 현재의 저출산현상이 산이제한 정책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어 실질적 출산증대효과 는 미지수
	주거비중 축소	- 중·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 주택 공급 - 주택 투기수요 억제	- 지도부의 보장성 주택 보급 의지가 강하지 않고 지방정 부들이 부동산 경기 위축을 우려해 더디게 진전	-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감독 과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을 통한 부동산 가격조정을 도 모할 전망

자료: 본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의 부동산시장이 상승기 이후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중국정부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정부는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할 전망이며, 시장을 통한 부동산 가격조정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다. 중국의 소비확대 제약요인에 대한 평가와 전망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소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경제발전수준, 가계소득, 투자, 정부소비, 인구구조, 서비스업 발전수준 등이다. 이밖에 중국의 경우 여타 국가에 비해 심각한 소득불균형,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낮은 도시화율, 낮은 금융발전수준, 높은 주택가격 등이 소비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상술한 대부분의 요인들이 중국의 소비확대를 제약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가계소득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동안 중국의 낮은 소비율은 낮은 노동소득 분배율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소비율이 하락한 2000~10년 기간 노동소득분배율은 15.3%에서 11.8%로 하락하였다.<sup>93)</sup> 즉 중국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안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노동력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같은 풍부한 노동력의 공급이 저임금을 유지시켜 GDP에서 차지하는 노동소득의 비중을 감소시켰던 것이다. 결국 경제성장의 이득이 대부분 기업에 돌아가 가계의 소득과 소비는 위축되었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하였듯 그동안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도 소비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었다. 특히 중국의 투자가 인프라와 더불어

---

93) CEIC DB(검색일: 2015. 9. 25).

제조업과 부동산에 집중되었는데 이 역시 가계소득보다는 기업수익증대로 이어져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하였다. 5장의 실증분석결과에서도 전체 투자와 더불어 제조업 투자와 부동산 투자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술한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노인부양비율로 살펴본 인구구조는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동안 높은 노인부양비율로 인해 가계소비확대가 제약되어왔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그동안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유년인구와 노인인구에 대한 총부양 부담은 감소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인구보너스효과를 누려왔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유년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은 크게 감소한 반면, 노령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80년대부터 시행된 ‘1가구 1자녀’ 정책의 시행으로 유년인구는 절대치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가 감소한 반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령인구와 노인부양비율 모두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중국에서 노인부양비율의 증가는 미래를 대비한 저축의 증가로 이어져 가계소비를 위축시키게 된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저임금의 단순노동력 부족현상이 불거지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여부와 관련된 논의가 대두하고 있는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인부양비율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와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중국정부가 사회보장 확대와 더불어 2015년 들어 30여 년간 시행하여 온 ‘1가구 1자녀’의 산아제한정책을 완화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이다.

서비스업 발전수준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동안의 낮은 서비스업 발전수준이 가계소비를 제약

해왔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그동안 제조업, 특히 중공업 중심의 산업발전 전략을 장기적으로 채택해온 결과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2012년 이전까지 줄곧 제조업 부가가치가 서비스업 부가가치를 능가하였으며,<sup>94)</sup> 제조업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2012년 이전까지는 경공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중공업을 앞선 적이 없었다.<sup>95)</sup> 최근 들어 서비스업이 빠르게 증가하며 2012년부터 제조업 부가가치를 능가하고 있고 취업에서도 2011년부터 1차 산업을 제치고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나,<sup>96)</sup> 선진국과 비교하면 중국의 서비스업 발전수준은 여전히 낮다.<sup>97)</sup> 그동안 제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의 낮은 발전수준은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가계소비를 제약해왔다. 중국정부가 12차 5개년 계획기간부터 서비스업의 발전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산업고도화의 측면도 있지만 이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소비금융의 발전은 소비확대와 직결되는데 중국은 그동안 대형 국유은행의 은행산업 독점과 국유기업 중심의 대출로 인한 가계대출의 어려움, 개인 신용정보 구축과 공개의 부족, 소비금융의식 결여, 신용카드시장의 더딘 발전 등의 원인으로 소비자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해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5장의 실증분석결과에서 1인당 소액대출로 측정된 금융발전수준이 가계소비와 유의미한 플러스 관계를 나타낸 것이 이를 설명해준다. 최근 들어 중국정부가 소비자금융시장 확대를 위해 소비

94) CEIC DB(검색일: 2015. 5. 13).

95) 중국국가통계국 DB(검색일: 2015. 11. 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96) 2013년 기준 1차, 2차, 3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43:48이며 고용 비중은 각각 31:30:39이다. CEIC DB(검색일: 2015. 5. 13).

97) 2012년을 기준으로 3차 산업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70% 좌우이고 한국도 약 60% 수준이나 중국은 45%에 불과하여 아직 낮은 수준이다. WDI DB(검색일: 2015. 5. 13).

금융회사 설립, 신용카드시장 확대를 비롯해 P2P 금융과 같은 새로운 대출 경로를 마련하며 소비자금융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 마련과 소비자금융 인프라 구축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화 추진은 주민의 소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금융, 물류, 소매, 교육, 의료, 오락, 주택, 생활용품 등 산업의 빠른 발전을 의미한다. 5장의 실증분석결과에서 도시화는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의 더딘 도시화 진전이 가계소비를 제약해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도시화 추진이 소비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도시 공간 확장과 농촌지역 잉여노동력의 도시 이전이 아닌, 농민공의 도시민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의료, 교육, 취업, 사회보장 등 도시민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농민공에게 부여되지 못한다면 도시화율 수준이 높다 할지라도 농민공의 실질구매력이 약화되어 소비확대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커창 총리가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형 도시화’를 강조하며 이를 내수확대의 최대 동력으로 꼽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이다. 다만 농민공의 도시민화 추진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주택가격은 가계에 재정적 부담을 주며, 이는 결과적으로 주택구입을 위한 저축유인을 제고함으로써 가계의 소비수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5장의 실증분석결과에서 주택가격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으로서의 주택의 부의 효과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서 주택은 실수요도 많지만 투기성이 강한데, 대표적인 사례로 어얼뒤쓰(鄂尔多斯)를 꼽을 수 있다. 이 도시는 석탄과 희토류 자원으로 축적된 부를 대규모 주택 건설에 투자하였다. 주식시장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투자

처가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낮은 인구유입으로 유령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중국의 심각한 소득불균형 역시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예상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중국은 남미국가에 이어 세계에서 소득불균형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인데,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의 소득이 저소득층에 비해 과도하게 집중되는 소득불균형은 사회 전체적인 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예상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중국 가계소비의 70% 정도가 도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소득불균형 정도를 도농간 소득격차로 측정했기에 도시지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전체 지니계수나 도시지역 내의 소득격차를 반영하는 변수를 사용했다더라면 유의미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러한 변수의 지역별 접근에는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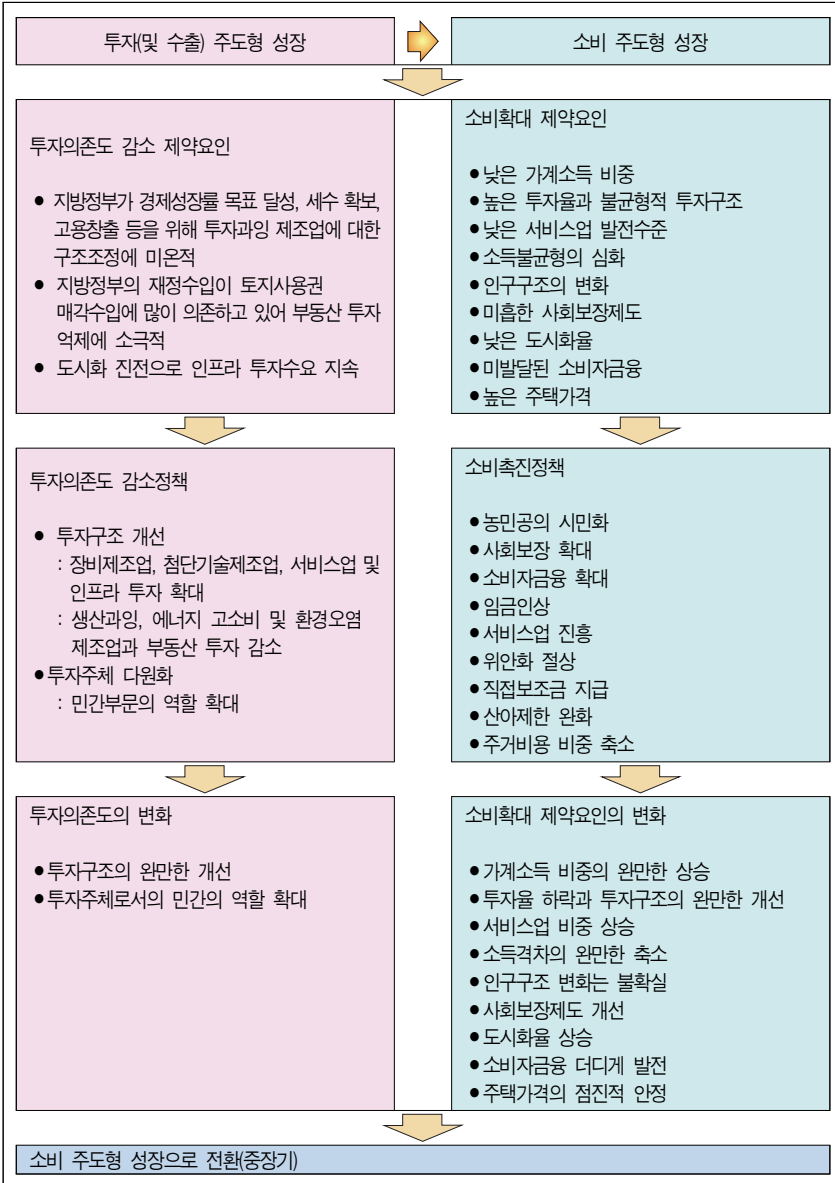
이밖에 정부소비도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소비 역시 가계소비를 제약해왔음을 알 수 있다. 정부소비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양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전체 소비에서 정부소비의 몫이 많으면 그만큼 가계소비가 줄어들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부소비가 교육, 의료, 사회보장, 취업 등에 적극 사용될 경우 가계소비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정부소비가 가계소비의 제약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보장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미흡한 사회보장제도와 교육, 의료, 취업 등에 대한 보장으로 가계가 미래에 대비한 저축을 늘림으

표 6-2. 중국의 소비확대 제약요인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제약 요인	현황	평가	전망
낮은 가계소득 비중	- 빠른 경제성장률에 비해 임금은 완만하게 증가하며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 또는 정체	- 가계소득증대를 제약함으로써 소비확대 제약	- 소득분배제도 개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기대되거나 시일이 걸릴 전망
높은 투자율	- 기타 국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투자율	- 투자 의존적인 성장전략으로 소비확대 제약	-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기조로 투자율이 하락할 전망 - 2011년 이후 소폭 하락 추세
불균형적인 투자구조	- 제조업과 부동산, 인프라 중심의 투자	- 가계소득보다는 기업수익을 증대시켜 소비확대 제약	- 투자구조 개선으로 완화될 전망 -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
낮은 서비스업 발전수준	- 서비스업의 발전이 제조업에 비해 낮았으며, 선진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큼.	-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의 더딘 발전으로 가계소득과 소비확대 제약	- 산업고도화정책으로 서비스업의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 - 2012년부터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2차 산업 능가
소득불균형의 심화	- 도농간, 지역간, 계층간 소득 격차가 큼.	-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 소득이 집중되어 사회 전체적인 소비확대 제약	- 소득분배제도 개혁으로 완화될 전망 - 금융위기 이후 도농간 격차와 지니계수 모두 완화 추세
인구구조의 변화	- '1가구 1자녀' 정책의 시행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노인부양비용이 증가	- 미흡한 사회보장제도와 결합되어 저축이 증가하며 소비확대 제약	- 2차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 출산증대효과는 미지수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 교육, 의료, 사회보장, 취업 등에 대한 보장이 미흡	- 미래에 대비한 저축이 증가하여 소비확대 제약	- 사회보장제도 개혁 추진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시일이 걸림.
낮은 도시화율	- 도시화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중국의 공업화 수준에 비해서도 낮음.	- 주민소비와 관련된 산업과 가계소득이 더디게 증가하여 소비확대 제약	- 도시화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나 호구제나 토지제도 개혁의 수반이 필수
미발달된 소비자금융	- 가계대출의 어려움, 개인 신용정보 구축과 공개의 부족, 소비자금융의식 결여, 신용카드 시장의 더딘 발전 등	- 소비자금융이 발달하지 못해 구매력이 낮아져 소비확대 제약	- 소비자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소비자금융이 확대될 전망이나 시일이 걸림.
높은 주택가격	- 소득대비 과도하게 높은 주택가격 - 부동산 투자나 투기가 심함.	-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 증가로 소비확대 제약 - 자산으로서의 부의 효과로 소비촉진효과도 있음.	- 2014년 이후 주택가격이 조정기에 접어들며 하락추세

자료: 본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6-1.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와 전망



자료: 본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로써 소비가 위축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소비를 확대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소비확대를 통한 성장방식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정책 마련만으로는 다양한 소비확대 제약요인을 단기에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따르며,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수반하는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 시행과 제도개혁 추진에 얽혀 있는 계층간 이해관계의 조율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소비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개혁에 대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2012년 이후 7%대의 성장률로 둔화되며 뉴노멀 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개혁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위에서 제시한 소비확대 제약요인이 단기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시사점

### 가. 소비 주도 성장전략 전환에 따른 새로운 대중 전략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특히 12·5규획의 추진과 더불어 투자 및 수출 중심에서 소비 주도로 성장전략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장률의 하락을 용인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중국경제의 뉴노멀 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2014년 11월에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

국의 뉴노멀 시대 진입을 선언하였는데, 이른바 뉴노멀 시대는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경제구조와 성장동력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장속도가 고속에서 중속으로 변화하고, 경제구조가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되며, 성장동력이 요소 투입 및 투자·수출 중심에서 혁신과 소비에 의한 성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sup>98)</sup> 또한 이러한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특징으로 소비패턴의 변화를 가장 우선적인 순위에 두고 있는데 이는 ‘모방형 소비단계에서 개성화·다양화 소비단계로 진입하고, 소비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9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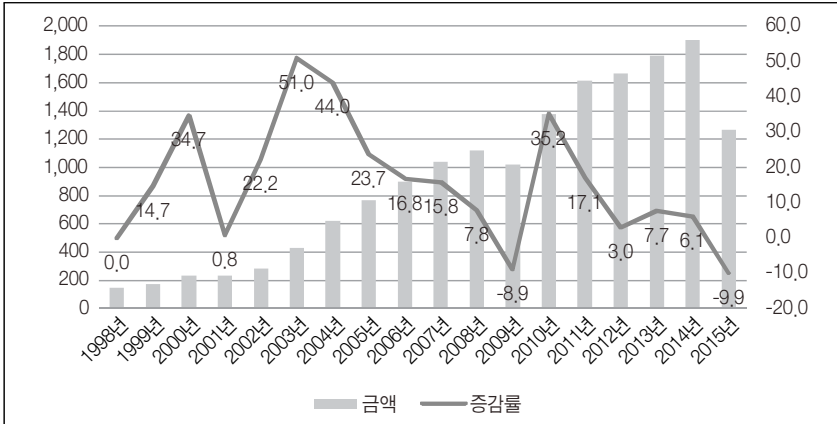
이처럼 중국이 소비 주도의 성장전략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뉴노멀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성장률이 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의 성장률이 7%대로 둔화된 2012년부터 한국의 대중 수출은 한 자릿수 증가율에 머물고 있으며, 2015년 1~9월 기간에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하였다(그림 6-2 참고). 이봉걸(2015)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은 1.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원, 조규림(2012)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한국의 총수출증가율은 1.7%p 하락하고, 경제성장률은 0.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한·중 FTA의 체결로 중국 내수용 중간재와 소비재 등 제품에서의 관세가 철폐되어 중국의 성장률 하락에 따른 한국의 대중 수출감소를 일정 부분 상쇄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8) 「习近平首次系统阐述“新常态”」(2014. 11. 9), [http://news.xinhuanet.com/world/2014-11/09/c\\_1113175964.htm](http://news.xinhuanet.com/world/2014-11/09/c_1113175964.htm)(검색일: 2015. 11. 22).

99) 「中央经济工作会议在京举行」(2014. 12. 11), [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4-12/11/c\\_1113611795.htm](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4-12/11/c_1113611795.htm)(검색일: 2015. 11. 22).

그림 6-2. 한국의 대중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



주: 2015년은 1~9월까지의 수치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 통계, <http://www.kita.net>(검색일: 2015. 11. 2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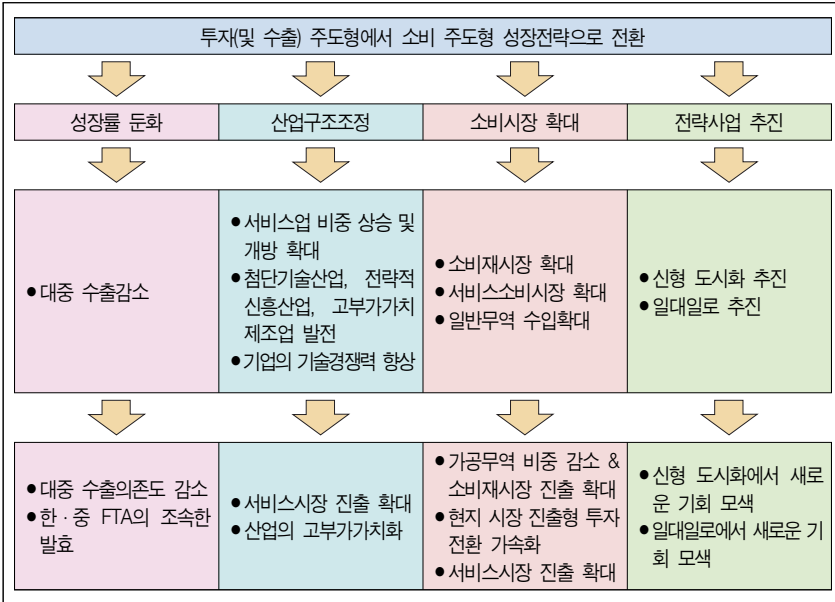
다음으로 중국이 소비 주도의 성장전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산업구조조정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한국의 대중 산업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즉 중국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전략으로 서비스업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향후 서비스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중국의 서비스업은 부가가치나 고용 측면에서 2012년을 전후하여 모두 1차, 2차 산업을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중국정부는 육성과 개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서비스업 진흥정책을 펼치고 있는바, 향후 상하이를 비롯한 4대 자유무역시범구를 선두로 서비스 시장의 지속적인 개방이 기대된다. 또한 제조업 내에서 투자구조 개선과 산업고도화 등을 위해 생산과잉, 에너지 고소비 및 환경오염 제조업의 발전을 제한하고 장비 제조, 첨단기술산업, 고부가가치제조업 및 전략적 신흥산업을 적극 발전시킬 전망이다. 이에 이러한 산업고도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제조업 고도화 과정에서 혁신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중국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중국은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국 제조 2025’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화, 녹색화와 더불어 지식 및 혁신에 의존하는 제조업 발전을 의미한다. 2000년대 들어 중국기업의 기술경쟁력은 꾸준히 향상되어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가전 등 많은 분야에서 이미 한국을 추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분야에서의 추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의 대중 수출부진은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주된 원인이지만, 중국기업의 기술경쟁력이 향상되며 부품·소재 자급률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의 성장동력이 투자와 수출에서 점차 소비로 전환됨에 따라 중국 내수 소비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부응하여 중국 내수 소비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 2011년 이후 중국에서는 투자율이 하락하고 소비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다양한 소비촉진정책으로 소비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소비 주도의 성장전략으로 전환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중국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형 도시화, 일대일로 등의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시진핑 정부는 ‘농민공의 시민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신형 도시화’를 소비확대의 가장 큰 동력으로 꼽고 있는바, 13·5규획 기간 호적인구 기준 도시화율이 55%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과잉산업의 해외이전, 중국경제의 영향력 강화 등을 위해 일대일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사업에 따른 기회요인을 잘 포착해야 한다.

그림 6-3.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에 따른 우리의 대중 전략



자료: 본문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종합적으로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국 경제성장률의 둔화, 산업고도화, 소비시장 확대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 및 투자 전략을 조정함과 동시에 신행 도시화, 일대일로 등의 전략적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새로운 대중 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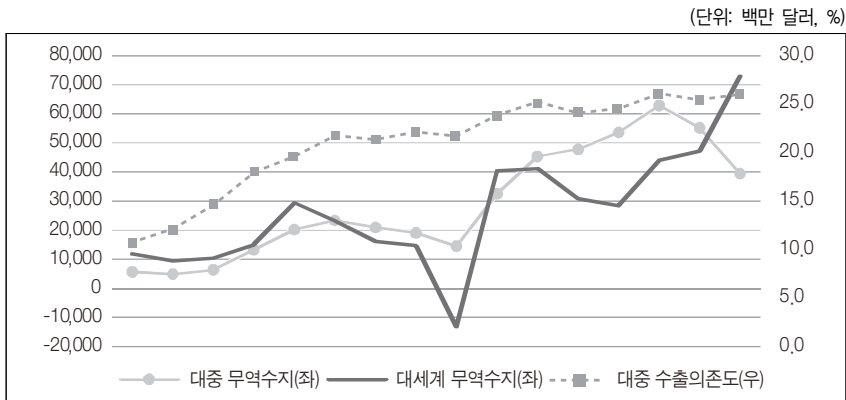
## 나. 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중 전략

앞서 살펴보았듯 중국의 뉴노멀 시대 진입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며 한국의 대중 수출도 둔화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여전히 높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한국의 대중 무역 흑자는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또한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2009년을 제외하면 모두 대중 무역 흑자가 전체 무역 흑자를 상회하였다. 전반적으로 2000년대 들어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꾸준히 증가하여 25%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대중 수출의존도는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중 수출 둔화와 한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지게 되므로 지나치게 높은 대중 수출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높은 대중 수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시급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최저임금 기준이 빠르게 인상되고 인력난이 대두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지위를 점차 상실함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동남아지역으로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수출시장 개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4.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 추이



주: 2015년은 1~9월까지의 데이터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 통계, <http://www.kita.net>(검색일: 2015. 11. 22)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 발전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수 활성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 발전은 부분적으로 제조업을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상생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sup>100)</sup> 중국의 경우에도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생산성 서비스업의 발전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 다.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중 전략

### 1) 서비스시장 진출 확대

중국이 산업고도화, 소비활성화를 비롯한 다양한 목적으로 서비스업 발전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제조업과 연계한 생산성 서비스업과 더불어 소비창출을 위한 생활성 서비스업도 크게 발전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정부가 서비스업 진흥을 위해 육성과 개방이라는 양면전략을 펼치고 있는바, 현재 추진 중인 자유무역시범구를 중심으로 서비스시장 개방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대중 투자는 80%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므로 향후 서비스시장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한·중 FTA의 체결로 DDA 플러스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이 기대되고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개방이 이루어진 점은 중국 서비스업 투자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더욱이 후속협상 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추가 자유화의 근거를 확보한 만큼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을

---

100) 노승길(2014. 11. 17), <http://www.ajunews.com/view/20141114144657908>(검색일: 2015. 11. 22).

표 6-3. 한·중 FTA의 서비스분야 중국 측 양허내용

분야	중국 측 양허내용
법률	- 중국 내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한국 로펌의 중국 로펌과 제휴 허용(상하이 FTZ에 한정)
건축/ 엔지니어링	- 중국 내 한국기업 면허 등급 판정 시 한국 및 여타 국가에서 달성한 실적 인정
유통	- 취급 금지품목 완화(예: 중국 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한국 유통기업 설립 허용)
건설	- 중국 내 한국기업 면허 등급 판정 시 한국 및 여타 국가에서 달성한 실적 인정
환경	- 폐수, 고형 폐기물 처리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의 한국기업 설립 허용
관광	- Out-bound 관광시장 개방
문화	- 엔터테인먼트 분야 한국기업 49% 지분 참여 허용 - 공동제작 영화에 대해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 부여 - 방송용 TV 드라마, 다류멘터리와 애니메이션의 공동제작 장려

자료: 한·중국 FTA 협정문, <http://fta.go.kr/cn/doc/1/>(검색일: 2015. 11. 22)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위한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에서 한·중 FTA 체결로 의미 있는 개방이 이루어진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 대한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환경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폐수, 고형 폐기물 처리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의 한국기업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환경분야의 진출도 유망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시장의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양국 모두 다양한 서비스업 분야에서 협력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협력은 한·중 FTA에서 경제협력분야로 명시한 정부 조달, ICT, 에너지 및 자원, 과학기술, 해운, 관광, 문화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다.

## 2)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투자구조의 개선 및 산업고도화를 위해 서비

스업 진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내에서는 생산과잉, 에너지 고소비 및 환경오염 제조업의 발전을 제한하고 장비 제조, 첨단기술산업,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전략적 신흥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중국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조선 등 생산과잉업종에 대한 강도 높은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 중에 있는바, 중국의 산업구조 재편으로 향후 중국기업들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이미 상술한 업종에서 중국기업들이 한국기업을 바짝 추격하면서 한국의 주력 제조업 전체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전경련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6대 주요 산업 제조 수출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상황이다.<sup>10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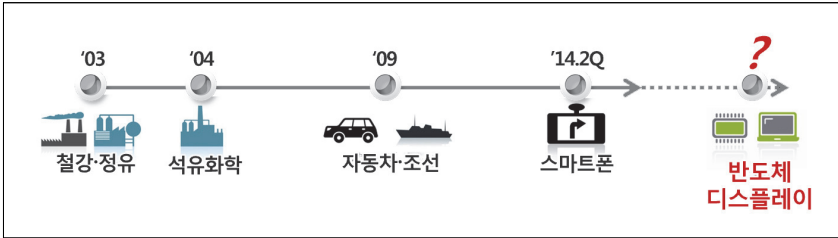
향후 중국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중국 내수시장 및 글로벌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기업들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여 특화된 제품으로 경쟁하거나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을 실현하여 경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중국기업들과 협력의 여지도 없지 않은바, 이를 잘 파악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중국이 전략적 신흥산업을 적극 육성함에 따라 이러한 산업에 대한 진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중국 제조 2025’의 추진으로 향후 10년간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자동차, 신소재, 바이오제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이 집중육성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러한 신산업은 리스크 부담 등의 원인으로 민영기업과 외자기업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커 이들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

101) 김상윤, 이은창(2015), p. 4.

그림 6-5.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추월시기



자료: 김상윤, 이은창(2015), p. 4.

## 라. 소비시장 확대에 따른 대중 전략

### 1) 가공무역 비중 감소와 소비재시장 진출 확대

중국이 소비 주도의 성장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가공무역 비중 감소와 소비재시장 진출 확대에 중점을 둔 대중 수출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2014년 기준 중국 전체 수입시장에서는 9.7%의 점유율을 차지하여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있지만,<sup>102)</sup>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5.7%의 점유율에 그쳐 미국, 일본, 독일 등 경쟁국에 뒤처져 있다.<sup>103)</sup> 이는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가공무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구조와 관련이 있다.

중국정부의 내수 주도 성장방식으로서의 전환과 가공무역 규제에 따라 중국의 수입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의 41%에서 2014년에는 27%로 줄어든 반면, 일반무역 비중은 42%에서 57%로 증가하였

102)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 통계, <http://www.kita.net>(검색일: 2015. 3. 4)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103) 중국해관통계(구입일: 2015. 3. 24, 구입처: 중국해관)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다.<sup>104)</sup> 이에 반해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일반무역과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2014년 기준 가공무역이 여전히 52%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무역은 34%에 그쳐 변화하는 중국 수입구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sup>105)</sup> 이에 향후 중국 내수용 일반무역에 대한 수출확대와 가공무역 비중 감소가 필요하다.

또한 가공단계별로는 70% 이상이 중간재에 치우쳐 있는데, 물론 한국이 중간재 수출에서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계속 유지해야겠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 소비재시장으로의 진출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2014년 기준 중국의 수입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2%로 아직 작지만 2006~14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26.3%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sup>106)</sup> 이에 반해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하나, 2009~14년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6.9%로 여타 가공단계에 비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sup>107)</sup>

아직까지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은 자동차 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 음식료품과 비내구재 수입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 역시 자동차 수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 내 생산확대로 향후 완성차 수출보다는 부품소재 수출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에 화장품, 의류와 같은 비내구재와 반내구재, 음식료품, 그리고 한국이 우위를 갖고 있는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소비재의 수출확대가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

104) 위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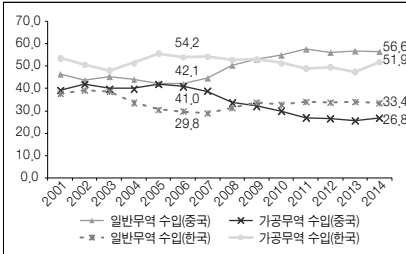
105) 위의 자료.

106)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 통계, <http://www.kita.net>(검색일: 2015. 3. 4)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107) 위의 자료.

그림 6-6. 중국의 수입과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일반무역과 가공무역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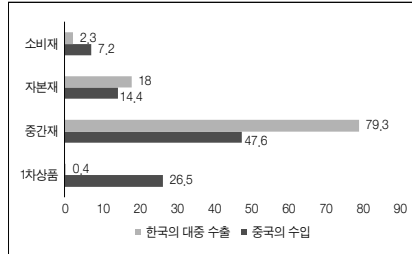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중국해관통계(구입일: 2015. 3. 24, 구입처: 중국해관); 재인용: 정지현, 김부용(2015).

그림 6-7. 중국의 수입과 한국의 대중 수출의 가공단계별 구성(2014년)

(단위: %)



자료: 중국해관통계(구입일: 2015. 3. 24, 구입처: 중국해관)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 현지 시장 진출형 투자 전환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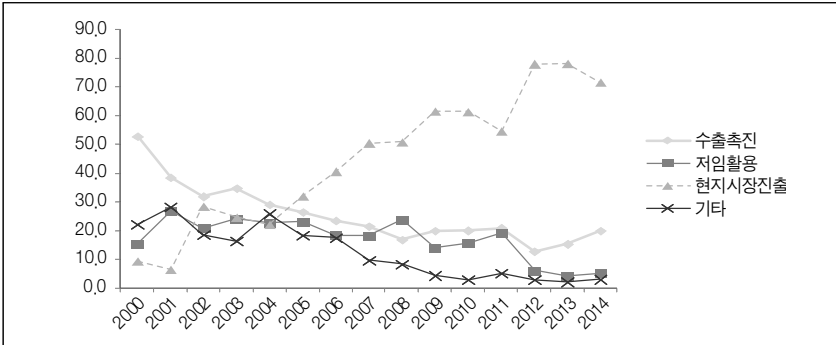
중국의 소비 주도 성장방식 전환에 대응하여 한국은 수출에서는 일반무역 수출과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에서는 현지 시장 진출형 투자로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사실 이미 투자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바, 2007년부터 현지 시장 진출목적의 투자가 50% 이상을 차지하여 수출촉진과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투자액 기준. 그림 6-8 참고).<sup>108)</sup> 이는 2000년대 중반부터 동부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저임금의 단순노동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고 최저임금 기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 기인한다.

향후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중국정부의 임금인상정책이 지속되고, 산아제한이 완화되긴 했지만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노동력 부족현상도 지속될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사회보장

10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http://keri.koreaexim.go.kr>(검색일: 2015. 8. 14).

그림 6-8. 한국의 대중 투자목적별 투자 추이



주: 투자액 기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http://keri.koreaexim.go.kr>(검색일: 2015. 8. 14).

확대로 인한 기업부담 가중, 환경기준 강화 등이 겹치면서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생산환경에 지속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당초 풍부한 인력과 저렴한 인건비로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상했던 중국이 제조대국, 수출대국이라는 매력을 차츰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노동력이나 인프라 등에서 중국을 대체할 만한 생산거점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기업들은 이미 동남아나 중앙아시아와 같은 해외지역 혹은 중국 내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이전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국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향후 대중 투자기업들은 서비스시장 진출과 더불어 제조업에서는 수출촉진이나 저임 활용의 투자에서 벗어나 현지 시장 진출형 투자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 마.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대중 전략

### 1) 신형 도시화에서 새로운 기회 모색

‘농민공의 시민화’에 초점을 맞춘 신형 도시화의 추진으로 향후 투자

와 소비 수요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새로운 사업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도시화 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보자면 도시화율 1%p 상승으로 최소 1,300만 명의 농민이 도시민으로 전환되며, 이는 1,740억 위안의 신규 소비를 창출하게 된다. 향후 10년간 도시화율이 10~15%p 상승하면 1조 7억~2조 6억 위안의 소비시장이 새롭게 창출되어, 최종 소비지출을 1.6%p 끌어올리게 된다. 또한 향후 10년간 도시화율이 연평균 1.2%p 증가할 경우 2억 명의 농민공이 도시민으로 전환되며, 여기에 기존의 농민공 1억 6,000만 명을 합칠 경우 신규 도시인구는 4억 명에 달하게 된다. 최저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농민공이 도시민화되기 위해서는 1인당 10만 위안의 고정자산투자를 필요로 하므로 총 40조 위안의 신규 투자를 창출한다.<sup>109)</sup>

이에 농민공의 도시민화 과정에서 창출되는 소비시장을 공략하되, 초기에는 대중적인 소비재에 집중하는 단계별 공략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투자수요 확대에 따른 사업기회를 잘 포착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향후 발생할 막대한 투자수요는 외자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이나 외자기업에 대한 진입장벽도 높은 만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앞서 2장에서 언급하였듯 농민공의 도시민화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중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위한 재정지출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규 유입 농민공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 부분 기업에 전가될 것으로 보여 실질적 인건비 상승도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

109) 본 단락은 「夏鋒等: 新型城镇化是消费升级主要载体」(2014. 5. 19), <http://www.zgxcfx.com/Article/69474.html>(검색일: 2015. 11. 22)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 2) 일대일로에서 새로운 기회 모색

이밖에 시진핑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일대일로는 높아진 중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아시아를 비롯한 주변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대외전략으로 볼 수 있다. 즉 동남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지역에 대한 항구, 공항,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을 강화함으로써 이들 지역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러한 대형 인프라 건설프로젝트를 통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조선 등 업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중국 내의 공급과잉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둔화를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것이다.<sup>110)</sup>

또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개혁·개방을 가속화하여 외자 유치와 더불어 중국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향후 일대일로 관련 철도, 도로, 공항, 항구 등 인프라 중심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면서 건설 관련 장비와 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분야의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참여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

110) 이문형(2015), p. 19.

### 3.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본 연구는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에 대해 소비촉진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 소비 현황, 소비확대 제약요인의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어떠한 요인이 중국의 가계소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도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와 달리 중국 가계소비의 결정요인을 중국의 성별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지적되는 소비 제약요인들 외에 중국요인에 대해서 고찰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다르다. 실증분석에서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변수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한계가 존재한다. 가령 중국요인으로 꼽고 있는 소득불균형은 도농간 소득격차로 측정하고 있는데, 사실 가계소비의 70% 이상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도농간 소득격차로 살펴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정부정책과 관련하여서도 양로보험이나 의료보험 가입자 수 등의 변수를 사용해 12차 5개년 계획기간 실시한 정부의 사회보험제도 개선효과를 살펴보면 좋으나,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 의료, 사회보장, 주택보장 등의 비중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는 지역별 데이터 접근의 어려움 때문인데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면 중국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 참고문헌 ■

### [국문자료]

- KIEP 북경사무소. 2012a. 「중국 ‘서비스 무역 발전 12.5 계획 개요’의 주요 내용」.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 14, No.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12b. 「2011년 중국 농민공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KIEP 북경사무  
소 브리핑』, Vol. 14, No. 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14.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 및 전망」. 『북경사무소 브  
리핑』, Vol. 17, No. 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병철. 2010. 「중국 농민공의 현황과 문제 그리고 대책」. 『특별기획원고』,  
2010-Vol. 2. IOM이민정책연구원.
- 김상윤, 이은창. 2015. 「한국 제조업 First Mover 전략 제1부: 한국 제조업 위기  
의 마지막 Signal」. POSRI 보고서. (4월 29일)
- 김은화. 2014. 「중국의 온라인 P2P 금융 현황 및 전망」.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겨울호. 자본시장연구원.
- 김형욱. 2010. 「중국의 국내소비 활성화 정책에 따른 소비자 금융시장(Consumer  
Finance)의 확대」.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10월)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8. 『주요국의 부동산가격 급등현상과 정책대  
응에 대한 비교 연구』. 건설교통부 용역보고서.
- 류정희. 2015. 「중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쟁점」. 『보건복지포럼』, 4월, 통권 제22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익준, 나수엽, 이호진. 2014. 「2014년 중국 양회 주요 내용과 향후 경제정책방향」.  
『오늘의 세계경제』, 제14-0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두정. 2014. 「중국의 4대 금융리스크 현황과 평가」. 『한국수출입은행 지역이슈  
분석』, 2014-18. (6월 23일)

- 성균중국연구소. 2014. 『차이나 핸드북』. 김영사.
- 여지나. 2011. 「중국 사회보험법 시행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지역경제포커스』, 제11-39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유재현. 2007.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현황 및 향후 전망」. 『해외경제 포커스』, 제2007-7호. 한국은행.
- 이문형. 2015. 「중국, 뉴실크로드 건설 전략과 시사점」. 『이슈분석』, 4월호. 산업연구원.
- 이봉걸. 2015. 「중국 신창타이 시대 진입에 따른 새로운 대중전략 필요」. 『Trade Brief』, No. 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이승신, 최필수, 여지나. 2011. 「2011년 양회(兩會)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11-1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정진. 2013. 「중국 인구고령화와 산아제한 정책 완화」. 『연금시장리뷰』, 13-20호, 통권 95호. 현대경제연구원.
- 이철용. 2011. 「중국 인구구조 변화의 경제적 시사점」. 『LG Business Insight』, 1147호. LG경제연구원.
- 이치훈. 2015. 「전환기의 중국 부동산 시장과 리스크 평가」. 『KB중국금융 시장정보』, 1월호.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 전익호. 2012. 「중국 서비스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 2012-23. (8월 12일)
- 정지현, 김부용. 2015.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자료 15-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제정조. 2010. 「중국 소비자금융 현황 및 미래발전에 대한 연구」. 『한중 경상학회 학술대회』, Vol. 2010, No.-[2010]. 한중경상학회.
- 주 원, 조규림. 2012. 「양날의 칼(double-edged sword), 중국경제」. 『현안과 과제』, 12-07. 현대경제연구원.

- 지만수. 2015. 「중국 위기의 파급 경로와 국내 금융부문 영향」. 전문가포럼 발표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명해, 한나라. 2013. 「중국 ‘신형’ 도시화의 핵심 이슈와 전망」. 『SERI 경제포커스』, 제430호. 삼성경제연구소.
- 최필수, 이상훈, 문익준, 나수엽. 2012.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연구보고서 12-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필수, 문익준, 이한나. 2013. 「중국 제18기 삼중전회의 주요 내용과 향후 경제 개혁의 방향」. 『오늘의세계경제』, 제13-23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금융연구원. 2013. 「중국의 지니계수에 관한 통계국과 민간 전문가 사이의 논쟁」. 『주간 금융브리프』, 22권 10호.
- \_\_\_\_\_. 2014. 「2014년 중국의 신용카드시장 보고서」. 『주간 금융브리프』, 24권 1호.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5. 「위안화 평가절하의 우리 수출 영향」. 『Trade Brief』. (8월 25일)
- 한국은행. 2011. 「중국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국제경제정보』, 제2011-61호.
- 한재현. 2012. 「중국의 소비주도 성장패러다임 전환의 제약요인」.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2-25호. 한국은행.

#### [중문자료]

- 人力资源和社会保障事业发展. 2011. 4. 「“十二五” 规划纲要」. 中国新闻网(2015)
- 胡鞍钢. 2015. 「中国国家战略与十三五规划」. 성균중국연구소. 『세미나 발표자료』. (10월 19일)

[영문자료]

- Attanasio, Orazio, and Miguel Székely. 2000. "Household Saving in East Asia and Latin America: Inequality Demographics and All That." Annual World Bank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 Aziz, Jahangir and Li Cui. 2007. "Explaining China's low consumption: The neglected role of household income." IMF Working Paper, 07/181. IMF.
- Blanchard, Olivier and Francesco Giavazzi. 2005. "Rebalancing growth in China: A three-handed approach." MIT Working Paper, 05-32. MIT.
- Chamon, Marcos and Eswar Prasad. 2008. "Why are saving rates of urban households in China rising?" IMF Working Paper, 08/145. IMF.
- Chenery, Hollis and Moises Syrquin. 1975. *Patterns of Development: 1950-197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or the World Bank.
- Choukhmane Taha, Nicolas Coeurdacier and Keyu Jin. 2014. "The One-Child Policy and Household Savings."
- Guo, Kai and Papa N'Diaye. 2010. "Determinants of China's Private Consumptio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IMF Working Paper, WP/10/93. IMF.
- IMF. 2012.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2 Article IV Consultation." *IMF Country Report*, No. 12/195.
- \_\_\_\_\_. 2015. "Understanding Residential Real Estate in China." IMF Working Paper, WP/15/84.
- Kinsella Kevin and Wan He. 2009. *An Aging World: 2008 International Population Reports*.
- Kuijs, Louis. 2005. "Investment and saving in China."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3633. The World Bank.
- Lee, Il Houg, Murtazu Syed, and Xueyan Liu. 2013. "China's path to

consumer-based growth: Reorienting investment and enhancing efficiency.”  
IMF Working Paper, 13/83. IMF.

Modigliani, Franco. 1966.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the demand for wealth and the supply of capital.” *Social Research*, Vol. 33, No. 2, pp. 160-217.

Modigliani, Franco and Shi Larry Cao. 2004. “The Chinese saving puzzle and the life cycle hypothesi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42, No. 1, pp. 145-170.

OECD. 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Performance Urban Planning. 2015. *11th Annual Demographia International Housing Affordability Survey: 2015*.

Wang, Wenjiang. 2011. “Why are household consumption rates so low in China?” MSc. in International Economic Consulting, Aarhus School of Business. Aarhus University.

Xu Guangjian, Liyuan Dai, and Jipeng Zhong. 2010. “Why Has China’s Final Consumption Rate Declined Since 1978? Cause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Vol. 31, Issue 3, pp. 338-352. (September)

#### [온라인 자료]

강혜진(시안무역관). 2015. 「中 농업, 새로운 기회가 보인다」. 『KOTRA global window』. 2015-06-02. KOTRA.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9066&ARTICLE\\_SE=20302](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M10103&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9066&ARTICLE_SE=20302)(검색일: 2015. 8. 16).

- 김영선. 2015. 「중국 주요 도시 최저임금 기준 인상 동향」. 『이슈분석』. 2015-04-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csf.kiep.go.kr/issueInfo/M002000000/view.do?articleId=13071>(검색일: 2015. 8. 25).
- 노승길. 2014. 「[일어나라 대한민국] 전문가가 바라본 한국경제 <2> 신민영 LG 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부장」. 『아주경제』(11월 17일). <http://www.ajunews.com/view/20141114144657908>(검색일: 2015. 11. 22).
- 바이두(百度) 백과사전(百科). <http://www.bike.baidu.com>(검색일: 2015. 10. 23).
- 연합뉴스. 2015. 「환율카드 꺼내든 중국... 공급과잉·수출부진 타개 포석」(8월 12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2/0200000000AKR20150812114800089.HTML?input=1195m>(검색일: 2015. 8. 25).
- 일본정책투자은행. 2015. 「中国 經濟の 投資から消費への構造転換」. 『今月のトピックス』(6월 18일). [http://www.dbj.jp/pdf/investigate/mo\\_report/0000019912\\_file2.pdf](http://www.dbj.jp/pdf/investigate/mo_report/0000019912_file2.pdf)(검색일: 2015. 11. 5).
- 한겨레신문. 2015. 「중국 한 자녀 정책 35년만에 폐지」(10. 29).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715204.html>(검색일: 2015. 11. 3).
- 한·중국 FTA 협정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국문」. <http://fta.go.kr/cn/doc/1/>(검색일: 2015. 11. 22).
- Bloomberg. 2014. “China’s Income Inequality Surpasses U.S., Posing Risk for Xi.” (April 29).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4-04-28/gap-between-rich-poor-worse-in-china-than-in-u-s-study-shows>(검색일: 2015. 8. 20).
- China Daily. 2015. “Family planning policy sees big overhaul.” (Oct. 30). [http://www.chinadaily.com.cn/china/2015cpcplenarysession/2015-10/30/content\\_22313174.htm](http://www.chinadaily.com.cn/china/2015cpcplenarysession/2015-10/30/content_22313174.htm)(검색일: 2015. 11. 3).
- Dexter Roberts. 2015. “The Chinese Can’t Kick Their Savings Habit.”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5-05-01/chinese-consumers-cling-to-saving-suppressing-spending>(검색일: 2015. 10. 24).

- McKinsey Analysis: Why China's consumers will continue to surprise the world. [http://www.mckinsey.com/insights/strategy/why\\_chinas\\_consumers\\_will\\_continue\\_to\\_surprise\\_the\\_world](http://www.mckinsey.com/insights/strategy/why_chinas_consumers_will_continue_to_surprise_the_world)(검색일: 2015. 11. 5).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2014. "China's Economy Showed Good Momentum of Steady Growth in the Year of 2013." [http://www.stats.gov.cn/english/Pressrelease/201401/t20140120\\_502079.html](http://www.stats.gov.cn/english/Pressrelease/201401/t20140120_502079.html)(검색일: 2015. 8. 12).
- \_\_\_\_\_. 2015. "China's Economy Realized a New Normal of Stable Growth in 2014." [http://www.stats.gov.cn/english/PressRelease/201501/t20150120\\_671038.html](http://www.stats.gov.cn/english/PressRelease/201501/t20150120_671038.html)(검색일: 2015. 8. 12).
- Reuters. 2013. "China lets Gini out of the bottle; wide wealth gap." (Jan. 18). <http://www.reuters.com/article/us-china-economy-income-gap-idUSBRE90H06L20130118>(검색일: 2015. 8. 20).
- 经济参考报. 2015. 「国务院: 将制定三年计划加快棚户区改造」(7월 1일). [http://news.xinhuanet.com/house/cq/2015-07-01/c\\_1115775739.htm](http://news.xinhuanet.com/house/cq/2015-07-01/c_1115775739.htm)(검색일: 2015. 11. 5).
- 国家发展改革委. 2009. 「4万亿元投资的重点投向和资金测算」(3月 6日). <http://zfxgk.ndrc.gov.cn/PublicItemView.aspx?ItemID={bc4b9e60-8fdd-42c0-9f27-3cd159e86d30}>(검색일: 2015. 8. 25).
- 国务院. 2001. 「国务院批转公安部关于推进小城镇户籍管理制度改革意见的通知」(3月 30日). <http://fgk.chinalaw.gov.cn/article/fgxwj/200103/20010300277424.shtml>(검색일: 2015. 8. 25).
- \_\_\_\_\_. 2012. 「服务业发展“十二五”规划」(12월 1일). [http://www.gov.cn/zwggk/2012-12/12/content\\_2288778.htm](http://www.gov.cn/zwggk/2012-12/12/content_2288778.htm)(검색일: 2015. 8. 25).
- \_\_\_\_\_. 2013. 「国务院关于化解产能严重过剩矛盾的指导意见」(10月 6日). [http://www.gov.cn/jj/2013/10/06/content\\_2501117.htm](http://www.gov.cn/jj/2013/10/06/content_2501117.htm)(검색일: 2015. 8. 25).

- www.gov.cn/gongbao/content/2013/content\_2514934.htm(검색일: 2015. 8. 25).
- \_\_\_\_\_. 2014a. 「关于建立统一的城乡居民基本养老保险制度的意见」(2월 21일).  
[http://www.gov.cn/zwggk/2014-02/26/content\\_2621907.htm](http://www.gov.cn/zwggk/2014-02/26/content_2621907.htm)(검색일: 2015. 8. 25).
- \_\_\_\_\_. 2014b. 「国务院关于进一步推进户籍制度改革的意见」(7월 24일). <http://www.chinanews.com/gn/2014/07-30/6439778.shtml>(검색일: 2015. 8. 25).
- \_\_\_\_\_. 2014c. 「关于加快发展生产性服务业促进产业结构调整升级的指导意见」(7월 28일).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4-08/06/content\\_8955.htm](http://www.gov.cn/zhengce/content/2014-08/06/content_8955.htm)  
(검색일: 2015. 8. 25).
- \_\_\_\_\_. 2014d. 「关于加快科技服务业发展的若干意见」(10월 28일). <http://politics.people.com.cn/n/2014/1028/c1001-25922956.html>(검색일: 2015. 8. 25).
- 网易财经. 2014. 「2014中国信用卡报告(全文)」(6월 5일). [http://money.163.com/14/0605/07/9TV763DD002552HQ\\_all.html](http://money.163.com/14/0605/07/9TV763DD002552HQ_all.html)(검색일: 2015. 10. 28).
- 「卖地时代结束: 土地出让金一季度仅占地方财政收入32%」. 2015. 21世纪经济报道(5월 25일). <http://finance.sina.com.cn/china/20150525/005922253699.shtml>(검색일: 2015. 11. 22).
- 「发改委稳增长: 9月批复基建投资超8000亿」. 2015. 凤凰财经(9월 29일). [http://finance.ifeng.com/a/20150929/14000290\\_0.shtml](http://finance.ifeng.com/a/20150929/14000290_0.shtml)(검색일: 2015. 11. 22).
- 商务部. 2011. 「服务贸易发展十二五规划纲要」(9월 27일). <http://tradeinservices.mofcom.gov.cn/g/2014-03-31/185523.shtml>(검색일: 2015. 8. 25).
- 「习近平首次系统阐述“新常态”」. 2014. 新华网(11월 9일). [http://news.xinhuanet.com/world/2014-11/09/c\\_1113175964.htm](http://news.xinhuanet.com/world/2014-11/09/c_1113175964.htm)(검색일: 2015. 11. 22).
- 新浪财经. 2015. 「报告称农民工月挣近五千 将成拉动消费生力军」(8월 20일). <http://finance.sina.com.cn/china/20150820/212823021728.shtml>(검색일: 2015. 11. 5).

- 新华网. 2015. 「“十二五”建设3600万套保障房的目标有望超额完成」. (7월 17일).  
[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5-07/17/c\\_1115960575.htm](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5-07/17/c_1115960575.htm)(검색일: 2015. 11. 5).
- 申万宏源. 2015. 「人口政策变化及“全面二胎”政策影响评估」(10월 16일). [http://stock.cnstock.com/stock/smk\\_gszbs/201510/3591506.htm](http://stock.cnstock.com/stock/smk_gszbs/201510/3591506.htm)(검색일: 2015. 11. 3).
- 人力资源社会保障部·财政部. 2014. 「城乡养老保险制度衔接暂行办法」(7월 1일).  
<http://www.gkstk.com/article/78931875.html>(검색일: 2015. 8. 25).
- 财新网. 2015. 「消费金融公司不良率提高至2.85%」(10월 29일). <http://finance.caixin.com/2015-10-29/100867726.html>(검색일: 2015. 11. 3).
- 财政部·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2009. 「关于开展“节能产品惠民工程”的通知」(5월 18일). [http://www.law-lib.com/law/law\\_view.asp?id=281805](http://www.law-lib.com/law/law_view.asp?id=281805)(검색일: 2015. 8. 25).
- 财政部·人力资源社会保障部·国家税务总局. 2013. 「关于企业年金职业年金个人所得税有关问题的通知」(12월 6일).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312/t20131206\\_1021661.html](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312/t20131206_1021661.html)(검색일: 2015. 8. 25).
- 财政部·科技部·工业和信息化部·发展改革委. 2015. 「关于2016-2020年新能源汽车推广应用财政支持政策的通知」(4월 22일). [http://jj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gui/201504/t20150429\\_1224515.html](http://jj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gui/201504/t20150429_1224515.html)(검색일: 2015. 11. 22).
- 赵昌文. 2014. 「中国的产能过剩风险及其化解」(3월 20일). [http://economy.caixin.com/2014-03-20/100654059\\_3.html](http://economy.caixin.com/2014-03-20/100654059_3.html)(검색일: 2015. 8. 24).
-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 2015. 新华网(11월 4일). [http://news.xinhuanet.com/ziliao/2015-11/04/c\\_128392424\\_2.htm](http://news.xinhuanet.com/ziliao/2015-11/04/c_128392424_2.htm)(검색일: 2015. 11. 22).
- 中国经营网. 2014. 「为什么农民工不愿意上社保?」(9월 19일). [http://www.cb.com.cn/economy/2014\\_0919/1084796.html](http://www.cb.com.cn/economy/2014_0919/1084796.html)(검색일: 2015. 11. 5).

- 中国共产党. 2008. 「中共中央关于推进农村改革发展若干重大问题的决定」(10월 12일). [http://www.gov.cn/test/2008-10/31/content\\_1136796.htm](http://www.gov.cn/test/2008-10/31/content_1136796.htm)(검색일: 2015. 8. 25).
- 中国网. 2013. 「全国累计销售家电下乡产品2.98亿 实现销售额7204亿」(1월 8일). <http://news.f139.com/detail/993262.html>(검색일: 2015. 11. 3).
- 中国新闻网. 2015. 「全国社会保障卡持卡人达到8.09普及率59%」(10월 27일). <http://www.chinanews.com/gn/2015/10-27/7591365.shtml>(검색일: 2015. 11. 3).
- 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 2009. 「消费金融公司试点管理方法」(7월 22일). [http://www.china.com.cn/policy/txt/2009-08/14/content\\_18333170.htm](http://www.china.com.cn/policy/txt/2009-08/14/content_18333170.htm)(검색일: 2015. 8. 25).
- 中国人民银行. 2011. 『2010年小额贷款公司数据统计报告』. 2011-03-22. <http://www.pbc.gov.cn/diaochatongjisi/116219/116225/2850803/index.html>(검색일: 2015. 10. 22).
- \_\_\_\_\_. 2015. 『2015年三季度小额贷款公司统计数据报告』. 2015-10-23. <http://www.pbc.gov.cn/diaochatongjisi/116219/116225/2968461/index.html>(검색일: 2015. 10. 22).
- 中国行业研究网. 2013. 「2013年我国工业企业产能利用率逐季回升」(12월 25일). <http://www.chinairm.com/news/20131225/141003527.html>(검색일: 2015. 8. 25).
- \_\_\_\_\_. 2015. 「中国住房支出在居民所有消费中占比最高」. <http://www.chinairm.com/print/4140315.html>(검색일: 2015. 11. 3).
- 「中央经济工作会议在京举行」. 2014. 新华网(12월 11일). [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4-12/11/c\\_1113611795.htm](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4-12/11/c_1113611795.htm)(검색일: 2015. 11. 22).
-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2013. 「马建堂就2012年国民经济运行情况答记者问」. [http://www.stats.gov.cn/tjgz/tjdt/201301/t20130118\\_17719.html](http://www.stats.gov.cn/tjgz/tjdt/201301/t20130118_17719.html)(검색일: 2015. 8. 12).

- \_\_\_\_\_. 2015. 『2014年全国农民工监测调查报告』, 2015-04-29. [http://www.stats.gov.cn/tjsj/zxfb/201504/t20150429\\_797821.html](http://www.stats.gov.cn/tjsj/zxfb/201504/t20150429_797821.html)(검색일: 2015. 11. 3).
- 中华人民共和国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2011a. 『2008年度人力资源和社会保障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zwgk/szrs/ndtjsj/tjgb/201107/t20110723\\_69905.htm](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zwgk/szrs/ndtjsj/tjgb/201107/t20110723_69905.htm)(검색일: 2015. 11. 3).
- \_\_\_\_\_. 2011b. 『2009年度人力资源和社会保障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zwgk/szrs/ndtjsj/tjgb/201107/t20110723\\_69906.htm](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zwgk/szrs/ndtjsj/tjgb/201107/t20110723_69906.htm)(검색일: 2015. 11. 3).
- \_\_\_\_\_. 2011c. 『2010年度人力资源和社会保障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hrss.gov.cn/ghcws/GHCWSzhengcewenjian/201107/t20110719\\_83608.htm](http://www.mohrss.gov.cn/ghcws/GHCWSzhengcewenjian/201107/t20110719_83608.htm)(검색일: 2015. 11. 3).
- \_\_\_\_\_. 2012. 『2011年度人力资源和社会保障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zwgk/szrs/ndtjsj/tjgb/201206/t20120605\\_69908.htm](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zwgk/szrs/ndtjsj/tjgb/201206/t20120605_69908.htm)(검색일: 2015. 11. 3).
- \_\_\_\_\_. 2013. 『2012年度人力资源和社会保障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dongtaixinwen/buneyaowen/201305/t20130528\\_103939.htm](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dongtaixinwen/buneyaowen/201305/t20130528_103939.htm)(검색일: 2015. 11. 3).
- \_\_\_\_\_. 2014. 『2013年度人力资源和社会保障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dongtaixinwen/buneyaowen/201405/t20140528\\_131110.htm](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dongtaixinwen/buneyaowen/201405/t20140528_131110.htm)(검색일: 2015. 11. 3).
- \_\_\_\_\_. 2015. 『2014年度人力资源和社会保障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dongtaixinwen/buneyaowen/201505/t20150528\\_162040.htm](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dongtaixinwen/buneyaowen/201505/t20150528_162040.htm)(검색일: 2015. 11. 3).
- 「夏锋等: 新型城镇化是消费升级主要载体」. 2014. 中国乡村发现(5月 19日). <http://www.zgxcfx.com/Article/69474.html>(검색일: 2015. 11. 22).

「2015年中国消费的增长仍然会比较平稳」. 2015. 互联网(1월 5일). <http://www.chinairm.com/news/20150105/103908224.shtml>(검색일: 2015. 11. 5).

## [데이터베이스]

중국국가통계국 DB. <http://www.stats.gov.cn>(검색일: 2015. 8. 12, 2015. 8. 19, 2015. 8. 20, 2015. 8. 28, 2015. 9. 3, 2015. 9. 8, 2015. 9. 16, 2015. 11. 19, 2015. 11. 22).

중국해관통계(구입일: 2015. 3. 24, 구입처: 중국해관).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 통계. <http://www.kita.net>(검색일: 2015. 3. 4, 2015. 11. 22).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 통계. <http://www.kita.net>(검색일: 2015. 11. 2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 <http://keri.koreaexim.go.kr/site/main/index007>(검색일: 2015. 8. 14).

CEIC DB. <http://www.ceic.com>(검색일: 2015. 2. 11, 2015. 5. 13, 2015. 8. 19, 2015. 8. 20, 2015. 8. 22, 2015. 8. 24, 2015. 8. 25, 2015. 9. 7, 2015. 9. 16, 2015. 9. 25, 2015. 11. 2, 2015. 11. 4, 2015. 11. 5).

IMF. 2015.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15. 8. 12).

Statistics Japan. <http://www.stat.go.jp>(검색일: 2015. 8. 24).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Database (검색일: 2015. 8. 12).

WDI DB. <http://www.worldbank.org>(검색일: 2015. 5. 13, 2015. 8. 24).

World Bank DB. <http://data.worldbank.org/>(검색일: 2015. 8. 12, 2015. 8. 28).

## 부록



부표 1. 기본모형에 대한 상관관계표: 전체

	가계 소비	경제 성장	1인당 GDP	가계 소득	정부 소비	투자	물가	노인 부양 비율	서비스업 발전
가계소비	1,000								
경제성장	-0,359	1,000							
1인당 GDP	-0,683	0,192	1,000						
가계소득	0,403	-0,306	-0,447	1,000					
정부소비	-0,032	-0,079	-0,206	0,328	1,000				
투자	-0,430	0,275	0,307	0,074	0,374	1,000			
물가	-0,277	0,313	0,338	-0,133	0,032	0,299	1,000		
노인부양비율	-0,069	0,248	0,359	-0,302	-0,446	-0,154	0,039	1,000	
서비스업 발전	0,022	-0,134	0,259	0,058	0,360	-0,092	-0,103	0,026	1,000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9. 25)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계산.

부표 2. 기본모형에 대한 상관관계표: 연해지역

	가계 소비	경제 성장	1인당 GDP	가계 소득	정부 소비	투자	물가	노인 부양 비율	서비스업 발전
가계소비	1,000								
경제성장	-0,481	1,000							
1인당 GDP	-0,294	-0,031	1,000						
가계소득	0,226	-0,361	-0,288	1,000					
정부소비	0,013	-0,133	0,115	0,083	1,000				
투자	-0,719	0,304	0,402	-0,022	-0,156	1,000			
물가	-0,258	0,148	0,369	-0,038	-0,044	0,292	1,000		
노인부양비율	-0,281	0,270	0,232	-0,527	-0,073	0,199	-0,106	1,000	
서비스업 발전	0,242	-0,226	0,502	-0,052	0,716	-0,166	-0,005	0,057	1,000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9. 25)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계산.

부표 3. 기본모형에 대한 상관관계표: 내륙지역

	가계 소비	경제 성장	1인당 GDP	가계 소득	정부 소비	투자	물가	노인 부양 비율	서비스업 발전
가계소비	1,000								
경제성장	-0,375	1,000							
1인당 GDP	-0,752	0,371	1,000						
가계소득	0,358	-0,319	-0,386	1,000					
정부소비	-0,182	-0,083	-0,131	0,304	1,000				
투자	-0,582	0,284	0,604	-0,023	0,386	1,000			
물가	-0,355	0,392	0,462	-0,219	0,021	0,294	1,000		
노인부양비율	0,140	0,264	0,275	-0,113	-0,490	-0,154	0,144	1,000	
서비스업 발전	0,144	-0,051	-0,292	0,437	0,594	0,125	-0,178	-0,232	1,000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9. 25)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계산.

부표 4. 기본모형에 대한 상관관계표: 금융위기 이전

	가계 소비	경제 성장	1인당 GDP	가계 소득	정부 소비	투자	물가	노인 부양 비율	서비스업 발전
가계소비	1,000								
경제성장	-0,537	1,000							
1인당 GDP	-0,722	0,597	1,000						
가계소득	0,565	-0,476	-0,653	1,000					
정부소비	0,054	-0,086	-0,237	0,272	1,000				
투자	-0,233	0,418	0,105	-0,067	0,523	1,000			
물가	-0,213	0,530	0,288	-0,267	0,007	0,319	1,000		
노인부양비율	-0,163	0,322	0,558	-0,379	-0,396	-0,108	0,135	1,000	
서비스업 발전	-0,053	0,036	0,350	0,017	0,305	0,102	-0,105	0,164	1,000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9. 25)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계산.

부표 5. 기본모형에 대한 상관관계표: 금융위기 이후

	가계 소비	경제 성장	1인당 GDP	가계 소득	정부 소비	투자	물가	노인 부양 비율	서비스업 발전
가계소비	1,000								
경제성장	-0,155	1,000							
1인당 GDP	-0,367	-0,284	1,000						
가계소득	0,178	-0,018	-0,491	1,000					
정부소비	-0,234	-0,074	-0,216	0,418	1,000				
투자	-0,392	0,248	-0,196	0,270	0,419	1,000			
물가	-0,058	0,125	-0,098	0,025	0,108	0,001	1,000		
노인부양비율	0,240	0,150	0,050	-0,181	-0,504	-0,402	-0,183	1,000	
서비스업 발전	0,115	-0,328	0,395	0,112	0,409	-0,245	-0,106	-0,118	1,000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9. 25)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계산.

## Executive Summary

### Study on China's Consumption Based Growth Strategy

LEE Chang-Kyu, JIN Furong, CHOI Pil Soo, NA Su Yeob,  
KIM Young Sun, CHO Ko Un, and LEE Hyo Jin

China, as one of the world's leading economic powers, has been heavily dependent on investment and exports for economic growth since its opening and reform, which allowed for a sustained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10% until 2011. But the Chinese government, realizing the limits of such investment-driven growth model, has been pushing for a paradigm shift to a consumption-driven growth since the beginning of the 12th Five Year Plan (2011~2015). The switch is a demonstration of the government's firm determination to lower its dependence on investment for economic growth and expand consumption, even at the cost of decreased growth rates. But since 2012, a sluggish global economy has led to a slowdown of exports, investments and consumption, causing China's economic growth to dwindle to around 7% and thus, signaling the country's entrance into the "era of new normal."

Considering such a background,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why consumption was not stimulated to the extent the Chinese government wanted, using an empirical analysis; it also seeks to evaluate China's efforts to boost consumption, and, from them, its consumption-driven growth strategy. Finally,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China's consumption-oriented growth model on the Korean economy, presenting several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Korea's new China strategy in this "era of new normal."

This paper is divided into six chapters. After the Introduction, Chapter 2 looks

into Chinese government policies to boost consumption, which began in earnest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ree main policies are especially emphasized: China's strategy to decrease household saving rate, its strategy to increase household disposable income and its strategy to change the consumption structure.

In Chapter 3, this paper investigates the trend of China's household consumption, its consumption gap across various strata, its consumption structure and the trend of the consumption market according to industry sectors. According to an index that reveals China's consumption expenditure, China's household consumption increased more than five-fold from around 4.7 trillion yuan in 2000 to around 24.15 trillion yuan in 2014. But income disparity, an unwelcome side effect of China's high-speed growth, is widening the consumption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between classes, and between regions. China's retail sales growth, which had been rising steadily since 2000, has slowed after 2010. Reasons for the slowdown include retreating consumer confidence due to the recent economic recession, general preference for savings due to insufficient social security net, etc.

In Chapter 4, widening income disparity, demographic changes, an inadequate social security system, low urbanization rate, slumping development of consumer finance and high housing prices are presented as the factors responsible for constraining the growth of China's domestic consumption, and efforts were made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of each factor. After 2009, urban-rural income gap narrowed to a certain degree, but disparity across regions (Eastern coastal regions versus Western inland regions) and the social stratum, visible in the Gini coefficient, remain large.

In Chapter 5, this paper uses province-level data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to examine factors that determine China's domestic consumption. The results show that factors including economic growth,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household income, investment, elderly support ratio, development of the service sector, financial development, urbanization, education expenditure, and the rise in the

minimum wage all have meaningful influence on China's domestic consumption.

Economic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were found to have a meaningful negative correlation with consumption. Household income and development of the service sector were found to have a meaningful positive correlation to consumption; while investment and elderly support ratio had a meaningful negative correlation; this indicates that low labor share, underdevelopment of the service industry, high investment rate and high elderly support ratio have limited the growth of China's household consumption.

Among the China-specific factors, financial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were found to have a meaningful positive influence on household consumption.

Regarding government policies, the expansion of fiscal spending for education after the financial crisis ha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household consumption. On the other hand, expenditure on medical, social security and subsidized housing did not have any meaningful influence on household consumption. Minimum wage increases have been found to have a meaningful positive influence on increasing household consumption in the coastal regions; in the coastal areas, the government policy of raising the minimum wage has been successful to some degree.

Regarding investment, investment on manufacturing and the real estate sectors have mostly increased profits of companies, rather than that of households, restricting the growth of household consumption. Investment on farming and the service sectors, on the other hand, led to a growth of household income and consumption.

As China's growth paradigm shift is expected to greatly impact the Korean economy, this research proposes Korea's new China strategy based on the above findings.

First, against the backdrop of China's declining growth as a consequence of entering the "era of new normal," Korea faces an urgent need to develop new markets.

Second, more than 80% of Korea's investment in China has been concentrated

in manufacturing and those directed to the service sector has been meager, meaning Korea must speed up its entry into China's service market.

Third, as China's consumption market is expected to continue growing, Korea should search for a new export strategy to China, with less emphasis on processing trade and more on expanding the consumer goods market. At the same time, Korea should increase its share of investment to target China's domestic markets, accelerating the change in its investment structure.

Fourth, Korea should establish a step-by-step strategy to target the Chinese market: while targeting general consumer goods in the early stage, Korea should ultimately take advantage of the Chinese government's so-called "new form of urbanization" plan. At the same time, Korean companies a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eek to actively participate in large scale infrastructure projects related to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 2015년

- 15-01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임호열·최장호·방호경·임소정·김준영·주센평·진화림·정은이
- 15-02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연구 / 강태수·임태훈·서현덕·강은정
- 15-03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최혜린·한민수·황운중·김수빈
- 15-0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 한민수·서봉규·임태훈·강은정·김영선
- 15-05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박순찬
- 15-06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성한경
- 15-07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결정요인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 배찬권·김영귀·금혜윤
- 15-08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 이승래·강준구·김혁황·박지현·이준원·이주미
- 15-09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 노수연·오종혁·박진희·이하나
- 15-10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 이장규·김부용·최필수·나수엽·김영선·조고운·이효진
- 15-11 중국 환경시장의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 정지현·김홍원·이승은·최지원
- 15-12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 최보영·방호경·이보람·유세별
- 15-13 북·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김준영·임소정·최유정

- 15-14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 김규관 · 이형근 · 이신애
- 15-15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 · 인도 협력방안 / 조충제 · 송영철 · 이정미
- 15-1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 연구 / 정지원 · 문진영 · 권 율 · 이주영 · 송지혜
- 15-17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광성일 · 이창수 · 정재완 · 이재호 · 김계국
- 15-18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 김정곤 · 나승권 · 장종문 · 이성희 · 이민영
- 15-19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 · 동남아 경제협력 전망 / 오운아 · 나희량 · 이재호 · 신민규 · 신민이
- 15-20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 박영호 · 정지선 · 박현주 · 김예진
- 15-21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의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 15-22 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15-23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 효과 및 시사점 / 윤여준 · 이 웅 · 문성만 · 권혁주
- 15-24 GCC 국가들의 물류허브 구축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 장윤희
- 15-25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한 · 러 협력방안 / 제성훈 · 강부균 · 민지영

■ 2014년

- 14-0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 정형곤 · 이재완 · 방호경 · 홍이경 · 김병연
- 14-02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 조종화 · 양다영 · 김수빈 · 이동은
- 14-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 임태훈 · 이동은 · 편주현

- 14-04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윤덕룡·김수빈·강삼모
- 14-05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김영귀·금혜윤·유세별·김양희·김한성
- 14-06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 서진교·김민성·송백훈·이창수
- 14-07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 김종덕·강준구·엄준현·이주미
- 14-08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 이승래·김혁황·이준원·박지현
- 14-09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 이승래·박혜리·엄준현·선주연
- 14-10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김윤옥·이민영·이성희
- 14-11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 김정곤·최보영·이보람·이민영
- 14-12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원·권 율·정지선·이주영·송지혜·유애라
-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김규환·이형근·김은지·이신애
- 14-14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문익준·최필수·나수엽·이효진·이장규·박민숙
- 14-15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 김부용·박진희·김홍원·이형근·최지원·張 博
- 14-16 중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 노수연·정지현·강준구·오종혁·김홍원·이한나
- 14-17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 오윤아·이 용·김유미·박나리·신민규
- 14-18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곽성일·배찬권·정재완·이재호·신민이
- 14-19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이 용·조충제·최윤정·송영철·이정미

■ 2013년

- 14-20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14-21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 김보민 · 한민수 · 김종혁 · 이성희 · 고희재
- 14-22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 14-23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제성훈 · 민지영 · 강부근 · Sergey Lukonin
- 14-24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 14-2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방안 / 박영호 · 김예진 · 장종문 · 권유경
- 13-01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최낙균 · 김영귀
- 13-02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 이동은 · 양다영 · 강은정 · 박영준
- 13-03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 정 철 · 이준원 · 김봉근 · 전영준
- 13-04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 윤덕룡 · 송치영 · 김태준 · 문우식 · 유재원 · 채희울
- 13-05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 김영귀 · 배찬권 · 금혜윤
- 13-06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 서진교 · 오수현 · 박지현 · 김민성 · 이창수
- 13-07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 이동은 · 강은정 · 편주현 · 안지연
- 13-08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 · 이승래 · 김혁황 · 강준구
- 13-09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 배찬권 · 선주연 · 김정곤 · 이주미
- 13-10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 문진영 · 김보민 · 이성희 · 김윤옥 · 홍이경 · 이민영

- 13-11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지원 · 서정민 · 문진영 · 송지혜
- 13-12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 정 철 · 박순찬 · 박인원 · 임경수
- 13-13 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정여천 · 제성훈 · 강부균 · 최필수 · 김부용 · 김지연
- 13-14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문익준 · 이혁구 · 전재욱
- 13-15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조영관 · 엄구호 · 강명구
- 13-16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경협 방향 / 정형곤 · 이유진 · 안병민
- 13-17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 양평섭 · 나수엽 · 남수중 · 이상훈 · 이혁구 · 유효림 · 조현준 · 최의현 · 장영석
- 13-18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 문익준 · 정지현 · 나수엽 · 박현정 · 이효진
- 13-19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 최필수 · 박영호 · 권기수 · 정재완 · 이효진
- 13-20 중국의 채권·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문익준 · 양다영 · 허 인
- 13-21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 양평섭 · 정지현 · 노수연 · 김부용 · 박현정 · 임민경 · 오종혁 · 김홍원 · 박진희 · 이상희
- 13-22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 김태윤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금 · 박나리 · 김유미
- 13-23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 김규관 · 이형근 · 김은지 · 서영경
- 13-24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방안 연구 / 강유덕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 김준엽
- 13-25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 이 용 · 송영철 · 초충제 · 최윤정

- 13-26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 이권형 ·곽성일 ·박재은 ·손성현
- 13-27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 박영호 ·장종문 ·전혜린 ·김영기
- 13-28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임태균

## 이장규(李章揆)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선임연구위원  
(現, E-mail: cklee57@kiep.go.kr)

### 저서 및 논문

『중국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1, 2, 3)』 (공저, 2009)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공저, 2014) 외

## 김부용(金芙蓉)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2010~2015. 8)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조교수  
(現, E-mail: furongjin@inu.ac.kr)

### 저서 및 논문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공저, 2013)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공저, 2014) 외

## 최필수(崔弼洙)

중국 칭화대학교 경영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現, E-mail: ccppss@gmail.com)

### 저서 및 논문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공저, 2013)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공저, 2014) 외

## 나수엽(羅秀燁)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syna@kiep.go.kr)

### 저서 및 논문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공저, 2013)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공저, 2014) 외

## 김영선(金英宣)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국제학(중국어)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연구원  
(現, E-mail: youngsun@kiep.go.kr)

### 저서 및 논문

『중국 리스크와 한국의 대응방향』 (공저, 2015)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공저, 2015) 외

## 조고운(趙高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중국지역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연구원  
(現, E-mail: kucho@kiep.go.kr)

### 저서 및 논문

『중국 리스크와 한국의 대응방향』 (공저, 2015)  
『2015 중국 전인대에 나타난 경제 운용 방향』 (공저, 2015) 외

## 이효진(李曉珍)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연구원  
(現, E-mail: hyojinlee@kiep.go.kr)

### 저서 및 논문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공저, 2013)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공저, 2014) 외

연구보고서 15-10

##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

2015년 12월 24일 인쇄

2015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이일형**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화: 044-414-1114 FAX: 044-414-1122, 1199

**인쇄** 오름(주) 전화 02-2273-7011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

ISBN 978-89-322-1570-9 94320      정가 10,000원  
978-89-322-1072-8(세트)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 회원특권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I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인회원 <input type="checkbox"/>		
연구자회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특기사항



## Study on China's Consumption Based Growth Strategy

LEE Chang-Kyu, Furong Jin, CHOI Pil Soo, NA Su Yeob,  
KIM Youngsun, CHO Ko Un, and LEE Hyo Jin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가처분소득과 소비 증가세는 오히려 둔화되고 있으며, GDP 대비 소비 비중도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소비촉진정책을 평가하고 중국 성별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의 소비가 부진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뉴노멀 시대' 우리의 대중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